

[동학농민혁명 특별기획 심포지움]

역사교과서의 동학농민혁명 서술, 어떻게 할 것인가

주최_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한국근현대사학회

후원_  문화체육관광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한국근현대사학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KM0000005083

역사교과서의 동학농민혁명 서술,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11년 11월 21일(월) 오후 1시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주최_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한국근현대사학회

후원_  문화체육관광부

학술대회 일정

13:30~13:50	개회식 1. 대회사 : 김영석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2. 기념사 : 김희곤 (한국근현대사학회 회장) 3. 축사 : 박순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장)
13:50~15:10	1부 발표 사회 : 최기영 (서강대 교수) 1. 한국근대사 서술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위상 발표 : 조 광 (고려대 명예교수) 토론 : 이영호 (인하대 교수) 2.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왜 '혁명' 인가 발표 : 박맹수 (원광대 교수) 토론 : 조재곤 (동국대 연구교수)
15:10~15:20	휴식
15:20~17:20	2부 발표 사회 : 김용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수석연구위원) 3.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 검토 발표 : 김양식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김태웅 (서울대 교수) 4. 동학농민혁명 관련 역사교과서 서술 방향의 새로운 모색 발표 : 배항섭 (성균관대 교수) 토론 : 이상찬 (서울대 교수) 5. 일본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 서술 검토 발표 : 최덕수 (고려대 교수) 토론 : 방광석 (인천대 연구교수)
17:20~17:30	휴식
17:30~18:30	종합토론 좌장 : 김상기 (충남대 교수)

목차

발표

- 07 한국근대사 서술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위상
- 조 광 (고려대 명예교수)

토론

- 24 「한국근대사 서술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에 대한 토론
- 이영호 (인하대 교수)

발표

- 25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왜 '혁명'인가
- 박맹수 (원광대 교수)

토론

- 51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왜 '혁명'인가」에 대한 토론
- 조재곤 (동국대 연구교수)

발표

- 55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 검토
- 김양식 (충북발전연구원 충북학연구소장)

토론

- 80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 검토」에 대한 토론
- 김태웅 (서울대 교수)

발표

- 83 동학농민혁명 관련 역사교과서 서술 방향의 새로운 모색
- 배항섭 (성균관대 교수)

토론

- 100 「동학농민혁명 관련 역사교과서 서술 방향의 새로운 모색」에 대한 토론
- 이상찬 (서울대 교수)

발표

- 103 일본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 서술 검토
- 최덕수 (고려대 교수)

토론

- 115 「일본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 서술 검토」에 대한 토론
- 방광석 (인천대 연구교수)

한국근대사
서술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위상



조 광

고려대 명예교수





한국근대사 서술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위상

- '동학농민혁명' 이해의 심화를 위한 시론 -

조 광 고려대 명예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연구 사료 상의 문제
- III. 역사 해석 상의 문제
- IV. 역사 교육 상의 문제
- V. 맺음말

1. 들어가는 말

한국사 서술과정에서 근현대사 연구는 20세기의 70년대 이후 급속한 발전을 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동학 내지는 1894년의 '동학혁명'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이 대사는 '불평등·부자유의 세상을 대평등·대자유의 세상으로 만들려는 민중운동'이며,¹⁾ "조선후기 농민항쟁을 통해서 성장한 농민대중이 동학의 조직을 이용하여 자본주의 열강의 침략을 물리치려 한 대규모의 반봉건·반침략투쟁"으로 규정되었다.²⁾ 더 나아가서 이 대사는 '민족해방의 주체세력으로서 민중이 민족으로 결집하는 효시'가 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했다.³⁾

그러나 그 연구사적 궤적을 살펴보면, '동학농민혁명'은 일찍이 조선후기 농민반란의 전통을 이어받은 민란 내지 정통 정권에 대한 반란이라는 이해되어 오기도 했다. 이 입장에서 이 사건은 '동학란(東學亂)'으로 규정되었고, 이 사건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동비(東匪)나 폭도(暴徒)로 지칭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식민지시대에 들어와서 근대적 학문연구방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었다.⁴⁾ 그리고 해외의 독립운동자/역사연구자들도 이를

1) 오지영, 1938, 『동학사』, 영창서관

2) 한국사연구회, 『한국역사』, 1992, 역사비평, 225쪽.

3) 정창렬, 『동학과 농민전쟁』 『한국사연구입문』, 1981, 지식산업사.

4) 김상기는 1930년대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동학에 관한 글들을 모아서 『동학과 동학란』을 간행했다.

“봉건제도 아래 신음하던 농민대중의 계급투쟁이며 외국세력까지 구축하려는 투쟁” 즉 반봉건 투쟁이며 반제국주의투쟁으로 규정하여 여기에서 독립운동의 원동력을 얻고자 하기도 했다.⁵⁾ 그 이후 해방과 4·19혁명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의미부여 작업과 연구가 더욱 진전되어 갔다.

특히, 일단의 한국근대사 연구자들은 1994년에 맞게 될 '동학농민운동 100주년'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광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한 노력을 전개했고, 이와 병행하여 '동학농민혁명' 및 그와 관련된 사건과 인접한 시기의 역사상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긍정적 발전적 진보적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 대사건이 농민전쟁론의 입장에서 '반봉건·반침략의 전쟁'으로 보는 관점이 강화되어 가면서 상대적으로 동학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점차 축소, 제한되어 가기도 했다.⁶⁾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에 따라 이 1894년의 '대사건'은 사건 주체(동학도, 농민, 민중), 사건성격이나 역사적 기능에 대한 인식(반란, 봉기, 전쟁, 운동, 혁명), 발생시기(갑오, 1894년) 등의 조합에 따라 각기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어졌다. 이 명칭의 다양성은 역사해석의 다양성에서 나오게 된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최근 21세기에 접어들어 이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심화되어 갔다. 그 결과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설립되고, 관계법령이 만들어졌다. 민족의 과거사에 대한 화해의 일환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에 대한 재평가 작업도 진행된 바 있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이 한국근대사에서 차지하는 당연한 위상을 규정하기 위한 시도도 강화되었다.

이와 같이 '동학농민혁명'은 “조선왕조 봉건사회의 해체와 일본자본주의에 의한 조선의 식민지하, 그리고 민족해방의 담당주체로서의 민중의 민족적 결집 등의 중요한 계기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한국근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기존의 해석에 이의를 제공하는 연구자가 나오게 되었으며, 역사교육의 현장에 있어서도 일부 문제점들이 노출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하는 데에 주요 사료로 평가받아왔던 오지영의 『동학사』에 대한 재음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료의 활용과 관련된 몇 가지의 의견 및 '동학농민혁명'의 연구과정에서 음미할 수 있는 해석상의 문제에 대한 줄거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에 이어서 역사교육 현장에서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교과서의 서술 내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5) 桂奉瑀, 「東學黨暴動」, 1932, ;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1995 『韓國學研究』 6.

6) 고석규, 1996, 「1984년 농민전쟁」, 『한국역사연구입문』 ③

7) 정창렬, 1987, 1987, 『한국사연구입문』 제2판(한국사연구회편), 지식산업사, 433쪽.



2. 연구 사료상의 문제

사료 없이는 역사가 없다. 모든 역사 연구는 사료를 기초로 한다. 동학 내지 동학농민전쟁의 연구과정에서 일반 사학도가 경험하게 되는 당혹감 가운데 일부로는 그 사료에 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1) 오지영, 『동학사』의 사료적 가치 검토

동학교단의 초기 역사와 동학농민전쟁을 밝히는 과정에서 오지영의 『동학사』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이 『동학사』는 지난날 상당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동학·천도교 교단 측뿐만 아니라 김상기(金庠基)와 같은 동학에 관한 초기의 연구자는 『동학사』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다. 반면에 이 사료의 가치에 의문을 표하는 논문들도 간행되고 있었다.⁸⁾ 그리고 해방 이후의 연구자들도 이 자료를 다른 문헌자료들과 함께 활용하며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과 그 성격을 규정하기도 했다.⁹⁾

그러다가 『동학사』의 초판본 표지에 병기된 『역사소설 동학사』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어 제기된 일련의 반론이 전개된 바도 있었다.¹⁰⁾ 이 과정에서 『동학사』는 역사서가 아닌 역사문학인 historical novel로 자신 있게 규정되었다. 그리고 이 저서가 가지고 있는 이 사료로서의 성격을 거의 부정했고, 나아가서 '동학농민혁명'은 '보수적 의거'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당연한 결과로 이 『동학사』에서 언급된 '폐정개혁인'이나 '평균분작'과 같은 사건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거나 부정하기도 했다. 그리고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글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글들이 표방했던 실증적 역사 연구를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¹¹⁾

이 과정을 거쳐 일부 연구자들은 『동학사』가 가지고 있는 사료로서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고, 인쇄본 『동학사』뿐만 아니라 『초고본 동학사』가 검토대상이 되었다. 즉, 오지영의 『동학사』는 1926년경에 초고본이 집필되었고, 1940년에 간행되었음이 밝혀졌고, 이 초고본과 간행본 사이에는 50여개의 항목에 걸쳐 출입이동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¹²⁾ 이는 '동학농민혁명'의 실체에 접근해보고자 노력하던 학계의 상황을 드러내 준 업적들이었다.¹³⁾

8) 山邊健太郎, 「甲午政變と東學の亂」, 『世界の歴史』 11, 1961, 筑摩書房, 278쪽.

9) 신용하, 「갑오농민전쟁 시기의 농민집강소의 활동」, 『한국문화』 6, 1985.

10) 유영익, 「동학농민봉기는 보수지향적 의거였다」, 『한국논단』 62-1, 1994.

유영익, 「보수적 개혁가·의병장 전봉준론」, 『근현대사강좌』 5, 1994.

柳永益, 「甲午農民蜂起의 保守的 性格」, 『한국정치외교사논총』 12, 1995.3

柳永益, 「學術集談會 要旨」 갑오농민 봉기의 재평가, 『아시아문화』 10, 1994.

11) 이현희, 「서평: 전봉준의 평가와 '동학사'의 해석문제」, 『한국사논총』 7, 315쪽.

12) 노용필, 「오지영의 인물과 저작물」, 『동아연구』 19, 1989, 서강대 동아연구소; 노용필, 「『동학사』와 집강소 연구」, 2001, 국학자료원, 36-38쪽 참조; 김태웅, 「1920·30년대 오지영의 활동과 『동학사』 간행」, 『역사연구』 2, 1993, 99쪽, 102~110쪽 참조.

13) 노용필, 「오지영의 인물과 저작물」, 『동아연구』 19, 1989, 서강대 동아연구소.

그런데 『동학사』와 관련된 사료비판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역사소설 동학사』라는 제목부터 검토·비판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즉, 무엇보다도 먼저 오지영이 의도했던 ‘소설’이 가지고 있던 개념과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소설’이란 개념의 동일성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검토가 없이 『역사소설 동학사』의 뜻을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소설’이란 단어에 관한 상식 수준의 지식에 기초하여 이를 비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역사소설’이란 개념만을 분석해 봄으로써 이 자료가 가지고 있는 사료적 가치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소설’의 의미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한자문화권에서 통용되어 왔던 ‘소설’의 개념에 대한 학인이 요청된다. 왜냐하면, 오지영은 한자문화에 속했고, 신학(新學)이 아닌 구학(舊學)을 했던 지식인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구학(舊學) 즉 한자문화권에서 말하는 소설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글에서 확인된다. 우선 『한서』 「예문지」에 기록된 소설 내지 소설가의 개념을 들 수 있다.

a-1 : 소설가의 부류는 대개 패관에서 나왔으며, 항간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나, 길거리에서 들리거나 말해지는 것으로 만들었다. 공자가 말하기를, 소설은 “비록 보잘 것 없기는 하지만, 거기엔 반드시 불만한 것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인용한다면 혼란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여 이로 말미암아 군자들은 모두 서설을 쓰려 하지 않았다.¹⁴⁾

a-2 소설은 항간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다. 좌전(左傳)에는 마부의訟을 실었고, 시경(詩經)에는 초부(樵夫)에게 물었음을 아름답게 여겼으니.....이른 봄이면 목탁을 치면서 (돌아다니며) 시가와 노래를 수집했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며 살피며, 백성들의 詩歌를 보아서 풍속을 알게 되어,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고, 실수가 있으면 고쳤으니, (항간의 이야기를) 모두 다 기록했다. 주례(周禮)에 (나오는 관직인) 송훈(誦訓)은 사방을 다니며 자신이 본 바를 제왕에게 아뢰를 목적으로 삼았으며, (제왕에게) 사방의 백성들이 싫어하거나 꺼리는 바를 진술하여 (제왕이 이를) 피하게 했다.¹⁵⁾

한편, 청대(清代) 기윤(紀昀, 1724-1805)의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자부』(子部) 안에 유가(儒家), 도가(道家) 등과 함께 소설가(小說家)를 별도로 설정하였고, 다시 이를 잡사지속(雜事之屬), 이문지속(異聞之屬), 쇠어지속(瑣語之屬)으로 나누었다.¹⁶⁾ 물론 여기에는 나관중의 『삼국지연의』와 같은 문학작품은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다. 이렇게 소설가가 정사

14) 『漢書』 「藝文志」, ‘小說家者類 蓋出於稗官 街談巷語 道廡塗說者之所造也 孔子曰 雖小道 必有可觀者焉 致遠恐泥 是以君子弗爲也’ ; 魯迅著, 丁範鎮譯, 『中國小說史略』, 2003, 學研社, 13쪽, 104

15) 『隋書』 「經籍志」, ‘街談巷語之說 傳載輿人之訟 詩美徇于芻蕘...孟春 徇木鐸以求歌謠 巡省 觀人詩以知風俗 過則正之 失則改之 道廡塗說 靡不畢記 周關誦訓掌道方志 以詔觀事 道方匱 以詔避忌’ ; 魯迅著, 丁範鎮譯, 『中國小說史略』, 2003, 學研社, 14쪽.

16) 紀昀, 『四庫全書總目提要』 「子部」 ‘小說家’



(正史)를 비롯한 본격적인 역사서들로 채워져 있던 사부(史部)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야사(野史)들이 포함되어 있는 자부에 편입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사고전서총목제요』를 편찬한 기윤의 경우에 있어서도 ‘소설’은 분명히 문학으로서의 ‘소설’과 구별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청대까지도 소설의 제1개념은 ‘야사’를 말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은 한자문명권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 전통이 조선시대 말까지도 조선에서 강하게 통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역사소설 동학사』에서 ‘역사소설’의 의미는 ‘역사이되 정사가 아닌 야사’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었다.

그러나 시대의 경과에 따라 소설의 개념에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 작성된 가공의 작품이란 의미가 점차 강하게 제시되기에 이르렀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뜻이 오히려 소설의 제1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 결과로 오지영의 『역사소설 동학사』는 ‘역사문학작품’으로 오해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즉, 다시 말하자면, 오지영의 책에 나타난 『역사소설 동학사』에서 소설의 개념은 ‘픽션’이 아니라 당시 향간에서 회자되던 구체적 사건들을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고대의 소설가(小說家)가 구체적 사실을 기록하여 감계로 삼았던 바와 같이 자신이 체험하거나 전문(傳聞)한 내용을 『역사소설 동학사』에 기록했다.

물론, 우리는 『동학사』가 간행되던 당시의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던 소설이란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 당시의 ‘소설’이란 개념은 동시대에 간행되었던 사서(辭書)의 내용을 통해서 일차 확인할 수 있다. 『동학사』가 간행되던 당시에 통용되던 사전으로는 1920년 조선총독부에서 편찬 간행한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이 있다. 그리고 식민지 시대 조선인이 지은 유일한 조선어 사전으로는 1938년에 간행된 문세영의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이 있었다. 여기에서 ‘소설’은 다음과 같이 풀이되어 있다.

b-1. 小說(소설): [名] ⊖ 事實を構造して世態・人情を寫せろ文. (稗說). ⊖ 「소설책」(소설책)의 略¹⁷⁾

b-2. 소설(小說): [名] ⊖ 작자의 사상대로 사실을 구조 또는 부연하여 인정세태를 묘사한 산문체(散文體)의 이야기. 稗說. ⊖ 「소설책」(小說冊)의 준말.¹⁸⁾

즉,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a-1의 자료나 문세영이 지은 a-2의 자료 모두에서 이는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설을 문학작품의 일종으로 해석했다. 물론 당시 이 두 사전은 소설을

17) 朝鮮總督府 編, 『朝鮮語辭典』, 朝鮮總督府, 1920, 508쪽.

18) 文世榮 著, 『朝鮮語辭典』, 博文書館, 1938, 818쪽.

문학의 한 장르로 본 해설에 이어서 패설(稗說)이라는 단어를 병기하고 있다. 그리고 위의 두 사전에서는 이 ‘패설’이라는 단어를 해설하기를 “소설과 같다”고 되어 있다.¹⁹⁾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패설은 ‘소설’의 고대적 개념이었지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문학의 장르 가운데 하나를 뜻하는 단어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확인되는 비는 ‘소설’이 ‘패설’과 동일한 의미의 단어로 식민지 시대에까지도 인정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원래 한자어에서 패설(稗說)이라 할 때는 “가설항담(街說巷談)이나 기담이문(奇談異聞)과 같이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의미하거나 야사(野史)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패사(稗史), 쇄어(瑣語)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 패설, 쇄어를 집대성한 『패림』(稗林)은 오늘날의 ‘소설문학총서’(collections of historical novel)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야사(野史)의 집대성’이라는 뜻이었다.

조선후기의 야사를 집대성한 책으로는 『패림』(稗林) 내지 『대동패림』(大東稗林)과 같은 도서가 있다. 이 책에는 전통적 의미의 ‘소설’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며, 이러한 자료들은 조선시대의 사회상이나 중요한 정치적 사건의 이면을 알려주는 데에는 정사(正史)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과 같은 전근대 시대의 야사(野史)들은 정부 기관이 편찬하지 아니하고, 민간에서 선비들이 편찬한 역사를 의미하며, 사랑방 한담에 지나지 않는 야담(野談)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존재였다. 따라서 당연히 야사는 정사와 함께 당시인의 역사와 그 인식을 이해하는 주요 사료로 파악되고 있다.

이점을 감안한다면, 오지영이 쓴 『역사소설 동학사』 결코 역사문학을 의미하는 ‘소설’(historical novel)이 아니었다. 그리고 오지영의 『歷史小說 東學史』에서 나오는 ‘소설’이라는 단어는 야사(野史)를 뜻하는 ‘패설’의 의미였지, 문학작품의 일종인 ‘역사소설’(historical novel)이라고 볼 수 없다. 이 후자와 같은 해석은 전통문화에 대한 몰이해의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역사소설 동학사』라는 표지를 근거로 한 주장은 실증적 역사연구가 아니라 전통문화에 대한 무지의 소산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오지영은 신학(新學)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살았던 구학(舊學)을 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에도 『야사』 『패설』 『쇄어』와 같은 자료들이 계속 정리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소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인물이다. 한편, 오지영은 신학(新學)이 지배하고 있던 현대사회에 살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구학(舊學)에서 제시되고 있던 소설 개념뿐만 아니라 신학의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소설’의 개념도 함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그의 시대를 전제로 하여 그가 의도했던 ‘소설’의 개념에 대한 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해 보면, 그는 어쩌면 자신의 저서에 기록한 ‘역사소설’이란 말이 이중적 의미를 가진 단어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그는 여기에서 『역사소설 동학사』라는 제목



은 '전통적 역사기록방법으로 서술한 동학사'라는 의미와 함께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소설(novel)로 이해될 수도 있는 제목이었음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오지영은 이 '역사소설'이라는 단어를 구학적(舊學的) 의미로 사용하면서, 총독부당국의 검열관이 신학적(新學的) 소설 즉 픽션(fiction, novel)이라고 잘못 인식하도록 함정을 팠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추정은 이 책이 간행되던 1940년 당시 일제의 식민지 지배양식이나 출판 상황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그 추정이 가능하다. 1940년 당시는 대동아전쟁을 일으킨 일제에 의해 한반도에서 전시체제가 강화되고 있었고, 사상통제의 일환으로 조선인이 쓴 조선에 관한 도서들의 간행이 규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학사가 간행되었다. 더욱이 이 책의 간행에는 오지영을 감시하다가 그의 인격에 감복하게 된 형사가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후일담도 있다.²⁰⁾ 이러한 과정에서 오지영은 이중적의미의 단어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후일 이 책이 판을 거듭하면서 책의 출판에 관여했던 천도교단측 인사들은, '소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가 사어화(死語化)한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동학사』라는 제명으로 출간했다고 판단된다.

오지영의 『역사소설 동학사』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있었고,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 제목이 다시 『동학사』로 조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동학사』는 야사의 일종이므로 그 충분한 사료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사료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통시대의 야사(野史)를 비롯한 모든 역사기록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사료비판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동학사의 전체 내용을 일자일획도 틀림이 없다는 식으로 경전(經傳)처럼 맹신할 수는 없다. 또한 동시에 소설이므로 그 사료가치를 전반적으로 부정하거나 낮추 평가해야 한다고 하는 우(愚)를 범해서도 안된다. 그리고 그동안 의심되거나 부정되어 왔던 폐정개혁안의 평균분작(平均分作)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²¹⁾ 『동학사』의 여러 사항들에 대한 부정적 이해는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²²⁾

2) 동학관계 자료의 정리

한편, 동학사 내지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기록들을 접하다 보면, 사료정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혁명관계 자료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경전들의 경우에도 정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경전(經傳)의 경우에는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들 수 있고, 오늘날의 천도교단에서 간행한

20) 노용필, 앞의 논문.

21) 배항섭, 「1894년 동학농민전쟁에 나타난 토지개혁구상-평균분작문제를 중심으로-」, 『사총』 43, 1994. ; 배항섭, 「근대이행기 의민중의 식: '근대'와 '빈근대' 의너머-토지소유 및 매매관습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23, 2010 등을 참조하면, 평균분작에 대한 현재 학계의 견해를 정확히 알 수 있다.

22) 이. 김태웅, 위의 논문, 115쪽. 그도 여기에서 동학사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 자료를 정경(正經)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현행본 ‘정경’이 확정된 과정에 대해서 필자는 과문의 소치로 인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사실, 천도교단 간행 현행본을 각처에 산재되어 현존하는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의 각종 사본들과 비교할 때 출입이동(出入異同)이 확인된다.

그리고 ‘논학문’을 비롯해서 각종 경문들을 장과 절로 나누는 작업도 요청되고 있다. 현대의 학문은 분석을 전제로 한다. 분석적 학문을 위해서는 자료인용에 있어서도 정확성과 편리함이 있어야 한다. 현재로는 논문을 집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전을 인용할 때면, ‘논학문’ 등 경전명만 기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긴 경전의 대부분을 읽어야 그 전거를 찾을 수 있다면, 이는 연구자나 천도교도 모두에게 불편한 일일 것이다.

한편, 정경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차체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보건대, 불교의 경전에는 경(經), 론(論), 소(疏) 등 여러 단계의 기록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경전에도 교조(敎祖)의 언행을 직접 기록한 부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도(使徒)들이 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교조 최제우(崔濟愚)의 문자나 그밖에 『도원기서』 등과 같은 자료는 경전적 의미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경전을 확정하기 위한 정경화 작업의 진행과정에서는 그 경전의 범위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관계 사료들은 지난 100주년 기념을 계기로 하여 다수 수집 간행되었다. 그러나 이 자료를 안심하고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탈초와 주석 그리고 번역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 작업은 혁명과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혁명에 투영된 동학사상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요청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성경의 경우에는 13세기 전후에 이르러 장절(章節)을 확정된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를 적용한 성경의 출판이 이루어진 시기는 16세기 중엽부터 였다. 이 점을 감안하자면,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의 장절을 확정하는 작업을 지금 착수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코 늦게 시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작업은 천도교단의 편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연구자들의 정확한 논문전거 제시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일이다. 그리고 이 작업은 책임 있는 연구기관에 의해서 전문학자들의 집체적 노력으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일이다.

요컨대, 본장에서는 사료론의 입장에서 먼저 오지영이 지은 『역사소설 동학사』는 사료로서의 가치 내지 연구서로서의 가치를 검토했고, 그 결과 그것의 사료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이 저서의 사료가치를 부인하여 얻어진 결론인 1894년의 대사건을 ‘보수적 의거’ 정도로 보아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의문을 표현하고자 했다. 또한 이에 이어서 동학·천도교 관계 사료의 정리에 대한 제안을 시도했다.



3. 역사 해석상의 문제

한국사에서 ‘동학농민혁명’ 만큼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역사용어는 없다. 여기에는 사건의 주체와 지향점 그리고 역사적 의의에 대한 해석이 연구자에 따라 각각 달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 다양한 역사 해석들이 오늘날 연구자 사이에서 어떤 합의에 도달했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 ‘동학농민혁명’ 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그 다양한 이견들은 이 대사건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분명하다.

여기에서 필자는 ‘동학농민혁명’ 의 성격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을 단편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문제점들은 혁명/농민전쟁과 동학의 상관관계에 대한 단상, 이 대사건의 성격 및 이 대사건이 가지고 있는 한국사상사적 의미규정 등이다.

1) 동학외피론

‘동학농민혁명’ 에 대한 초기의 연구에서는 앵겔스의 『독일농민전쟁』과 관련하여 종교외피론을 제기한 바도 있다. 즉 이 이론의 경우에 동학은 그 대사건의 본질과 관련되기 보다는 외피로만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정교분리론 내지는 종교에 대한 19세기적 이론에 입각하여 제시된 지난 세기의 이론일 뿐이라고 생각된다. 동학농민운동, 혁명, 전쟁은 모두 정치적 행위임에 분명하다. 이 정치적 행위의 목적은 전체적 지배에 대한 거부였고, 일종의 이상사회에 대한 추구였다.

오늘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기보다는 구별되는 관계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정치와 종교는 모두 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전개되는 역사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의 경우에도 이상을 현실화시키려는 꾸준한 노력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 점은 종교의 목적과도 통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정치와 종교는 같은 대상과 지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교분리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아니라 구별될 뿐이라고 말한다.

이 이론을 전제로 하여 종교외피론을 검토해보면 이는 적절성을 상실한 이론이 된다. 즉 정치(혹은 경제)를 내핵(內核)으로 하고, 종교를 외피(外皮)로 파악하려는 것은 정교분리론을 전제로 한 이론이다. 정치와 종교는 상호 작용을 한다. 예를 들면, 정치의 특정 목적을 종교가 정당화시키기도 하는데 이때의 종교는 정치와 구별될 수 없는 존재이다. 또한 정치는 종교와 유기적 연결을 가지면서 자신의 영역을 확인해 오고 있다. 이 경우에도 양자의 분리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 입장에서 “동학사상에 있어서 새 나라의 실현을 기하는 혁명적 요소는 농민전쟁이 걸친 종교적 분장 즉 외곽적인 것이 아니라 교리 자체가 혁명의 원리이며 추진력이었느니, 동학사상 없이 동학혁명이 없었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²³⁾ 라는 견해도 수긍되는 바가 있을 것이다.

23) 김용덕, 1964, 『동학사상연구』 『중앙대논문집』 9.

그렇다면 동학농민전쟁에 적용되는 외피론적 시각은 이미 시효가 지난 이론을 적용하려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을 논할 때, 정치와 종교에서 내핵과 외피로의 분리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양자의 결합상을 밝힘이 오히려 더 역사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동학농민혁명’/운동/전쟁을 확고히 바라보려는 시각이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이 종교운동에서 정치운동으로 선명히 전환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재검토해야 될 것이다.

2) 보수적 의거론

일부 연구자는 ‘갑오농민봉기의 보수성’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는 전봉준이 유교적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으며, 그는 ‘사이비 동학도’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갑오농민봉기’가 전개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진보적 개혁성이란 없었다고 단정한다.²⁴⁾ 여기에서 ‘동학농민혁명’론에 대한 반론의 형태를 띠고 ‘보수적 의거론’이 제시되었다.²⁵⁾ 특히 이 견해에서는 오지영의 동학사가 『역사소설 동학사』로 간행되었음을 주목하여 그 사료가치를 다음과 같이 거의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우선 필자는 1894년 농민봉기의 근대성, 진보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금과옥조로 인용하는 오지영의 『역사소설 동학사』는 ‘역사소설’이라는 관식어가 함축하는 바와 같이 저자의 상상력이 가미된 야사류 역사서이기 때문에 참고할 가치가 있으나 그 내용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되는, 말하자면 신빙도가 낮은 B급 사료라고 생각된다. 특히 이 책에 담긴 소위 집강소의 12개조 개혁조건은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을 수 없는 자료이다.²⁶⁾

그리하여 그는 동학농민봉기에서 어떠한 발전적 진보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하는 자료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미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동학사』의 자료는 상당한 신빙도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비단 이 자료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여러 관찬 문서들을 검토해 보더라도 ‘동학농민혁명’이 가지고 있는 진보적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선학들이 평가한 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필자의 입장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24) 유영익, 『동학농민봉기와 갑오개혁』, 1998, 일조각, 178-190쪽 참조

25) 유영익, 「동학농민봉기는 봉수지향의 義擧였다」; 동학지상논쟁, 『한국논단』, 59-62쪽.

26) 유영익, 「동학농민봉기는 봉수지향의 義擧였다」; 동학지상논쟁, 『한국논단』, 60쪽.



3) 사상사적 의미 규정

개항기에 이르러 한국사상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성리학을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삼았던 종래의 사상통제 정책이 포기되고 새롭게 사상의 자유, 종교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조선은 사회진화론이나 그리스도교 신앙과 같은 이질적 요소들이 이제 그 사회를 주도하게 된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바로 이 사상의 자유라는 측면과 '동학농민혁명'의 관계에 대해서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동학은 개항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1892년부터 교조신원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교조신원운동은 '이필제의 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전통사회에서도 제기되었던 문제였다. 그러다가 개항이후에 이르러 동학교문에서는 이를 본격화시켜나갔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조신원운동은 일종의 동학을 위주로 한 '신앙자유운동'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신앙자유운동은 대규모의 농민전쟁으로까지 연결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교조신원운동은 근대사상의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인 신앙자유 문제를 들고 나온 운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자신의 신앙자유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와 사상의 자유까지도 그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 기여한 사건이었다. 예를 들면, 천주교 신앙의 자유가 허용된 시점은 정확히는 1895년을 들 수 있다. 물론 천주교 신앙이 묵인되기 시작한 시점은 1882년이였다. 그리고 1886년 한불조약 상의 교회(敎會)라는 단어를 빌미로 하여 프랑스는 조선에 선교자유를 주장해서 묵인을 얻어내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한 셈이 되었다. 했지만, 당시에 조선인의 천주교 신앙은 엄연히 불법이었다. 그래서 선교사는 천주교를 선교할 자유가 있었지만, 조선인은 천주교를 신앙할 자유를 갖지 못했다.

그러다가 갑오개혁 이후 고종과 천주교 조선교구장 뮈텔(Mutel) 주교의 만남을 통해서 전제군주였던 고종은 천주교를 인정했다. 뮈텔 주교도 고종을 알현한 당일자 일기에서 이를 종교자유 기점으로 보았다. 또한 한국개신교의 경우에도 1895년을 계기로 하여 본격적인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바로 이 해에 불교승려의 도성출입도 허용되었다. 이는 불교신앙에 대한 정부 규제가 포기되었음을 뜻하는 사건이었다. 이 도성출입은 일본인 승려의 건의를 조선정부가 받아들여 이루어진 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천주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종교신앙의 자유를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하기 시작했던 일련의 사건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다. 당시 정부 당국에서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불인정이 대규모의 '반란'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조선정부는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던 모든 종교집단에 대해 그 주장을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94년 당시 동학의 경우에는 이른바 '동학란'의 주체가 되었고, 그 무리들은 '동비(東匪)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당연히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동학의

존재가 국가적 인정을 받게 된 시점은 이보다 후일인 1905년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학도가 큰 역할을 했던 이 대사건을 계기로 하여 조선정부는 종교 신앙의 탄압의 결과를 목격하게 되었고, 이에 종교에 대한 규제정책에 일대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은 사상의 자유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는 데에도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4. ‘동학농민혁명’ 과 역사교육

역사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이며 도구는 교과서를 들 수 있다. 교과서에는 학생들에게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평생을 준비하도록 전달하고 싶어 하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거의 모든 지식을 담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성의 성인들이 후대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많은 규칙과 규범들이 담겨져 있다.²⁷⁾ 그렇다 하더라도 교과서는 일정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고 그것들이 쓰인 민족적 혹은 문화적 배경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²⁸⁾

그러므로 교과서는 당연히 하나의 정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거나 강요하는 도구가 아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과거의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방법을 배우며, 이 과거에 대한 합리적 탐구방법을 사회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일이 역사교과서가 담당해야 할 또다른 지향점이다.

역사교육은 역사해석에 있어서 확일성은 전제적 사회나 전체주의적 사회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역사해석의 다양성은 역사인식의 건강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 해석의 다양성은 사료를 분석한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제시되어야 하며, 단순히 특정 이념의 깃발을 흔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사회의식과 역사의식을 함께 각인시켜 주기 때문이다.²⁹⁾

바로 이와 같은 교과서 관에 입각해서 우리는 오늘날 한국의 중고등학교에서 통용되고 있는 교과서 상의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1) 역사용어의 고정화

역사교과서에 관한 검토과정에서 첫 번째로 봉착하는 문제는 1894년의 대사건에 관한 역사용어가 획일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용어의 획일화 내지 고정화는 역사교육의 검정을 주관하는

27) cf. 팔크 핑엘 저, 한운석 역, 2010, 『교과서연구와 수정에 관한 유네스코 안내서』,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7-8쪽.

28) 핑엘, 위의 책, 39쪽

29) 핑엘, 위의 책, 11쪽.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집필기준’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교과서의 필자들은 일단 검정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집필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 ‘집필기준’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학계의 연구성과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동학의 경우에는 집필기준에 제시된 ‘동학농민운동’은 학계의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전달해 주는 데도 실패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동학농민운동’이란 제목 밑에 농민전쟁론적 서술이 전개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³⁰⁾ 그러한 교과서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제목에 걸맞은 사회운동적 측면에 대한 관심보다는 ‘농민군’, ‘농민봉기’ 등을 키워드로 삼아서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이 전개되던 과정에서 치열하게 일어났던 전투 등을 주목하여 ‘동학농민전쟁론’에 입각한 서술을 시도하면서도 그 제목은 ‘동학농민운동’으로 나타나 있다.³¹⁾

또한 대부분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그 전개과정에서 주요 전투를 주목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청일전쟁을 발단시켰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서술은 오히려 ‘동학농민전쟁’의 제목 밑에서 서술됨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살펴볼 때, 이 사건의 용어를 ‘집필지침’을 통해서 고정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검토가 요청된다. 역사는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오히려 이 다양한 용어를 접하게 함으로써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함을 학생들에게 직접 학습시킴이 더 올바른 방법으로 생각된다. 물론 ‘집필지침’에서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 집필 과정에서 이러한 지침을 실천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면 1894년의 대사건이 좀더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게 허용하는 일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정확성의 보증

역사교과서는 역사연구와 마찬가지로 사실의 정확성을 견지해야 한다. 그러나 간혹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도 역사적 사실과 어긋나는 점들이 산견된다. 예를 들면 ‘인내천’과 관련된 설명이다. 현행 14종의 중고등학교 교과서 가운데 최제우의 동학창도를 설명하거나, ‘동학농민혁명’의 원인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인내천 사상’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문제가 된다. 최제우가 쓴 기록 어디에도 ‘인내천’ 용어가 나타나 있지는 않다. 최제우가 제시했던 동학의 중심개념은 ‘시천주’에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인내천’의 경우에는 동학의 제3대교주인 손병희 단계서 최제우의 사상을 재해석한 결과로 추출된 개념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을 시대착오에 빠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내천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

30) 교육부, 『중등학교 국사교과서』 등 참조.

31) 한철호 등,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컬처그룹 등 참조.



이다.

그밖에도 교과서에서는 동학과 관련된 각종 연대나 시간의 표기에 일관성이 없거나 잘못 기재되어 있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 사실에 관한 오류들은 교과서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부분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만약 교과서의 검정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교과서의 집필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하고, 이에 대한 검정에도 충분한 시간과 연구자를 배정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는 몇 개월 만에 만들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그러나 현정권 하에서 역사교과서는 불과 수개월 안에 집필해야 했고, 그 당연한 결과로 오류가 많은 교과서가 생산될 수밖에 없었다.

3) 필수적 내용의 확인

‘동학농민혁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해석과는 무관하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 예를 들면 남북접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 14종에 이르는 현행본 교과서에서 이 남북접의 구성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교과서는 단 한군데도 없다. 즉, 남북접은 남이나 북이라는 방위에서 유래된 명칭이 아니라, 연원제(淵源制)에 의해서 조직된 것임을 교과서에서 밝혀줄 때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그 올바른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은 전봉준 등 지도부의 체포로 끝난 것은 아니다. 물론 일부 교과서에서는 민보군에 의해서 학살당하던 그들의 실상을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잔존세력들이 의병투쟁이나 활빈당 영학당 등의 투쟁에 참여하고 있음을 밝혀주었다. 이들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구성 사이에 존재하는 일정한 관계도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이 사건이 일단 마무리 된 뒤에도 그 이념과 동력을 이어받은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들의 움직임은 한국사에서 무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행 교과서 대부분에서는 이에 대한 서술이 인색하다.

물론 교과서가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할 수는 없고, 교과서에서 부족한 부분은 역사교사들이 설명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아래 역사교과의 시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역사교사가 비전공자인 경우도 적지 않게 역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올바른 보완 설명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과서의 내용에 필수적 부분은 담겨져 있어야 한다.

5. 맺음말

‘동학농민혁명’은 한국근대사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다방면에 걸쳐 진행되었고, 다양한 역사해석들이 가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필자가 문제 삼고자 하는 바는 우선 기본사료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주제였다. 즉 오지영의 『역사소설



동학사』에 대한 사료비판에 있어서 제일 먼저 시도해야 할 것은 그 제목과 관련된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소설이 가지고 있던 한자문화권에서 통용되던 의미를 밝혀 보고자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소설이란 패설(稗說)이나 패사(稗史)와 동일한 의미였음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동학사의 사료가치를 거의 부정하던 일부 기존 견해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동학자료의 정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거듭 확인해 보고자 했다.

한편, ‘동학농민혁명’의 이해와 관련하여 동학과 농민전쟁/혁명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의견 가운데, 종교외피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간략히 짚고 넘어가보았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을 보수적 의거로 규정하려는 일부 연구자의 시각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문제들과 더불어 ‘동학농민혁명’이 역사교육의 현장에서 서술될 때 봉착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의 발표 내용을 가지고 ‘동학농민혁명’이 근대사 서술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충분히 밝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몇몇의 문제점을 제기함으로써 근대사에서 ‘동학’ 내지 ‘동학농민혁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의 일단을 확인하는 데에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게 된다. 여기에서 제시된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때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위상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하면서 이 발표를 마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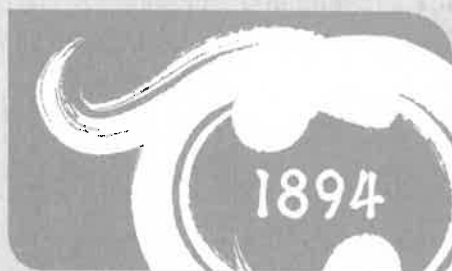


토론

「한국근대사 서술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에 대한 토론문

이영호 인하대 교수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왜
‘혁명(革命)’인가



박맹수

원광대학교 교수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왜 ‘혁명’ 인가*

박맹수 원광대학교 교수

- I. 머리말
- II. 혁명의 어원(語源)과 어의(語義)
- III. 유가(儒家)의 혁명사상
- IV. 동학(東學)의 혁명사상
- V.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나타나는 네 가지 혁명
 - 1) 정치혁명
 - 2) 경제혁명
 - 3) 사회혁명
 - 4) 종교혁명
- VI. 맺음말

I. 머리말

19세기 후반, 동아시아(東亞細亞史)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 가장 빛나는 민중운동 또는 민중혁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동학농민혁명(東學農民革命)’에 대한 호칭은 그것이 일어난 지 1세기도 더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결(未決)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일반 시민들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초중고 역사교과서는 대부분 ‘동학농민운동’이란 용어로 1894년의 역사적 대사건을 ‘규정’ 짓고 있다. 2004년 국회에서 ‘동학농민혁명 참가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그 호칭에 ‘동학농민혁명’이란 용어가 들어가고, 동학관련 단체들 사이에서 ‘동학농민혁명’이란 용어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긴 해도 시민들에게 ‘동학농민혁명’이란 용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하다. 이웃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의

* 이 글은 초중고교 역사교과서 속의 ‘동학농민운동’ 관련 서술에서 그 호칭을 ‘동학농민혁명’으로 개정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학계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미리 밝혀 두는 동시에, 시론적 성격이 강한 글이므로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인용 또는 복사를 금한다.

‘동학농민혁명’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대평천국혁명’이 진즉 혁명(革命)으로 자리매김 된지 이미 오래인데도, 우리는 여전히 1894년의 역사적 대사건에 대해 혁명이란 용어를 붙이는 데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1983년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동학(東學) 및 ‘동학농민혁명’ 연구에만 매달려 왔다. 연구 방법은 현장 답사 및 관련자 구술 증언 청취, 그리고 아직 학계에 소개되지 아니한 원사료(原史料) 즉 1차 사료 발굴을 통한 ‘역사적 사실의 복원’, 즉 실증(實證)에 집중하는 방법을 취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 잡고, 묻혀 있던 원사료들을 대거 발굴하여 학계에 소개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 연구사(研究史)의 획기적 진전뿐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이 한국근대사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근현대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혁명’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지난 30여년에 걸친 연구 과정에서 필자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대사건은 혁명이란 용어를 붙이지 아니하고서는 그 전체상(全體像)과 그것이 지닌 파천황적(破天荒的) 성격, 즉 세계사적 의미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왜 혁명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전면적으로 피력(披瀝)하고자 한다.

글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고대중국(古代中國) 고전(古典) 속에 나타난 혁명(革命)이란 말의 어원(語原)과 그 어의(語義)를 고찰한다. 둘째, 고대중국 고전 속의 ‘혁명’ 사상이 유가(儒家) 등 동양사상 속에서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살핀다. 셋째, 종래의 유불도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도 조선사회가 직면한 대내외적(對內外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愚, 1824-1864, 이하 수운)에 의해 1860년에 창도되는 동학(東學) 사상 속에 내재하고 있는 혁명 사상에 대해 고찰한다. 넷째, 1860년에 창도된 이래 30여년에 걸쳐 조선 각지로 전파된 동학사상 및 동학의 접포(接包) 조직을 기반으로 일어난 1894년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혁명적 양상(樣相),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치(政治)적 측면, 경제(經濟)적 측면, 사회(社會)적 측면, 종교(宗教)적 측면 등 네 가지 국면(局面)에 걸쳐 혁명의 구체적 양상과 내용, 그 성격에 대해 고찰한다. 끝으로 맺음말에서는 이상의 고찰 결과를 토대로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을 명실상부(名實相符)한 혁명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조금도 지체하는 일 없이 초중고 역사교과서 수정작업을 통해 1894년의 역사적 대사건을 ‘동학농민혁명’으로 자리 매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1) 동학 및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필자의 지난 30여년에 걸친 연구 성과는 『개벽의 꿈 동학농민혁명과 제국 일본』(모시는 사람들, 2011)으로 집성된 바 있다.



2. 혁명(革命)의 어원(語源) 및 어의(語義)

1) 혁명이란 말의 어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 일반화되어 있는 혁명(革命)이란 말은 서양에서 수입된 용어가 아니다. 혁명이란 용어는 하(夏)에서 은(殷), 은에서 다시 주(周)로 왕조가 교체되던 고대중국(古代中國)의 이른바 ‘은주혁명(殷周革命)’ 기에 이미 확립된 개념이었다. 그 구체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고딕 및 번역은 필자)

(1) 天地革而四時成° 湯武革命° 順乎天而應乎人° 革之時大矣哉°

(『周易』 64卦 중 革卦의 ‘彖傳’)

천지가 바뀌어 사시(四時; 춘하추동)를 이룬다. 탕(湯)에서 무(武)로 명(命)을 바꾼 것은 하늘(天)에 따르고, 인민의 마음(人)에 응한 것이다. 그것(=命)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이다.

위 (1)의 내용을 보면, 우선 자연계의 모든 사물은 침체되어 움직이지 않게 되면 부패하는 법이며, 이것을 바꾸었을 때 즉, ‘혁명(革命)’ 을 하였을 때 비로소 새로워진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주역』 서괘(序卦)의 전(傳)에서도 설명되고 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천지의 자연현상이 바뀌어 사시(四時)가 순서를 따라 그 공(功)을 이루게 되는 것은 바로 낡은 것이 새로운 것으로 ‘혁명’ 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사회 현상에 있어서도 낡고 부패한 것을 ‘혁명’ 하여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즉, 위에 인용한 내용 가운데 앞부분인 “천지가 바뀌어(=革하여) 사시(四時)를 이룬다”는 것은 자연계의 이치에 따른 당연한 ‘혁명’ 을 말한 것이요, 뒷부분인 “탕(湯)에서 무(武)로 명(命)을 바꾼 것(=革命한 것)은 하늘에 따르고 인민의 마음에 응한 것이다”라는 내용은 자연계의 ‘혁명’ 처럼 사회 현상에 있어서의 ‘혁명’ 도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위 내용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적어도 고대중국 사상 속에서는 **혁명을 자연계에 있어서나, 사회 현상에 있어서나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2) 殷革夏命(『書經』, 多士篇)

은(殷)이 하(夏)의 명(命)을 바꾸었다.

다음으로 위에 인용한 (2)의 내용은 육경(六經) 가운데 하나인 『서경(書經)』에 나오는 것으로 써, 고대중국의 이른바 ‘은주혁명(殷周革命)’ 기, 즉 하(夏)에서 은(殷)으로, 다시 은(殷)에서 주(周)로 왕조가 바뀌는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서경』에서는 왕조의 교체, 다시 말해 지배 권력의 교체를 일러 혁명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지배 권력의 교체를 대표하는 ‘은주혁명’에 대해 아래 (3)의 내용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3) 皇天上帝改厥元子 茲大國殷之命(『書經』, 召誥篇)

황천(皇天)의 상제(上帝)가 그 원자(元子; 태자)를 바꾸었으니, 이것은 바로 대국(大國) 은(殷)의 명(命)을 바꾼 것이다.

위의 내용은 『서경』 소고편(召誥篇)에서 인용한 것인데, 이 소고편은 『서경』의 여러 편 가운데서도 비교적 아주 이른 시기인 주(周) 나라 초기에 성립된 문헌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그런데 이렇게 주초(周初)에 성립된 『서경』의 여러 편(召誥, 大誥, 康誥 편 등등)에 공통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天)의 명(命)의 수수(授受)에 따른 지배 권력의 교체=왕조 교체를 혁명이라고 명명하여 정당화하고 있는 내용이다. 위 (3)에 인용한 내용이 바로 그 대표적인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위 (3)의 내용은 주(周)의 소공(召公)이 말한 내용으로, 황천의 상제가 은(殷)의 원자(元子), 즉 태자인 은왕(殷王)의 명을 바꾸어(=혁명하여) 주왕(周王)에서 새로운 명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은왕인 주(紂)의 학정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하늘(天)에 호소하고, 하늘 또한 학정에 시달리는 사방(四方)의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은왕의 명을 바꾸어 주왕에게 그것을 주었는데, 주왕에게 새로운 명을 내린 것은 주왕이 정치에 온 힘을 다해 노력하였기 때문, 즉 ‘안민(安民)’에 힘썼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의 (2)와 (3)의 내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배 권력의 교체, 즉 왕조의 교체를 의미하는 ‘혁명(革命)’의 기준이 바로 “안민(安民)을 근간으로 하는 하늘의 명(天命)의 이행에 있다는 점이다.**

2) 혁명이란 말이 품고 있는 어의

앞 절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하은주 삼대(三代)부터 이미 사용이 일반화된 ‘혁(革)’이란 글자에는 자연 현상에 있어서나, 사회 현상 즉 인간 세계에 있어서나 ‘혁(革)하는 것’을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였던 고대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이 잘 드러나 있다. ‘혁’에 대한 이 같은 사고방식은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대중국의 주초(周初)에 쓰여진 『서경』 제편(諸篇) 및 『주역』(『易經』) 속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는 우선 주초에 쓰여진 기록들 속



에 나타나는 ‘혁’에 관한 사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겠다.

『주역』은 ‘혁(革; 바뀌는 것)’에 의해 자연 현상에 사시의 순환 즉 춘하추동이 있는 것과 같이 사회 현상 즉 인간 세계에 있어서도 ‘혁’이 일어나기는 마찬가지라 보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다. 인간 세계의 ‘혁’에 대해 풀어서 설명하자면, 은(殷)이 하(夏)를 ‘혁(革)’하여 멸망시킨 다음에 하의 명(命)을 대신하고, 또 다시 주(周)가 은(殷)을 ‘혁’하여 멸망시킨 다음 은의 명(命)을 대신한 것과 같은 지배 권력의 교체=정치혁명(政治革命) 또한 자연의 이법이 ‘혁’하여 사시가 순환하는 것처럼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 현상 즉 인간 세계에 있어서의 ‘혁’ 즉 ‘명을 바꾸는=혁명(革命)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일정한 자질을 갖춘 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보았다는 점이 주목을 요한다. 혁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 『서경』은 ‘혁명’을 할 수 있는 자는 ‘하늘의 명(天命)을 바르게 아는 자’라야 하며, 그 하늘의 명이란 바로 ‘안민(安民)’에 있다고 보았다. 즉, 하에서 은으로, 은에서 다시 주로 왕조가 바뀔 결정적 이유는 바로 하늘의 명인 ‘안민’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명을 바꾸어=혁명을 하여 새로운 왕조를 세울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 ‘안민’이라는 천명을 잘 수행하는 자에 의해 새로운 왕조가 수립되는 것을 ‘혁명’이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주권자(主權者)가 갑(甲)이라는 성을 가진 자로부터 을(乙)이라는 성을 가진 자로 바뀌는, 다시 말해 단순한 지배 권력의 교체=왕조교체에 지나지 않는 ‘역성혁명(易姓革命)’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일견(一見) 타당한 측면이 있다. 특히 ‘혁명’이란 말에만 구애(拘碍)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앞 절에서 제시한 바 있는 『주역』전체의 구조 속에서 ‘혁괘(革卦)가 차지하고 있는 의미를 고려한다면 고대중국에서 강조되어 온 ‘혁명’의 의미를 단순히 역성혁명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²⁾ 왜냐하면, 사시의 순환이라는 것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혁(革)’의 현상 가운데 하나의 사례(事例)에 지나지 않듯이, ‘역성혁명’ 또한 사회 현상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혁명’의 양상 가운데 하나의 사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대 중국의 제 문헌 속에 나타나는 혁명의 진정한 의미는 사회 현상에 있어 그저 주권자인 인물이나 지배왕조의 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달리 말하자면 역성혁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政道)의 본질 즉 정치 구조와 그 내용 자체가 바뀌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 낡고 오래되어 문제가 많은 사회조직(社會組織)을 혁신하여 참신한 사회조직으로 바꾸는 것까지를 포괄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약하자면, ‘혁명’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주권자의 교체, 또는 지배 권력의 교체(=역성혁명)라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주역』의 혁괘(革卦)나 『서경』 제편 속에 나타나는 ‘혁명’

2) 小島祐馬, 『中國の革命思想』(筑馬書房, 1967); 平石直昭, 『一語の辭典 天』(三省堂, 1996) 참조.



이라는 말을 분석하면 그 속에는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정치혁명 및 사회혁명의 모든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유가(儒家)의 혁명 사상

1) 은주혁명기의 혁명이념

앞 장(章)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중국 역사에서 ‘혁명’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큰 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은 주(周) 나라가 은(殷)을 멸망시켰을 때, 즉 이른바 ‘은주혁명(殷周革命)’ 기로 불리는 상고(上古) 시대부터이다. 그 구체적 증거가 바로 역시 앞 장에서 설명한 바 있는 『서경』 제편(諸篇)의 기록 속에 잘 드러나고 있다. 『서경』 제편 가운데에서도 주초 때의 기록으로 신뢰받고 있는 소고(召誥), 대고(大誥), 강고(康誥) 등에서는 주(周)가 은(殷)을 멸망시킨 것을 ‘혁명’이라 하고, 안민(安民)이야말로 바로 하늘이 명한 바(=天命)인데, 주(周)는 바로 그 천명을 받아 안민에 힘써 은을 멸망시켰다고 함으로써 주(周)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바, 동아시아 혁명사상은 바로 여기에서 발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서경』의 여러 편 속에서 주장되어 지고 있는 ‘혁명’ 사상을 요약하면, 주권자(主權者=統治者=君主)가 그 이상(理想), 달리 말하면 하늘이 명한 바 즉 천명(天命)에 반(反)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혁명’, 즉 주권자의 교체, 다시 말해 지배 권력의 교체가 당연하다는 이론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시되는 것은 하늘이 통치자인 군주에게 명하는 바인 천명(天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서경』 「태서편(泰書篇)」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天降下民 作之君 作之師 惟曰其助上帝 寵之四方.³⁾

하늘(天)이 하민(下民; 일반 백성)을 내리시고 (그 하민들을 돕고자) 군주(君)를 만들고 스승(師)을 만들었다. (이는 곧 하늘이) 상제(上帝)를 도와 사방(四方; 천하)을 사랑하고자 한 것이다.

위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하늘(天)이 백성(=下民)을 만들고, 그 백성들을 위해 군주 즉 통치자와 스승 즉 지도자를 널리 백성들 가운데서 선출하여, 그로 하여금 하늘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고 문화를 펴게 하였다는 것으로써, 이른바 군주 즉 통치자의 기원(起源)이 바로 하늘(天)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군주=통치자는 어디까지나 하늘을 대신하는 자라야 하며, 하늘은 언제나 일반 백성들의 안녕과 행복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군주 된 자는 바로 그 백성들의 안

3) 이 내용은 『孟子』 梁惠王章句 下 제 3장의 내용에서 인용한 것이다.



녕과 행복, 즉 안민(安民)을 위해 힘써 복무(服務)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민(安民) = ‘일반 백성들의 안녕행복’ 바로 그것이 하늘이 통치자인 군주에게 기대하는 바이므로 통치자인 군주는 언제나 하늘이 명하는 바인 안민(安民)=일반 백성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면, 바로 그것이 하늘이 통치자인 군주에게 부여한 사명이기 때문이다. 만일, 통치자가 하늘의 명을 거슬리는 행위, 즉 안민(安民)을 게을리 하여 일반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당연히 통치자인 군주는 하늘로부터 그 책임을 추궁 당하게 된다. 그 책임 추궁 내용이 바로 ‘혁명’, 즉 하늘이 새로운 통치자를 골라 그에게 천하를 맡겨 안민에 힘쓰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통치자인 군주가 하늘이 명한 바를 거슬리는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가 다시 제기되게 된다. 하늘이 명한 바에 거슬리는 행위 속에는 통치자인 군주 자신이 폭정(暴政)을 한다거나, 또는 사치와 방일(放逸)에 흘러 정사(政事)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행위,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 대한 가렴주구(苛斂誅求) 등이 포함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천재지변(天災地變)에 의한 백성들의 곤궁(困窮)이라는 내용도 그 속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서경』등에 나타난 고대중국 사상에서는 통치자인 군주는 천재지변을 미리 제거할 만한 힘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 다시 말해 천재지변을 억제하여 일반 백성들을 ‘안민’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통치자인 군주의 이상(理想)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치자인 군주가 천재지변을 사전에 억제하지 못하면 하늘은 지극히 당연하게 그 통치자인 군주를 ‘혁명’ 한다. 바로 이 점이 고대중국에서 비롯된 동아시아 ‘혁명’ 사상의 원점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끝으로 주목해야 할 문제는 통치자인 군주에게 하늘이 명하는 바인 천명(天命)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앞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하늘은 자신이 명하는 바를 거스르는 정치를 하는 통치자에 대해서는 그 ‘명(命)’을 서슴없이 바꾼다. 즉 가차 없이 ‘혁명’을 하는 존재가 바로 하늘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하늘의 명(命),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늘의 의지(意志)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물론 하늘은 스스로 자진해서 그 의사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직접 그것을 알 수가 없다. 바로 이 경우, 『서경』 「태서편(泰誓篇)」은 하늘의 의지를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은 곧 일반 백성들의 의사(意思), 즉 천하의 여론이라고 말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인용한다.

天視自我民視, 天聽自我民聽

하늘은 우리 백성들이 보는 것을 따라 보며,

하늘은 우리 백성들이 듣는 것을 따 듣는다.

위에 인용한「태서편」의 내용은 하늘의 의지는 바로 일반 백성들의 의사를 따르는 데 있다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달리 말하자면, 하늘의 의지를 가장 잘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천하 인민, 즉 이 세상 일반 백성들의 여론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하늘의 의지=일반 백성들의 의사(=民意)라는 내용은 맹자에 이르러 더욱 명료하게 나타나는 바, 그 점에 대해서는 후술(後術)하기로 한다.

천명(天命)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상고시대인 주초(周初)에 대두된 '이상적인' 혁명이념 속에 이미 '혁명'의 대의명분은 어디까지나 "일반 백성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것(=安民)"이어야 하는 동시에, 그러한 일반 백성들의 의사(意思)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상, 즉 민의(民意)를 존중하는 **민본주의(民本主義)적 사상이 확립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앞의 『서경』내용에서 살펴 본 대로, 하늘(天)이라는 초월적 존재라는 근거 없이는 민의(民意)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민의(民意)란 어디까지나 하늘이라는 초월적 존재의 반영(反映)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그 한계점을 지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초라는 상고시대에 이미 통치자인 군주가 펼치는 정치가 일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일반 백성들의 여론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그 백성들의 여론에 의해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같은 '혁명' 사상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봐도 매우 '근대적'이며, 매우 '진보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맹자(孟子)의 혁명사상

공자(孔子, 기원전 552-479)가 태어나 활동했던 춘추시대(春秋時代)를 지나 맹자(孟子, 기원전 372-289)가 태어나 활동하던 전국시대(戰國時代)에 들어와, 고대중국의 혁명 사상은 맹자에 의해 새롭게 해석, 발전되었다. 맹자는 정치(政治)라는 것은 언제나 '민(民)'을 위한 정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점을 역설하는 동시에, '민'을 위하지 않는 통치자, 즉 군주에 대해서는 폭력(暴力)을 사용해서라도 '혁명'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맹자의 '과격'한 혁명 사상은 『맹자』 7편 속에서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는데, 우선 맹자가 말하는 '민'을 위한 정치, 즉 위민정치(爲民政治)를 강조하는 내용부터 보기로 한다.

孟子見梁惠王 王立於沼上 顧鴻雁麋鹿曰 賢者亦樂此乎 孟子對曰 賢者而後樂此 不賢者雖有此不樂也. (중략) 古之人 與民偕樂 故能樂也. (『孟子』 梁惠王 上)

맹자가 양혜왕을 만났더니 왕이 때마침 연못가에 서서 기러기와 사슴이 노는 것을 보면서 '현자께서도 이런 것들을 즐기십니까' 라고 물었다. 맹자 대답하기를 현자가 된 이후라야 그런 것을 (제대로) 즐길 수 있으며, 현자가 아닌 사람은 비록 그런 것들이 있어도 (제대로) 즐길 수가 없습니다. (중략) 옛 사람은 백성들과 더불어 그 즐거움을 함께 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맹자가 양혜왕에게 백성들 즉 ‘민’ 과 함께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통치자라야 진정한 통치자라 할 수 있고, 바로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누리는 즐거움이라야 진정한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내용이다. 맹자의 ‘위민’ 사상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대목 가운데 하나이다. 맹자는 또한 제(齊) 나라 선왕(宣王)을 만나서도 다음과 같이 ‘위민’ 을 역설하고 있다.

齊宣王見孟子於雪宮 王曰賢者亦有此樂乎. 孟子對曰有. 人不得則非其上矣 不得而非上者非也 爲民上而不與民同樂者亦非也. 樂民之樂者 民亦樂其樂 憂民之憂者 民亦憂其憂 樂以天下憂以天下 然而不王者未之有也.(『孟子』梁惠王 下)

제 나라 선왕이 설궁에서 맹자를 만나 ‘현자도 이런 즐거움을 누리니까’ 라고 물었다. 맹자가 “(현자도 왕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즐거움을 당연히) 누리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백성들은 왕께서 말씀하신 그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임금을 비난하게 되는 바, 자신들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해서 임금을 비난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백성들의 임금이 된 자로서 백성들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하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임금이) 백성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면 백성들 역시 임금이 누리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며, 임금이 백성들의 근심하는 바를 함께 근심하면 백성들 역시 임금이 근심하는 바를 함께 근심하는 법이니, 이 세상 모든 백성들과 함께 즐기며 이 세상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근심하고서도 왕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있지 아니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맹자가 제 선왕에게 말한 위의 내용은 그야말로 맹자가 생각하는 ‘위민정치’ 의 극치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런데 맹자가 임금이 된 자는 ‘백성들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與民偕樂)’ 해야 한다든지, ‘백성들과 함께 즐기고, 백성들과 함께 근심(樂以天下 憂以天下)’ 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위민’ 또는 ‘안민’ 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 통치자는 당연히 백성들로부터의 신뢰와 기대를 잃고 멸망하는 길 외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 것, 즉 ‘혁명’ 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맹자는 위민(爲民)이나 안민(安民)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학민(虐民)과 기민(棄民)을 일삼은 은(殷)의 주(紂)왕을 폭력으로 제거한 ‘탕무혁명(湯武革命)’ 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폭력을 통해서라도 학민을 일삼는 통치자를 제거해야 한다는 맹자의 강경한 입장은 아래 내용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齊宣王問曰 湯放桀 武王伐紂 有諸. 孟子對曰 於傳有之. 曰臣弑其君可乎. 曰賊仁者謂之賊 賊義者謂之殘 殘賊之人謂之一夫 聞誅一夫紂矣 未聞弑君也.(『孟子』梁惠王 下)

제 나라 선왕이 “탕왕이 걸(桀)을 몰아내고 무왕이 주(紂)를 정벌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

까”라고 물었다. 맹자가 “전(傳)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선왕이 다시 따지듯이) “그렇다면 신하가 임금을 시해해도 좋다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맹자가) “인(仁)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적(賊; 도적)이라 하고 의(義)를 상하게 하는 사람을 잔(殘)이라고 하며, 이 같은 잔적(殘賊) 같은 사람을 한 사람의 필부라고 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필부를 배었다는 말은 들었으나 임금을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위의 인용문에 등장하는 ‘일부(一夫)’ 즉 ‘한 사람의 필부’는 『서경』에서는 ‘독부(獨夫)’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학민(虐民)과 기민(棄民)을 일삼음으로써 민심이 완전히 이반되어 단 한 사람도 귀복(歸服)하는 사람이 없는 통치자를 지칭한다. 다시 말해 여론의 지지를 완전히 잃은 통치자를 말한다. 맹자는 위의 내용에서 신하가 임금을 시해한 경우, 즉 폭력혁명을 통해 통치자를 죽이거나 바꾼 경우에도 그것이 위민과 안민의 정치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학민과 기민의 정치를 함으로써 민심의 지지를 잃어버린 통치자였다면, 그것은 정당한 ‘혁명’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맹자는 철저히 민본주의적 입장에 선 위민과 안민의 정치를 이상적인 정치로 보았으며, 그 같은 정치를 하는 통치자를 이상적인 통치자로 보았다. 반대로 **학민과 기민의 정치로 민심의 지지를 잃은 통치자에 대해서는 폭력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통치자로 바꾸는 이른바 ‘폭력혁명’마저도 일정하게 긍정하는 것이 바로 맹자의 혁명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이때의 ‘폭력’은 학민과 기민의 낡은 정치를 제거하고 위민과 안민의 정치를 새롭게 펼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것은 또한 민심의 지지를 얻을 때만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도 특기할 내용이라 할 것이다.

4. 동학의 혁명사상

1) 기존 연구사 및 그에 대한 평가

동학(東學)은 1860년 4월 5일(음력)에 수운(水雲)이 20여년 에 걸친 구도과정 끝에 이룬 ‘독도’ 체험을 계기로 창도되었다. 그런데 이 같은 동학은 종래의 낡은 사상과 문화를 비롯하여 낡은 제도와 낡은 문명 전체를 ‘개벽(開闢)’하고자 하는 혁명적 요소를 풍부하게 담고 등장했다.⁴⁾

서세동점(西勢東漸)과 삼정문란(三政紊亂), 민란(民亂)의 빈발과 민중의식(民衆意識)의 성장 등 대전환기적 시대상황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동학을 혁명 사상의 관점에서 보게 된 것은 이돈

4) 1860년에 창도된 동학이 근대적 의미의 ‘종교’로 바뀌는 것은 1905년 의암 순병회에 의한 ‘동학의 천도교로의 개신’ 부터이다. 이 점은 별고를 통해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화 등으로 대표되는 1920년대 천도교계 지식인들이 최초였다. 그러나 이 시기 천도교계 지식인의 동학 ‘혁명’ 관은 실증적인 연구와 충실한 원(原) 사료에 근거한 견해가 아닌 ‘종교적 열정’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천도교계 지식인들의 동학 ‘혁명’ 관은 1930년대 이후 일제 식민지배가 더욱 폭압적으로 바뀌고, 그에 따른 천도교 지도부의 친일(親日)로의 전향(轉向)이 노골화됨에 따라 그 학문적인 계승이 단절되기에 이른다. 이리하여 동학을 혁명 사상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평가하려는 우리 내부의 움직임은 일제강점 말기에 이어 해방정국 및 이승만 정권 아래에는 지하로 복류(伏流)할 수밖에 없었다.

동학이 다시 ‘혁명’ 사상으로 재조명되게 되는 것은 1960년대이다. 1961년의 ‘5.16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동학을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혁명 사상으로 옷을 갈아입혔다. 1960년의 4.19학생혁명을 군사쿠데타로 유린하고 집권한 박정희는 정권의 취약성을 호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에는 두 개의 혁명밖에 없다. 하나는 1894년의 동학 혁명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5.16군사혁명이다.”⁵⁾ 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런데 박정희가 동학을 혁명 사상으로 평가하게 되는 데에는 ‘정치적 의도’ 외에 또 하나의 배경이 있었다는 점도 명기(明記)해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 다른 배경이란 바로 박정희 자신이 바로 경상도 선산 출신 동학농민군의 후손이라는 사실이다.

그 곡절이야 어찌됐든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동학이 하나의 ‘혁명’ 사상으로, 그리고 1894년의 대봉기는 ‘동학혁명’으로 명명되기에 이르자, 학계의 연구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1950년대 후반에 창간되어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까지 동학 연구를 주도하는 ‘한국사상연구회(韓國思想研究會)’ 소속 연구자와 그 학술지인 『한국사상(韓國思想)』은 바로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동학을 혁명 사상으로, 1894년의 대봉기를 동학혁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하였다.⁶⁾ 문제는 바로 그 같은 연구가 ‘정치적 의도’라는 학문 외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있다. 이렇게 1960년대 이후에 다분히 학문 외적 상황이 크게 작용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혁명 사상으로 각광받던 동학은 1971년에 대통령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단행하고, ‘유신정권’이라는 권위주의적 통치를 계속하다가 1979년에 ‘10.26사태’ 당시 암살당함으로써 또다시 연구의 단절 및 재평가의 장(場)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동학을 혁명 사상으로, 그리고 1894년 대봉기를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학술적 연구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민중항쟁이 계기가 되었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주지하듯이 ‘광주민중항쟁’이 한국 지식사회에 끼친 영향은 매우 근본적인 것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그 지고(至高)의 사명으로 하는 국군(國軍)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자국민을

5) 이 말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현재 추적중이다.

6) 이 시기에 동학을 혁명사상으로, 1894년의 대봉기를 혁명으로 평가했던 대표적인 연구자가 바로 중앙대학교 사학과의 김용덕, 부산여자대학교의 김익환, 고려대학교의 최동희, 신일철 교수 등이다.



‘폭도’로 몰아 학살한 1980년 5월의 ‘광주민중항쟁’ 이야말로, 당시의 모든 지식인, 학생, 연구자들을 커다란 충격 속으로 몰아넣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대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5월 광주’ 이후, 젊은 연구자들이 대거 ‘5월 광주’의 비극을 학문적 차원에서 뛰어넘으려는 고통스런 ‘자기변혁’의 과정을 밝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바로 기존 사상과 학문, 기존의 사회체제와 기존 문명 전체를 개혁하기 위해 등장한 동학과, 우리 고유의 방식으로 근대 국민국가 실현을 꿈꾸었던 1894년 대봉기를 진정한 의미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연구가 자발적으로 활성화되기에 이르렀으며, 이 과정에서 역사학 연구자들과 뜻있는 시민운동가, 그리고 일부 진보적 언론 등이 동학(東學)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하였고, 1894년 대봉기의 실상과 그 역사적 의미를 다시 묻는 기획을 시작하면서 동학을 혁명 사상으로, 1894년의 대봉기를 혁명으로 보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었다.⁷⁾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이 하나의 내실 있는 성과로 결실되는 시기가 바로 1894년으로부터 1백 주년이 되는 1994년을 전후한 45년간의 시기였다. 요컨대, 동학은 창도된 지 약 1세기 반, 그리고 1894년의 대봉기는 그것이 일어난 지 1세기가 지난 시기에 이르러 가까스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연구와 평가의 대상으로 자리매김 되기에 이르렀고, 바로 그 과정에서 동학은 진정한 의미의 혁명 사상으로, 그리고 1894년 대봉기 역시 진정한 의미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요약할 수 있다.

2) 동학은 왜 ‘혁명적’ 일 수밖에 없는가—동학 성립의 배경

첫째 동학을 창시한 수운의 출생 및 그 성장 환경, 학문적 배경 자체가 바로 ‘혁명적’ 상황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수운은 부친 근암공 최옥과 모친 곡산 한씨 사이에서 만득자(晩得子)로 태어났는데, 당시 모친은 과부(寡婦) 출신으로 부친과 정식으로 결혼할 처지가 아니었다. 이로 인해 수운은 ‘서자(庶子)’와 다름없는 출생 신분 때문에 많은 심적 갈등, 문중 안에서 차별을 받으며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수운은 당대 사회의 신분제도 및 그 신분제도를 뒷받침하는 주자학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다. 또한 부친 근암공이 퇴계 학통을 잇는 저명한 정통 유학자 출신이었는데도 <과과거사의> 및 <허개가사의>라는 혁신적 저작을 후세에 남긴 것도 수운의 사고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짐작된다.

둘째, 종래의 유불도 사상 및 서학(西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그것들의 사상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사상적 고투 과정을 거쳐 자신의 사상을 ‘동학(東學)’으로 정립해 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수운은 이런저런 차별 속에서도 부친이 사거(死去)하는 16세 때까지는 부친으로부터 당대의 최고 수준의 유교적=주자학적 교양을 충실하게 익혔다.⁸⁾

7) ‘동학농민혁명’ 1백 주년을 전후한 시기에 연구자, 시민운동가, 언론 등에 의해 이루어진 동학 및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재조명 성과는 방대한 분량이므로 이 글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수운이 부친으로부터 익힌 유교적 교양의 수준은 후일 그의 사상을 독창적으로 체계화한 『동경대전(東經大全)』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주목할 것은 수운의 유교적 교양의 수준이 바로 이 글의 앞 장에서 논했던 고대중국의 혁명사상 및 유가의 혁명 사상에 대해 깊이 이해할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어,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16세 때 부친이 사거하자 수운은 더 이상 한가하게 유교적 학문을 익힐 처지가 되지 못했다. 가세는 급격히 기울어졌고, 서자나 다름없는 수운에 대한 경주 최씨(또는 가암 최씨라고도 한다) 문중 내의 차별도 더욱 심화되어 고향 경주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부친의 3년 상이 끝난 18세가 되자 가까스로 결혼을 하긴 했으나 바로 각지를 유랑하는 주유천하(周遊天下)의 길에 오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후 수운은 한편으로는 가족의 호구지책을 마련해야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자신의 불우한 신세를 타파할 방도를 모색해야 하는 신산(辛酸)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운은 당대 최고 수준의 학문을 익혔음에도 과거(=文科)에 응시할 수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돌파하고자 무과(武科)에 응시하기 위해 잠시 무술을 익히기도 하지만 끝내 단념하고 20세부터는 전국각지를 주유하는 유랑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⁹⁾ 수운의 ‘주유천하’ 기간은 거의 15년에 이르는데, 이 과정에서 그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거세게 몰려오는 서학(西學; 천주교·주)과 서양 열강의 조선에 대한 침탈 상황이었다. 즉 서세동점(西勢東漸)의 거센 파도를 온 몸으로 목격한 것이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런 거대한 서세의 동점이라는 큰 파도 앞에서 지배층인 조선왕조의 대응이 너무나 무기력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즉, 당대의 지배적 사상이자 가치관의 토대인 주자학이 서학의 도전 앞에 더 이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함께 목도한 것이다. 특히 1858년 영불 연합군의 북경점령 소식은 수운에게 결정적인 위기의식을 가져 다 준 것으로 『용담유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수운은 서학(西學)의 도전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고심참담의 사상적 고투를 계속하여 마침내 동학(東學)¹⁰⁾을 창도하기에 이르렀다.

셋째로 수운이 민중들의 비참한 삶을 초래하는 모든 물질적, 정신적, 문명적 요인들을 ‘괴질’로 인식하고, 그 ‘괴질’을 치유하기 위한 처방전으로써 동학을 창도한다는 점이다. 수운이 인식했던 ‘괴질(怪疾)’이란 구체적으로 삼정문란(三政紊亂)으로 인한 가혹한 세금 수탈¹¹⁾,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말 그대로의 괴질, 서학의 만연과 이양선의 출몰, 그리고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8) 수운의 부친 근암공 최옥은 퇴계의 학통을 정통으로 잇고 있던 학자로, 그의 퇴계 학통의 계승 사실에 대해서는 『도율심득 동경대전』에서 김용옥 선생이 자세히 논구한 바 있다.

9) 이 때의 결단에 대해 수운은 동경대전에서 ‘장궁귀상(藏弓歸商; 활을 감추고 장사실에 나섰다는 뜻)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10) 단 수운이 창도한 동학은 서학을 무조건 배척하는 배외주의적 사상이 아니라, 서학의 긍정적 측면을 수용한 ‘西에게도 열린 東’으로서의 동학이란 점에 유의해야 한다.

11) 수운의 득도 직후인 1862년 삼남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임술민란(壬戌民亂)’의 근본 원인은 바로 삼정문란으로 인한 가혹한 세금 수탈이었다.



자연재해의 빈발 등이었다. 수운은 주로 주유천하의 시기에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나름의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다. 이 시기 수운의 사상적, 정신적 고뇌와 그 치열한 모색의 과정은 1879년에 쓰여진 수운의 일대기 『최선생문집도원기서(崔先生文集道源記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1860년에 수운에 의해 이루어지는 동학(東學)의 창도는 바로 약 15년여에 걸친 주유(周遊) 과정에서 목격하고 체험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방전(大處方錢)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수운이 내린 처방전은 결정적 위기의 시대상황, 수운 자신의 말을 빌리자면 “유도와 불도가 운이 다하여”, “요순과 같은 성인의 정치로도 어쩔 수가 없고, 공맹과 같은 성인의 가르침으로도 어쩔 수 없는” 시대에, “싸우면 다 이기는 무서운 서양 세력”의 쉴 틈 없는 침탈 속에서, 또한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괴질(怪疾)과 대자연재해 아래서 적게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수십 만 명이 죽어가던 시대, 그러면서도 민초들은 “하늘의 길(天道)과 하늘의 명(天命)을 따르고 돌아볼 줄 모르고 제 이기적 생각대로만 살아나는(各自爲心)” 모습에서 크게 위기의식을 느낀 수운이, 고민하고 또 고민한 가운데, 모색하고 또 모색한 가운데, 끝내는 도저히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하여 마지막으로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한 끝에 내놓은 것이었다. 동학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한 마디로, 동학(동학)은 “오늘날도 들은 바가 없고 지나간 시대에도 들은 바가 없는(今不聞古不聞)” 의, 그야말로 전대미문(前代未聞)의破天荒(破天荒)적, 미증유(未曾有)의 새로운 사상, 대(大) 혁명사상에 다름없는 것이었다. 이하에서는 그 동학의 혁명 사상을 크게 다섯으로 나누어 간단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2) 동학의 5대 혁명사상

(1) '다시 개벽(開闢)' —문명의 혁명

수운은 자신이 동학을 창도하게 된 것을 한 마디로 '다시 개벽'의 메시지라고 요약하고 있다. 수운에 의하면, 인류 문명은 성인이 나오기 이전의 우부우민의 시대에서 5제를 중심으로 하는 성인시대, 그 성인시대가 종막을 고한 각자위심의 시대로 변해 왔다고 진단하고, 수운 당대의 시대는 바로 그 '각자위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대로써, 바로 각자위심의 시대를 '다시 개벽'하여 민중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인(聖人)'이 되고 '군자(君子)'가 되는 시대를 여는 것이 바로 동학이라고 천명하였다. 다시 말해 동학의 등장이야말로 기존 문명의 한계를 '다시 개벽'하여 새로운 문명을 여는 혁명적 사상이라는 점을 수운은 강력하게 역설하였다.(東學은 今不聞古不聞之事) '다시 개벽'되는 시대는 민중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성인이 되는 시대이며, 그 같은 새 시대를 여는 길은 바로 '천명(天命)'을 공경하고 '천리(天理)'에 따르는 삶, 즉 '경천명 순천리(敬



天命順天理)의 삶을 사는 데 있다고 본 수운은 ‘경천명 순천리’의 삶의 원리를 아주 간결하게 제시하여 민중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다.

수운이 말한 ‘경천명 순천리’의 삶을 이루는 원리란 바로 21자 주문 수행법인 바, 사람은 누구나 21자 수행만으로 자기 안에 내재하는 ‘하늘님(=天主)과의 일체화=시천주(侍天主)’가 가능하며, 하늘님과 일체화=시천주가 바로 ‘경천명 순천명’의 삶이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수운은 사람은 누구나 하늘님과 일체화를 통해 경천명 순천리의 삶이 가능하다고 봄으로써 조선왕조의 신분제를 뛰어넘어 만인평등(萬人平等)의 새로운 사상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시천주’에 근거한 동학의 만인평등 사상은 지배층의 지속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동학이 민중 층에 뿌리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혁명’인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혁명 사상의 하나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2) ‘동학(東學; 동국의 학) —사상 또는 종교혁명

수운이 창도한 ‘동학’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동(東)’을 강조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동학’에서 강조하는 ‘동’이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운 자신의 언설(言說)과 저작(著作)을 검토해야 한다. 수운의 언설 및 저작에서 드러나고 있는 ‘동’의 의미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된다. 첫째 ‘동’은 동쪽을 의미한다. 동쪽이란 해 뜨는 곳, 새 광명이 비치는 곳,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곳이라는 뜻을 내포한다. 둘째 ‘동’은 해 뜨는 곳에 있는 나라, 또는 해 뜨는 곳에 있는 천지 즉 동쪽에 있는 나라=동국(東國)이란 뜻을 포함한다. 셋째 ‘동’은 또한 그 해 뜨는 곳, 새 광명이 비치는 땅 즉 동쪽 나라에서 이룩된 사상 또는 학문이란 뜻을 지닌다. 즉 ‘동학’ 즉 ‘동국의 학’이란 뜻이 들어 있다. 그리고 이 ‘동국의 학’ = ‘동학’은 그야말로 새 천지를 여는 새로운 사상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넷째 그런데 수운이 확립한 ‘동학’ 즉 해 뜨는 동쪽 나라의 학문은 해 지는 서쪽 나라의 학문인 서학(西學)의 보편성을 널리 수용한 학문, 즉 ‘서쪽을 향해 활짝 열린 동쪽의 학문’이라는 점이다.(運卽一, 道卽同, 理卽非) 다시 말해 수운이 말한 ‘동’은 그저 단순히 “전통이라는 동이 아니며, 이미 서(西)에 의하여 격의(格義)된=화학반응이 일으켜진 동이며, 전통으로의 회귀나 국수적 원형의 부활이 아닌”¹²⁾ ‘동’이라는 점이 가장 주목된다. 요컨대, 수운이 말하고 있는 ‘동학’은 바로 전통적인 동과 서학에서 말하는 ‘서’ 양자를 모두 뛰어넘어 “동에도 서에도 활짝 열려 있으면서도 주체적인 동학”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동학이야말로 종래의 사상을 혁명한 사상이라고 보는 소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요컨대, 동학은 전통사상인 유불도는 물론 이려니와, 근대의 산물인 서학(西學)마저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동쪽인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

12) 김용옥, 『도올세설』(통나무, 1991, 재 6쇄), 156쪽.



조선 민중들에게 알맞은 지극히 주체적이면서도 지극히 보편적이며, 그리고 지극히 ‘근대적’인 사상으로 바로 우리 조선 땅에서 확립된 ‘혁명적’ 사상 그 자체였다.

(3) ‘보국안민(輔國安民)’ —정치혁명

수운은 일찍이『동경대전』「포덕문(布德文)」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나쁜 병이 가득해 백성들이 사시사철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으니, 이런 현상 역시 다치고 해를 입을 운수이다. 서양 각 나라는 싸우면 이기고 치면 빼앗아 성공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 천하가 다 멸망해 버리면 역시 입술이 없어져 이가 시리게 되는 한탄이 없지 않게 되리니, ‘잘못되어 가는 나라를 바로잡고 도탄에서 헤매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 계책(輔國安民之計)’ 이 장차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¹³⁾

위의 내용은 1860년 음력 4월 5일의 ‘하늘님’ 체험을 계기로 동학(東學)을 창도한 수운이 1년 여에 걸친 수련을 거듭한 끝에 ‘포덕’ (布德; 말 그대로는 ‘덕을 펴다’ 라는 뜻이나 여기서는 동학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편다는 뜻이다.주)을 하기로 결심하고 지은『포덕문』말미에 나오는 내용이다. 수운은 여기서 동학 포덕의 목적이 바로 ‘보국안민지계(輔國安民之計)’, 즉 “잘못되어 가는 나라를 바로잡고 도탄에서 헤매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 계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이후 이 ‘보국국민’은 동학의 핵심사상으로 자리 잡아 민중들의 민족의식을 ‘계몽’해 가기에 이르고¹⁴⁾,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는 혁명 사상의 하나로 역할을 함으로써 근대조선 민중의 정치의식 고취 및 내셔널리즘 형성¹⁵⁾ 및 ‘아래로부터의 정치 혁명’의 길을 열기에 이른다.

(4) ‘시천주(侍天主)’의 사회혁명

동학은 무엇보다도 ‘시천주’로 대표되는 만민평등 사상, 즉 평등주의(平等主義)를 전면적으로 표방하고 있는데 큰 특징이 있다. 수운은 한글 경전『용담유사』에서 가장 거룩한 존재인 하늘님이 바로 내 안에 모셔져 있다고 역설하면서, 21자 주문 및 신성경(信誠敬)의 수행으로 누구나 다 자기 안에 모셔져 있는 하늘님과 일체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로 이 같은 동학의 ‘시천주’ 사상은 조선왕조 5백 년을 지탱해온 신분제를 뛰어넘어 만민평등을 외친 것으로, 창도 초

13) 최재우 지음, 박맹수 옮김, 『동경대전』(지만지, 2009), 43쪽.

14) ‘보국안민(輔國安民)’은 1892-3년 교조신원운동의 주요 슬로건이 되어 민중들의 정치의식 및 민족의식 고취에 기여한다.

15)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농민군들의 내셔널리즘에 대해 재일사학자 조경달은 ‘전기적(前期的)’ 내셔널리즘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趙景達, 『異端の民衆反亂—東學と甲午農民戦—』, 岩波書店, 1998 참조)



기의 동학이 지배층의 강력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신분제 아래에서 온갖 차별에 시달리던 일반 민중은 물론이거니와 천민들로부터 광범한 지지를 획득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기능하였다. ‘시천주’에서 유래한 초기 동학의 평등주의적 지향의 구체적 사례로는 1862년 경상도 상주 일대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보수유생들의 동학배척 운동에서도 확인¹⁶⁾ 되는 동시에,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사회신분제를 해체하는 사회혁명의 핵심 사상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5) ‘유무상자(有無相資)’ — 경제혁명

동학이 지닌 또 하나의 혁명적 사상은 바로 ‘유무상자(有無相資)’를 통한 경제공동체, 즉 경제혁명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동학이 창도되는 배경에는 삼정문란(三政紊亂)과 외세의 경제적 침탈에서 비롯된 조선민중들의 곤궁한 삶을 경제적 차원에서 구제하려는 강력한 동기가 자리하고 있었다. 동학이 창도 초기부터 입도하는 도인(道人)들에게 있는 자(=富者)와 없는 자(=貧者) 사이의 상호부조(相互扶助)를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1862년 경상도 상주에서 발송된 동학배척통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동학은 ‘유무상자’ 즉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돕기 때문에 가난한 술장사와 백정들이 다투어 동학에 뛰어들었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동학은 창도 초기부터 지배층의 탄압을 받아 자유로운 ‘포덕’ 활동이 불가능하였고, 동학에 입도한 도인들 역시 지배층의 탄압 때문에 자유로운 생업(生業) 활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도인 상호간의 경제적 부조 활동은 동학의 조직을 유지하고, 동학 도인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중시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제적 상호부조의 전통은 마침내 1892-3년의 교조신원운동과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단계에 이르러서는 교단 내의 ‘전통’을 벗어나 조선 민중 전체의 경제적 처지를 ‘혁명적’으로 개혁하려는 경제혁명의 중요 원리로 발전하기에 이른다.

5.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나타나는 네 가지 혁명

앞 장에서는 1860년에 성립된 동학사상 속에 내재하고 있는 다섯 가지 ‘혁명’ 사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장에서는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에서 확인되는 ‘혁명’의 여러 국면을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종교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16) 동학배척통문 참조.



1) 정치혁명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1892년 음력 10월부터 1893년 4월 초까지 전개된 교조신원운동, 교조신원운동에 이은 1893년 음력 11월의 사발통문 모의 및 1894년 음력 1월의 고부농민봉기를 전사(前史)로 하여, 1894년 음력 3월 21일 전라도 무장(茂長)에서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전면 봉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의 전사(前史)인 교조신원운동 과정에서 운동 지도부는 “척왜양(斥倭洋), 지방관의 가렴주구(苛斂誅求) 금지, 동학 교조의 신원(伸冤)” 등 세 가지 슬로건을 앞세우고 약 2년여에 걸쳐, 충청도 공주, 전라도 삼례, 서울 광화문, 충청도 보은 및 전라도 금구 원평 등지에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이 모인 집회를 열었다. 특히 1893년 음력 3월 10일 정부터 4월 초까지 충청도 보은(報恩)에서 열린 보은집회 지도부는 그 목적을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라고 선언함으로써 동학교조 수운이 일찍이 제시한 바 있는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구체적 방도를 “왜(일본)와 양(서양)의 침탈로부터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 찾고자 하였다. 이 같은 보은집회 슬로건은 당시 조선 민중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음은 물론이러니와, 민중들의 정치의식을 배양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1893년 음력 11월의 사발통문 모의 과정에서 전봉준 등 지도부는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하며,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한 다음, 전주영을 함락하고 경사(京師; 서울-주)로 직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을 모의한 바 있었으나, 고부군수 조병갑의 갑작스런 전임(轉任) 소식에 일시 중지되었다가, 1894년 음력 1월 10일경 조병갑이 다시 고부군수에 임임(仍任;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뜻-주)한다는 소식에 고부농민봉기를 통해 사발통문 모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에 이른다.

동학농민혁명의 전사(前史)인 교조신원운동, 사발통문 모의, 고부농민봉기 등은 모두 동학 교단의 지도부 또는 동학의 접주(接主)급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민중들의 정치의식을 고양하는 한편, 부패한 조선왕조의 정치를 ‘혁명’하려는 민중들의 움직임이라 평가할 수 있는데, 그 같은 움직임은 마침내 1894년 음력 3월 21일의 ‘무장기포(茂長起包)’, 즉 제 1차 동학농민혁명이라는 형태로 총괄(總括)되기에 이른다.

주지하듯이, 제 1차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음력 3월 21일부터 ‘전주화약(全州和約)’이 체결되어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으로부터 자진 철수하는 음력 5월 8일경까지 전개되었는데, 이 시기에 동학농민군 지도부는 포고문(布告文) 및 격문(檄文), 4대 명의(名義), 원정(原情) 등의 형태로 부패한 조선왕조의 정치에 대해 근본적인 ‘혁명’을 요구하는 문건을 지방관 또는 조선왕조 지배층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제출하였으며, 그 같은 요구는 마침내 전주화약 당시 초토사 홍계훈에게 전봉준이 제출한 ‘폐정개혁안 27개조’으로 집성(集成)되었다. ‘폐정개혁안’을 통해 농민군 지도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정치 혁명을 시도한 내용은 부패한 집권자(執權者)의 교체 바로 그것이었



다. 즉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안민(安民)’이라는 유가적 통치의 이상(理想)을 저버린 민씨(閔氏) 정권을 타도하고, 민심(民心)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던 대원군(大院君)을 추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민군 지도부는 민씨 정권에 빌붙어 아첨을 하며 ‘안민’과는 달리 학민(虐民)을 리고 있던 조정(朝廷)의 관리와 가렴주구를 일삼는 탐관오리의 숙청을 통한 정도(政道)의 일신, 즉 정치 혁명을 시도하였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 지도부가 지향했던 정치혁명의 궁극적 목표는 제 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본군의 개입 및 불법적인 탄압으로 인해 좌절된 직후 체포된 전봉준의 최후 진술에서 명료하게 확인되고 있다. 농민군 최고지도자 전봉준은 1894년 음력 12월 초에 전라도 순창에서 체포된 직후 나주를 거쳐 서울로 압송되어, 1895년 3월(양력) 말까지 전후 4차례에 걸친 심문을 받았다. 심문 과정에서 전봉준이 남긴 진술 내용은 「전봉준공초」로 남아 있으나, 정치 혁명에 관한 내용은 당시 일본영사의 취조 내용을 자세히 보도한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 1895년 2-3월분 기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쿄아사히신문』에 실린 기사에 의하면, 전봉준은 민씨 정권을 타도하고 민심(民心)을 잘 아는 몇 사람의 명망가를 선출하여 임금을 보좌함으로써, ‘안민’의 정치를 이룩하고자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진술에 의하면, 전봉준은 끝까지 왕조(王朝)를 부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임금이 민심을 잘 파악하고 수렴하여 안민(安民)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정도(政道)의 일신(一新)’, 요컨대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에 가까운 구상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비록 농민군 최고지도자 전봉준이 구상했던 정치 혁명이 조선왕조를 부정하지 않는 입헌군주제에 가까운 것이었다고는 해도, 제 1차 혁명 당시 이미 ‘집권자의 교체’를 목표로 한 정치 혁명을 시도하고, 다시 제 2차 혁명에서는 안민(安民)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로서 민심을 대변하는 명망가를 선출하여 임금을 보좌하게 하려 했다는 점에서 동학농민혁명에서 드러나는 정치 혁명적 측면은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

2) 경제혁명

동학농민혁명에서 드러나는 가장 혁명적 측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제 혁명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앞 장에서도 설명했듯이, 동학은 창도 초기부터 유무상자(有無相資)라는 기치 아래,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상호부조를 강조하는 경제 공동체적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1876년 개항(開港) 이후 청일(淸日) 양국의 경제침탈에 따른 민중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서양으로부터 수입된 양품(洋品)으로 인한 민중경제의 침체 상황이 계속되던 1880년대 중반 동학 2대 교주 최시형은 국산품 애용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민중경제 보호에 앞장섰다. 이 같은 내용은 1880년대 동학 교단의 동향을 담고 있는 『해월문집』(1992년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천도교 호암수도원에서 발굴)에 나온다.



창도 초기 동학의 유무상자적 경제 공동체에 이어 1880년대 동학 교단의 국산품 애용 운동으로 이어진 동학의 민중경제 보호 운동은 18892-3년의 교조신원운동기에 더욱 조직적, 대중적인 민중경제 보호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신원운동의 목표는 첫째 척왜양, 둘째 가림주구 금지, 셋째 동학교조의 신원 등 크게 세 가지였는데, 이 가운데 앞의 두 가지 목표 속에 민중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하면, 신원운동 과정에서 제기된 ‘척왜양’의 기치는 개항 이후 조선의 민중경제를 위협하는 청일 양국의 경제적 침탈 및 서양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으로 인한 민중경제 파탄을 막으려는 데서 비롯되었고, 가림주구 금지는 곧 지방관에 의한 불법적 수탈로부터 민중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원운동 지도부가 내건 슬로건이었다. 신원운동 과정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조직화된 민중경제 보호의 기치는 마침내 1894년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는 전면적인 경제 혁명으로 발전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농민군 지도부는 ‘폐정개혁안 27개조’ 제출을 통해 조선왕조 전체를 ‘혁명’ 하고자 했다. 폐정개혁안 27개조 가운데 가장 많은 조항이 바로 경제 혁명과 관련된 내용이다. 경제혁명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조선왕조 내부의 경제적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민중경제를 혁신하려는 내용이며, 다른 하나는 청일을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적 침탈로부터 조선의 민중경제를 보호하려는 내용이다. 이들 경제 혁명 관련 내용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이 바로 현재 뜨겁게 논쟁중인 ‘토지균분(土地均分) 조항, 즉 토지 개혁이다. 농민군이 내걸었던 ‘토지균분’ 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학자들이 찬반으로 갈려 논쟁중인데, 여기서는 ‘토지균분’ 조항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실재하지 않은 조항이었으며, 『동학사』를 쓴 오지영(吳知泳)에 의해 후일에 첨가된 것이라는 ‘토지균분’ 조항 허구론자들의 견해에 대해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는 것으로 동학농민혁명 당시 경제 혁명의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토지균분’ 조항 허구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지영의 『동학사』는 1894년 당시의 기록은 아니지만,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지 2-30년이 경과된 뒤에 자신의 체험과 견문을 바탕으로 쓴 일종의 회고록이다. 제목 앞에 비록 ‘소설(小說)’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오늘날의 ‘소설’ 즉 픽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쓴 글에 대한 겸사(謙辭)이다. 따라서 ‘소설 동학사’이기 때문에 오지영의 기록은 믿을 수 없다는 허구론자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역사학자 최익한의 저서 『실학과와 정다산』에 따르면, 다산 정약용의 토지개혁론을 담은 저서인 『경제유표』가 전라도 강진(康津)의 윤세현(尹世顯) 등에 의해 전봉준에게로 전달되었다고 하는 『강진읍지』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강진읍지』의 내용이 사실에 가깝다는 사실이 최근에 확인되었다. 지난 8월에 필자는 윤세현의 출신지인 강진 대구면(大口面)을 답사한 바 있는데, 대구면은 다산의 유배지로부터 불과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다산의 처가인 해남 윤씨가 세거하는 마을이었다. 뿐만 아니라 윤세현은 강진과 장흥 일대에서 농민군 지도자로 크게 활약한 실존 인물이었다. 요컨대 최익한이 주목한 윤세현이라는 인물이 가공의 인물이 아니



라 강진 장흥 일대에 상당한 기반을 가진, 정다산과 인척 관계에 있는 해남윤씨 가문 출신의 농민군 지도자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윤세현 등에 의해 『경세유표』가 전봉준에게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더욱 높혀 주는 구체적 증거이다. 그 외 필자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강진에 거주했던 유생 강재 박기현이란 인물의 일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가 다산의 시집(詩集)를 읽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같은 사실은 다산의 저작(著作)이 강진 일대 지식인들 사이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읽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농민군 최고지도자 전봉준에게로 『경세유표』가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높여 주는 증거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3) 사회혁명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농민군들이 가장 급진적으로 추진했던 ‘혁명’은 바로 신분제를 해체하고 평등주의(平等主義)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 혁명이었다. 전술(前述)했듯이, 조선와조 지배층의 강력하면서도 지속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동학이 기층 민중들 사이로 널리 퍼져 갈 수 있었던 힘, 그리고 교조신원운동 및 동학농민혁명 혁명 과정에서 접포(接包)라는 동학 교단 조직안으로 적게는 수만, 많게는 수백 만 민중을 안아 들여 조직화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바로 시천주(侍天主)를 근거로 한 동학의 만민평등 사상이었다. 시천주에 근거한 동학의 만민평등 사상에 공감하여 동학에 입도하고, 농민군이 되어 혁명 대열에 동참한 사례로는 충청남도 서산 출신의 홍종식, 황해도 출신의 백범 김구가 널리 알려져 있으며, 동학농민혁명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구례 출신 유생 매천 황현의 『오하기문(梧下記聞)』에는 동학의 평등 사상, 농민군 조직의 평등한 인간관계, 그리고 농민군에 의한 신분제 해체 혁명의 과정이 매우 사실적이면서도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사료로 유명하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은 바로 이 같은 동학의 만민평등 사상에 입각하여 사회신분제를 해체하는 강력한 ‘혁명’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농민군에 의한 사회신분제 해체 혁명은 당시 신분제라는 기득권을 수호하려 했던 양반 지식인 즉 보수 유생들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다. 교조신원운동기나 동학농민혁명 당시 그 지도부들이 내건 여러 가지 슬로건 가운데, 예컨대 가림주구 금지나 첩왜양 등의 기치는 보수 유생들로부터도 상당히 두터운 지지를 얻은 바 있었다. 하지만, 동학농민혁명기 특히 전주화약 이후 각 출신 고을로 돌아간 농민군들이 사회신분제 해체를 위한 사회 혁명을 강력하게 전개하는 국면이 도래하자, 제 1차 혁명기에 농민군에 대한 식사 및 숙소 제공, 식량 조달 등을 비롯한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농민군의 반외세(反外勢), 반봉건(反封建) 혁명에도 ‘일정하게’ 동참했던 보수 유생들은 예외 없이 등을 돌렸다. 뿐만 아니라, 이들 보수 유생들은 제 2차 혁명기 중반에 일본군이 개입하여 농민군 측이 수세로 몰리는 국면이 도래하자 일본군에게 협력하여 농민군을 압살하는 반농민군 활동에 적극 가담하기에 이른다. 이 같은 현상은 농민군에 의한 사회 혁명, 즉 사회신분제 해체를 위한 혁명



이 기득권층에 가져다 준 충격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농민군 탄압을 위해 파견된 좌선봉장 이규태가 후일 조정에 올리는 보고서에서 농민군이 범한 중죄(重罪) 가운데서도 가장 무거운 죄는 바로 ‘강상(綱常)을 무너뜨린 죄’ 즉 사회 신분제 해체를 위한 혁명을 시도한 것이라고 명기한 것도 동학농민혁명 당시 신분제 해체를 위한 사회 혁명의 열기를 이해하는 열쇠의 하나라 할 만하다.

4) 종교혁명

전제왕조(專制王朝)인 조선왕조에서는 사상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는 없었다. 오로지 유학 다시 말해 주자학만이 정학(正學)으로 존숭될 따름이었고(이것을 일러 朱子學—尊主義라 한다), 그 외의 사상이나 종교는 모두 이단사술(異端邪術)로 간주되었다. 대원군 시대에 천주교가 사학(邪學)으로 간주되어 대대적인 탄압 아래 많은 순교자를 낸 것이나, 1860년에 창도된 동학이 1892-3년의 교조신원운동기 및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까지 줄곧 탄압을 받은 것은 바로 당시 조선왕조 사회에 사상과 종교의 자유가 부재한 사실을 말해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문제는 1876년 개항(開港) 이후부터이다. 개항을 통해 먼저 일본에게 문호를 개방한 조선왕조는 1883년 이후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양 열강과 차례로 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하면서, 오랜 기간 탄압했던 천주교에 대해 신앙의 자유를 인정했다. 또한 미국을 통해 들어오는 개신교에 대해서도 신앙 및 선교의 자유를 인정했다. 그런데 유독 조선 땅에서 창도된 동학에 대해서만은 개항 이후에도 탄압을 계속했다. 1880년대의 동학은 오랜 지하포교 시대를 끝내고 충청도와 전라도 평야 지대를 중심으로 활발한 포교활동을 통해 많은 도인(道人; 신자-주)을 확보했지만, 동학에 대한 신앙 및 포교의 자유는 끝내 허용되지 않았다. 허용은커녕 조정에서 금(禁)한다는 구실로 지방관들에 의한 탄압 및 불법적인 수탈 행위는 더욱 심화되어 갔다. 동학에 대한 이 같은 탄압은 창도 초기부터 지속된 것이었지만, 18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동학신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던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더욱 격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최시형을 비롯한 동학지도부는 동학에 대한 신앙의 자유, 선교(포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 1892년부터 ‘교조신원운동’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전개하기에 이른다.

동학에 대한 신앙 및 포교의 자유를 요구하는 교조신원운동은 ‘척왜양, 지방관들의 가렴주구 금지’라는 일반 민중들의 요구와 결합하여, 1892년 음력 10월부터 이듬해 4월 초까지, 충청도(공주, 보은)와 전라도(삼례, 금구 원평), 서울(광화문) 등지에서 ‘합법적(合法的)’¹⁷⁾ 이면서 대규모로, 그리고 장기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지만 끝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

17) 1892년부터 1893년까지 동학교단 지도부가 주도한 교조신원운동은 『경국대전』 「형전(刑典)」에 들어있는 ‘신소(伸訴) 제도’에 근거한 ‘합법적’ 운동이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이 같은 합법 운동의 단계를 거쳐 그것이 한계에 직면하자 마지막으로 비합법적 수단을 통한 ‘혁명’을 달성하고자 하는 단계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갔다. ‘합법적’인 교조신원운동 과정에서도 동학에 대한 신앙 및 포교의 자유를 획득하지 못한 동학 교단 지도부와 도인(=신자)들은 이듬해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다시 동학에 대한 신앙 및 포교의 자유를 요구하는 개혁안을 제출함으로써, 외래 종교인 서학에 대해서는 신앙 및 포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자생적인 종교인 동학에 대한 신앙 및 포교의 자유를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는 조선왕조 지배층의 ‘사대주의적’ 태도 및 주자학 일존주의에 매몰된 ‘전근대적’ 지배체제를 근본적으로 ‘혁명’ 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동학은 ‘일시적으로’ 신앙 및 포교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혁명 대열에 참여한 동학농민군들은 거리낌 없이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라는 13자 주문을 암송하였고, 양 어깨에는 동학의 신령스런 부적인 영부(靈符)를 붙이고, 가슴 속에는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 등의 동학경전을 소지한 가운데 전투에 참가할 수 있었다.

6. 맺음말

이 글에서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혁명’으로 규정하기 위한 근거로서 먼저 ‘혁명’에 대한 어원과 어의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1860년에 성립된 동학 및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유가(儒家)의 혁명사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는 동학농민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이루고 있는 동학사상 속에 내재하고 있는 혁명 사상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으며, 끝으로 1894년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드러난 혁명적 측면과 그 내용, 성격 등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이상의 고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혁명’이란 말은 그 유래가 아주 오래다. 우선 ‘혁명’의 어원은 『주역』 ‘혁괘’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는 자연계에 있어서나 사회 현상에 있어서나 낡은 것이 새로운 것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을 뜻하는데, 고대중국의 주초(周初) 기록인 『서경』에서는 사회 현상에 있어서 혁명에 대해 ‘지배 권력의 교체 즉 왕조의 교체’를 혁명이라 정의했다. 그리고 그 혁명은 바로 하늘의 명 즉 천명(天命)인 안민(安民)을 실현하는 자에 의해 달성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고대 중국에서 비롯된 이 같은 ‘혁명’의 어의에 대해 그것은 단순히 ‘역성혁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같은 이해는 단편적 이해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 ‘혁명’의 어의 속에는 단순한 지배 권력의 교체뿐만 아니라, ‘정도(政道)의 혁신’이라는 정치사회의 혁명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고대중국에서 비롯된 ‘혁명’ 사상은 유가(儒家)에 와서 획기적으로 발전을 보게 되는 바, 유가에서는 통치자가 하늘의 명 즉 천명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천재지변을 사전



에 예방하지 못해 백성들이 곤궁해 처했을 때 혁명의 대상이 된다(天譴說)고 정의하고, 하늘의 명=천명은 바로 백성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데 있다고 함으로써, 통치자로 하여금 안민(安民)과 민본주의에 바탕한 정치를 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유가의 혁명 사상을 계승한 맹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일 통치자가 천명을 어기고, 다시 말해 안민의 정치 대신에 학민(虐民)의 정치를 일삼는 경우에는 폭력을 써서라도 혁명을 해야 한다고 하는 폭력혁명 정당설마저 주장하였다. 셋째 1860년에 동학을 창도한 수운은 동학이야말로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위한 계책'의 일환으로 창도하였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것은 수운 당시의 조선왕조 지배층의 정치가 안민(安民)이 아닌 학민(虐民)의 세상이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자신은 동학을 통해 그 같은 학민의 세상을 안민의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 다시 말해 '혁명'을 하기 위해 동학을 창도하였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수운이 창도한 동학에 내재한 '혁명' 사상에 대해 필자는 '다시 개벽'의 문명 혁명, '동학'의 사상 또는 종교혁명, '보국안민'의 정치혁명, '시천주'의 사회혁명, '유무상자'의 경제혁명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1894년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에 나타난 혁명적 양상과 그 내용 및 성격에 대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은 무엇보다도 비합법적 폭력혁명의 성격을 가진 혁명인 바, 이러한 비합법적 성격은 1892-3년에 일어난 합법적 개혁 운동인 교조신원운동의 좌절, 달리 말해 합법운동에 대한 지배층의 탄압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였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나아가 종교적 차원에서 '보국안민(輔國安民)'을 달성하기 위한, 다시 말해 유가 및 맹자가 역설한 바인 안민이라는 천명을 어기는 정치 행위를 일삼고 있는 조선왕조를 폭력을 써서라도 안민을 달성하고자 하는 명실상부한 '혁명'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요약하자면,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동아시아의 혁명 전통에 바탕한 명실상부한 '대혁명'이었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2011년 11월 11일 탈고)



토론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왜 ‘혁명’ 인가」에 대한 토론문

조재곤 동국대 연구교수

1. 연구사적 의의

1) 오랜 기간 본 주제와 관련한 연구에 몰두하면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박맹수 선생님이 ‘동학농민혁명은 혁명으로 명명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동양적 혁명의 어원과 유가사상, 동학사상에서의 혁명사상, 1894년 동학농민군 활동에서 보이는 ‘혁명적 요소’ 등에 대해 그간의 연구방향과 논점의 핵심을 새롭게 정리한 시론적인 글이다.

2) 포괄적인 접근과 새로운 추론을 통해 그간 편의적이거나 애매하게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일관되고 분명한 주장은 향후 이 분야 용어개념 정립과 이론적 보편성 확보 작업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방향

1) 본 주제와 관련한 그간의 용어 개념은 다양하였고 시대적 조건과 관점에 따라 접근 방식도 차이가 컸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에 대한 개념어도 동학난, 갑오의 혁신운동, 동학농민운동, 동학운동, 동학농민봉기,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전쟁, 갑오농민전쟁, 1894년 농민전쟁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왔다. 필자는 최근의 교과서에서도 아직까지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명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그러한 용어는 낯설게 다가온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 필자는 중국의 ‘태평천국혁명’도 ‘혁명’으로 자리매김 되었다는 점을 예시하면서 나아가

중국고전과 유가사상, 동학사상, 1894년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드러난 혁명적 양상과 성격을 정리하고 그 결론을 근거로 우리도 ‘혁명’이라는 용어를 붙여야만 될 당위성이 있기에 이와 같이 쓸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필자의 논점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혁명이란 말의 어원은 고대 중국에서 나온 것으로 지배 권력의 교체 이상을 의미하는 정치 사회적 혁명이 있고, 유가의 혁명사상은 ‘安民’과 민의를 존중하는 민본주의적 사상으로 맹자 단계에 이르면 폭력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통치자로 바꾸는 폭력혁명까지도 긍정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 동학의 혁명사상으로는 문명의 혁명(開闢), 사상 또는 종교혁명(東學), 정치혁명(輔國安民), 사회혁명(侍天主), 경제혁명(有無相資)의 다섯 가지 요소를 주장하고 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서술 부분에서는 정치혁명(부패한 집권자의 교체), 경제혁명(유무상자, 토지균분), 사회혁명(신분제 해체와 평등주의 실현), 종교혁명(주자학 일존주의 극복과 신앙 및 포교 자유) 등을 강조하고 있다.

4) 이러한 점을 설명하면서 필자는 ‘동학농민혁명’은 ‘輔國安民’을 달성하기 위한 명실상부한 ‘혁명’이자 동아시아 혁명전통에 바탕한 ‘대혁명’으로 결론짓고 있다.

3. 생각해 볼 점

1) 필자는 동양 고전에서 나타난 혁명이라는 개념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동양적 혁명의 어원과 유래 추적을 통해 동학사상과 농민군의 활동을 연결시켜 보고자 한 점에서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객관화된 인식론적 접근이 없었던 상황에서 필자의 일관된 논리적 시도는 중요한 논점으로 보이며 토론자도 내용의 많은 부분에 동의한다.

2) 그러나 몇 가지 점을 제시하면, 먼저 혁명의 사회과학적 입장 내지 국제적 비교 등을 통한 서양의 시민혁명에 비견되는 ‘부르주아 혁명’을 상정한 접근방식도 일부 있는데, 이 글에서는 생략되어 있기에 동서양을 아우르는 균형감각을 위해서는 이러한 점과 결부시켜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는 사상, 지향 및 행위의 혁명적 요소와 혁명 그 자체는 구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중국의 고대 사상의 혁명적 요소 중 필자가 특히 강조한 내용도 ‘민본사상’과도 동일시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혁명 또한 그 외연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한다.



4) 예컨대, 동학사상과 ‘동학농민혁명’에서의 ‘혁명적 요소’ ‘혁명사상’ ‘혁명의 여러 국면’은 잘 정리되어 있지만 ‘혁명’ 그 자체는 엄밀하게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고, 특히 사상 부분은 더욱 그러한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5) 막상 ‘혁명’이라는 용어도 많은 학자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개념정리와 관련한 집중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필자가 다루는 시대와 논의의 범주가 매우 포괄적이다. 따라서 ‘侍天主’를 사회혁명으로 ‘有無相資’를 경제혁명 등 일부 추상적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여진다.

4. 소소한 문제와 제안

1) 필자가 머리말에서 제기한 중국이 ‘태평천국혁명’으로 명명한지 오래되었다는 주장은 다소 논의의 여지가 있다. 올 여름 160주년 기념으로 남경에서 열린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중국학자들이 ‘太平天國 起義’로 공식 표현하고 있다.

2) 1984년 100주년 즈음 다수의 학자들은 접두어는 달리하더라도 대체로 ‘농민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던 적이 있었고, 지금도 이러한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연구자들의 역사인식 차이에 따라 ‘농민전쟁론’과 ‘농민혁명론’으로 사용하거나 절충하는 등 결코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

3) 따라서 ‘혁명론’의 입장을 시종 견지하는 필자의 견해도 일정한 전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학농민군의 의식과 지향은 그간의 민란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혁명적’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간의 많은 연구에서 제기된 것처럼 그 안에는 전근대적 요소와 근대지향적 요소가 병존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4) 끝으로 하나 제안하고자 한다. 1894년 동학농민군의 지향과 역사적 활동상을 다시 한번 제대로 조망하는 차원에서 120주년을 맞이하는 2014년 즈음 용어에 대한 심도있는 집중 토론의 장이 한번쯤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 검토



김양식

충북발전연구원 충북학연구소장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 검토

김양식 충북발전연구원 충북학연구소장

- I. 머리말
- II.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 이해와 교과서 서술
- III. 교과서 서술내용 오류와 문제점
- IV. 학습자료 활용과 문제점
- V. 맺음말

1. 머리말

동학농민혁명은 한국근대사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역사적 사건이었을 뿐 아니라, 조선왕조체제를 뿌리 채 동요시키고 해체시켜 근대사회로 전환시키는 분수령을 이루었다. 그 때문에 모든 역사교과서는 동학농민혁명을 비중 있게 다루어, 3·8쪽에 이르는 많은 분량의 지면을 할애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은 사건이 복잡하게 전개되었고 보는 관점과 인용하는 사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난 20년 방대한 사료 발굴과 비약적인 연구업적의 축적으로, 역사교과서 집필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오류를 범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표 1〉 현행 역사교과서 현황

교과서	출판사명	발행년도	비고
중학교 국사	교육과학기술부	2002.3.1 초판, 2010.3.1	
고등학교 국사	두산/교육과학기술부	2001.3.1 초판, 2011.3.1	
고등학교 한국사	삼화출판사	2011.3.1	'삼화' 로 약칭
	미래엔컬처	2011.3.1	'미래' 로 약칭



교과서	출판사명	발행년도	비고
고등학교 한국사	비상교육	2011.3.1	'비상' 으로 약칭
	법문사	2011.3.1	'법문' 으로 약칭
	천재교육	2011.3.1	'천재' 로 약칭
	지학사	2011.3.1	'지학' 으로 약칭
고등학교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3.3.1 초판, 2011.3.1	'금성' 으로 약칭
	미래엔컬처	2003.3.1 초판, 2011.3.1	'미래' 로 약칭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3.3.1 초판, 2011.3.1	'중앙' 으로 약칭
	법문사	2003.3.1 초판, 2011.3.1	'법문' 로 약칭
	두산동아	2003.3.1 초판, 2011.3.1	'두산' 으로 약칭
	천재교육	2003.3.1 초판, 2011.3.1	'천재' 로 약칭
중학교 역사부도	삼화출판사	2011.3.1	
	성지문화사	2011.3.1	
	지학사	2011.3.1	
	천재교육	2011.3.1	
	두산동아	2011.3.1	
	교학사	2011.3.1	
	금성출판사	2011.3.1	
고등학교역사부도	금성출판사	2011.3.1	
	교학사	2011.3.1	
	보진재	2011.3.1	
	천재교육	2003.3.1 초판, 2011.3.1	
	삼화출판사	2003.3.1 초판, 2011.3.1	
	지학사	2003.3.1 초판, 2011.3.1	
	성지문화사	2003.3.1 초판, 2011.3.1	
	신유	2002.3.1 초판, 2011.3.1	

* 자료 제공 : (재)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역사교과서는 <표 1>과 같이 검인정 교과서 2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2종,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 6종 등 총 14종이 있다. 이들 교과서에는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내용이 장 또는 절로 편제되어 모두 3-8쪽 분량으로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현행 14종의 교과서에 수록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떠한 오류와 문제점이 있는지,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



다. 아울러 현행 중·고등학교 역사부도도 함께 분석할 것이다.

본 발표문에서는 역사교과서를 일일이 지칭할 수 없기 때문에, <표 1>과 같이 출판사명을 줄여 약칭으로 사용할 것이다.

2.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 이해와 교과서 서술

동학농민혁명은 크게 3월 봉기(1차), ‘집강소기’, 9월 봉기(2차) 3단계로 전개되었다. 일부는 1894년 1월 고부 농민봉기를 1단계로 설정하여 4단계로 구분하기도 하나, 최근 연구동향은 고부 농민봉기와 동학농민혁명을 분리시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고부 농민봉기는 고종 때 군현단위 농민항쟁의 최정점에 있다면, 동학농민혁명은 농민항쟁의 거대한 흐름이 동학과 결합하여 전국적으로 전개된 농민전쟁이었다.

1단계 3월 봉기는 3월 20일 무장 기포부터 4월 27일 전주성 점령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을 서술할 때 들어갈 주요한 사건은 무장 기포, 고부 백산대회, 고부 황토현전투, 장성 황룡촌전투, 전주성 점령 등이다.

2단계 ‘집강소기’는 5월 8일 전주화약을 체결한 농민군이 전주성에서 철수한 뒤 각지에 도소 또는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 개혁을 주도한 시기이다. 이 시기 주요한 사건 내지 핵심어는 전주화약, 집강소, 도소, 폐정 개혁 등을 들 수 있다.

3단계 9월 봉기는 9월에 전봉준과 최시형이 각각 재봉기를 선언하고 논산에 집결하여 공주 우금치전투에서 대회전을 벌인 시기이다. 공주 우금치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졌으며, 최후에는 일본군이 주도하는 조·일연합군의 토벌작전에 밀려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죽었다.

<표 2> 역사교과서 속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

	국사		한국사					근·현대사					비고		
	중학	고등	지학	천재	미래	삼화	비상	법문	금성	미래	중앙	천재	두산	법문	비고
공주집회	4	3	4	4	8	6	5	4	7	4	8	5	6	5	
삼례집회			△			△	△	△	□		□				*공주집회, 금구집회 인식 편차
서울복합상소	√		△	△	△	△	△	△	□		□	□	□		
금구집회	√		△	△	△	△	△	△	□		□		□		
보은집회						△	△		□		□				
고부농민봉기		√	△	△	△	△	△	△	□	□	□	□	□	□	



	국사		한국사					근·현대사					비고		
	중학	고등	지학	천재	미래	삼화	비상	법문	금성	미래	중앙	천재	두산	법문	비고
무장 기포			△	△	△	△		△	□		□	□		□	*무장기포에 대한 인식 편차
백산대회	√		△	△	△	△	△	△	□	□	□	□		□	
황도현전투	√		△	△	△	△	△	△	□	□	□	□	□	□	
황룡촌전투	√		△	△	△	△	△	△	□	□	□	□	□	□	
전주성 입성	√		△	△	△	△	△	△	□	□	□	□	□	□	
전주화약	√	√	△	△	△	△	△	△	□	□	□	□		□	*오지영, 『동학사』 내용에만 근거
집강소	√	√	△	△	△	△	△	△	□	□	□	□	□	□	
도소															
폐정 개혁	√	√	△	△	△	△	△	△	□	□	□	□	□	□	
9월 삼례 재봉기			△	△	△	△	△	△	□		□	□		□	*남북집 구도 *금성만 김개남 청주전투 언급
9월 최시형 기포			△	△	△	△	△	△			□	□		□	
공주 우금치전투	√	√	△	△	△	△	△	△	□	□	□	□	□	□	
기타 전투	√								□		□			□	

현행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고종 때의 농민항쟁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이 고부 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중학교 국사 교과서는 ‘동학의 보급’에 관해서는 1쪽 분량의 서술을 하면서도 고종대 농민항쟁에 관한 언급은 없다. 이는 집필자들이 고종대 농민항쟁⇒고부 농민항쟁⇒무장 기포로 이어지는 동학농민혁명의 큰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고종대 농민항쟁의 비중을 과소평가한 역사인식의 결과로 보인다. 그 때문에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경우 동학농민혁명 내용 서술도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반면에 현행 한국사 교과서 6종과 근·현대사 교과서 6종은 전체적인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의 틀을 동학 교조신원운동 + 고부 농민봉기⇒3월 봉기⇒집강소 폐정개혁⇒9월 봉기의 흐름체계에 따라 서술하였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교과서별로 사건 비중과 평가에 있어서 편차를 보이고 있고 서술분량도 적게는 4쪽, 많게는 8쪽이나 될 정도로 차이가 크다.

동학 교조신원운동은 1892-1893년에 걸쳐 충청도와 전라도일대에서 전개되었다. 운동의 전개 과정은 1892년 공주집회⇒삼례집회, 1893년 광화문 복합상소 ⇒ 보은·금구집회를 거치면서 계기적으로 확대 발전하였다. 문제는 1892년 공주와 삼례집회, 1893년 보은과 금구집회의 관계, 비중 정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교과서 서술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표 2>



과 같이 한국사와 근·현대사 교과서 12종 가운데 공주집회를 언급한 교과서는 50%인 6종, 삼례집회는 11종, 금구집회는 4종이며, 보은집회는 12종 모두 다루었다. 전체적으로 1892년 삼례집회와 1893년 보은집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1892년 10-11월 순차적으로 전개된 공주와 삼례집회는 집회 지도층(서인주·서병학)과 참여층 및 집회목적(포교 자유와 관리들의 침탈 반대) 등이 거의 동일하였다. 1893년 3월 보은집회와 금구집회 역시 정부에서 “보은집회와 금구취당은 聲氣가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그리고 보은집회와 금구집회가 거의 동시에 열렸지만, 실제 동학 교조신원운동의 주류는 최시형이 주도하는 보은집회였다.²⁾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은 4개의 집회를 모두 언급할 수 없다면, 처음 교조신원운동이 열린 공주집회와, 동학교단 차원에서 대대적인 전국 집회로 개최된 보은집회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고부농민봉기는 모든 교과서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특히 한국사 교과서 중 비상과 법문, 근·현대사 교과서 중앙과 천재교육 및 두산동아는 고부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1단계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검인정 국사교과서 역시 고부 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으로 보고 있으며, 금성에서 펴낸 고등학교 역사부도 역시 ‘고부관아가 있던 자리’ 사진 설명문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곳이라 하였다.

고부농민봉기는 동학농민혁명의 직접적인 前史이나, 이전 군현단위 농민항쟁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은 왕조를 상대로 한 전국성을 띤 사건으로, 군현단위의 농민항쟁과는 차원이 다르다. 고부 농민봉기는 동학농민혁명과 분리시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장 기포에서 전주성 입성에 이르는 동학농민혁명 1단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교과서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나는 무장 기포에 대한 이해 정도이다. ‘비상’에서 발간한 한국사와 ‘미래’와 ‘두산’의 근·현대사 교과서는 무장 기포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두산의 경우 고부 백산대회도 서술하지 않았다. 이들 교과서는 고부 농민봉기가 바로 동학농민혁명으로 이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고부 봉기⇒무장 기포⇒고부 집결로 이어지는 동학농민혁명의 단계별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다. 무장 기포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점으로 증명된 사건인 만큼,³⁾ 교과서에 반드시 수록되어야만 한다.

두 번째로 고부 백산대회에 대한 언급이다. <표 2>과 같이 대부분의 교과서는 백산에 집결한

1) 『日省錄』, 고종 30년 4월 5일.

2) 1892-1893년 동학 교조신원운동에 관해서는 배항섭, 『朝鮮後期 民衆運動과 東學農民戰爭의 動發』(경인문화사, 2002), 127-231쪽 및 박맹수, 『동학의 남·북집 대립설에 대한 재검토』 『개벽의 꿈』, 모시는사람들, 2011), 329-339쪽 참조.

3) 전봉준이 고부농민봉기를 전국적인 항쟁으로 확대 발전시켜 결국 3월 20일 무장에서 기포한 일련의 과정은 배항섭, 위 책, 274-283쪽 참조.



동학농민군이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추대하고 4대강령을 발표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하고 전력을 강화한 것으로 서술하였다. 이는 전적으로 오지영의 『동학사』에 기초를 둔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오지영의 『동학사』 서술내용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백산대회 개최 여부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 실제 동학농민군이 고부에 집결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전력을 강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오지영의 『동학사』와 같은 백산대회 개최여부는 1차 사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 만큼 앞으로 백산대회를 역사 사실로 서술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

1894년 5월부터 8월에 이르는 소위 집강소기에 대한 서술은 모든 교과서가 오지영의 『동학사』 내용을 따르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연구는 오지영의 『동학사』와 같은 통설이 이미 비판되었을 뿐 아니라, 집강소보다 도소를 더 주목하고 있다.⁴⁾ 도소에 관한 언급은 법문사에서 발간한 근·004현대사 교과서가 유일할 뿐이다.

1894년 9월 이후 2차 동학농민혁명기에 관한 서술방식은 모든 교과서가 전봉준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교과서별로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나는 1894년 9월 18일 동학교단의 재기포와 전봉준부대와의 연합을 다루는 시가지 비중에 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근·현대사 금성 교과서는 동학교단의 움직임에 거의 다루지 않은 반면, 두산은 남·북접 연합이란 관점에서 등가적으로 다루면서 전봉준의 삼례 집결과 동학교단의 청산 기포를 언급하지 않았다. 동학농민혁명의 전국성과 혁명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남·북접이라는 대립구도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⁵⁾ 전봉준이 주도하는 전라도지역의 재봉기와 동학교단의 기포를 균형있게 다루고 전국적인 봉기에 관한 언급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미래엔컬처에서 펴낸 한국사 교과서 내용은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하나는 공주 우금치전투 이후 동학농민군의 움직임에 관한 서술이다. 전봉준 중심으로 2차 동학농민혁명을 서술한 지학, 비상, 법문 한국사 교과서와 미래, 천재, 두산 근·현대사 교과서는 동학농민혁명의 끝을 전봉준이 체포된 것으로 매듭을 짓고 있다. 이는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도 마찬가지이다.

반면에 천재·미래·삼화 한국사 교과서는 전봉준 외에 손화중·김개남 등을 언급하였고, 근·현대사 금성 교과서는 유일하게 김개남의 청주성전투를 언급하였고 법문은 우금치전투 이후 지속적인 전투가 있었던 것으로만 포괄적으로 서술하였다. 9월 이후 동학농민군은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김인배, 성두한, 최시형 등이 각자의 투쟁노선과 전략에 따라 연합하거나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다. 일본군과의 전투도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12월 2일 전봉준이 체포된 이후에도 전남 장흥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전투가 전개되었다. 그런 만큼 전봉준만을 중심으로 한 서술

4) 김양식, 『근대한국 사회변동과 농민전쟁』(신서원, 1996); 조경달 지음, 박맹수 옮김, 『이단의 민중반란』(역사비평사, 2008).

5) 박맹수, 『동학의 남·북접 대립설에 대한 재검토』 『개벽의 꿈』(모시는사람들, 2011), 315-352쪽 참조.



은 동학농민혁명이 가지고 있는 전국성과 혁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

3. 교과서 서술내용 오류와 문제점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서술 분량이 소략하여 큰 사실 오류가 발견되지 않으나, 한국사 교과서는 <표 3>와 같이 5개 교과서에서 8개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무장 기포 때 김개남이 참여한 것으로 기술한 부분과 동학농민군과 정부 사이에 맺은 전주화약 조건에 관한 내용이다.

<표 3> 한국사 교과서 동학농민혁명 내용 오류

교과서	내용 오류	비고
지학	- 우리가 의를 들어....전봉준 격문(146쪽) ⇒ 전봉준 격문이 아님 - 만석보 유지비(전북 부안) (147쪽) ⇒ 전북 정읍 -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 무장으로 옮겨 ⇒ 김개남은 무장에 가지 않았음	
천재	- 농민군은 청일양군에 대한 철병 요구조건으로 화약(143쪽) ⇒ 없었음	
미래	- 농민군은 정부와 그릇된 정치를 개혁할 것을 합의하는 전주화약 ⇒ 합의 없었음 - 조선군과 일본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것이 청일전쟁의 시작(161쪽) ⇒ 서술 오류	
삼화	- 전봉준을 비롯한 손화중, 김개남 무장 봉기(170쪽) ⇒ 김개남 제외	
두산		
법문	- 전봉준은 손화중, 김개남 등과 무장 봉기(179쪽) ⇒ 김개남 제외	

반면에 근·현대사 교과서는 의외로 내용상의 오류가 많은 편이다. 근·현대사 교과서는 <표 4>과 같이 금성 4개, 미래 2개, 중앙 3개, 천재 4개, 두산 2개, 법문 1개 등 16개의 오류가 확인된다(지도 제외). 주로 오류가 발견되는 부분은 동학 교조신원운동, 무장 기포, 전주화약, 9월 재봉기 등이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4> 근·현대사 교과서 동학농민혁명 내용 오류

교과서	내용 오류	비고
금성	- 손병희 등 교단 지도자와 달리 전봉준, 서장옥 등 농민지도자(78쪽) ⇒ 손병희를 교단지도자로 볼 수 없으며 서장옥도 교단 지도자였음	- 남북접 이분법 인식



〈표 3〉 한국사 교과서 동학농민혁명 내용 오류

교과서	내용 오류	비고
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은에 모인 동학교도와 농민들도 금구집회에 영향을 받아 동학지도부에 척외양 창의와 보국안민 요구(78쪽)⇒금구집회 중심, 확대 해석 -전봉준 등은 무장으로 옮겨 손화중, 김개남과 봉기(79쪽)⇒김개남은 무장에 없었으며 고부에서 합류, 오해의 소지가 있음 -전주화약...신분제 폐지하고 조세제도를 개혁한다는 내용(80쪽)⇒신분제 폐지 내용 없음 	-남접 주도의 금구집회 중심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촉구하는 사발통문이 들려지자 고부 백산에 8천여 명 모였다(64쪽)⇒서술 오류(고부봉기와 1차 기포 혼동) -2차 봉기 때는 27개지역에서 35명의 지휘자들이 이끄는 10여만명⇒오지영의 『동학사』에만 근거를 둠 	-최근 연구성과 미반영
중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시형은 충주에 중앙기관으로 법소 설치(78쪽)⇒사실이 아님 -호남 최대의 관문인 전주성(76쪽)⇒전주성은 호남제일성 -외국군대 철병 요구와 폐정개혁 조건으로 정부와 전주화약 체결(76쪽)⇒전주화약 시 외국군대 철병 요구 없었음 	-동학농민군 남북접 구도
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부농민봉기를 시작으로 전개된 동학농민군의 봉기(90쪽)⇒고부 농민 봉기와 동학농민군 봉기는 분리 서술해야 함 -동학교도와 수천명의 농민들은 전봉준, 김개남 등의 지도하에 다시 봉기(92쪽)⇒처음 봉기 주도한 것은 김개남이 아닌, 손화중 -전주화약 이후 동학농민군은 집강소를 설치하여 폐정개혁을 단행하여 갔으나, 민씨정권은 청군을 끌어들이어(93쪽)⇒전후 사실 오류 -동학농민군이 다시 봉기(1894.9.18, 94쪽)⇒동학교단의 기포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부농민봉기 =동학농민운동 1단계 -동학농민군 남북접 구도
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학농민운동은 고부 농민봉기에서 시작(67쪽)⇒무장 기포 없음 -전주성을 점령한 시기가 동학농민운동의 절정기였다(67쪽)⇒절정기로 볼 수 없음 	-소략적으로 개관함
법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봉준...김개남과 손을 잡고 무장에서 봉기(68쪽)⇒김개남은 고부에서 합류 	-최근 연구성과 수용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오류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 1894년 3월 20일 무장 기포 전후의 사실관계이다. 이 시기 동학농민혁명은 1월 10일 고부 농민항쟁, 3월 20일 전봉준과 손화중 주도로 3,4천명의 동학농민군 무장 기포, 3월 23일 동학농민군의 고부관아 점령 순으로 전개되었다. 그럼에도 아직 무장 기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장 기포를 언급하지 않거나(미래·두산), 무장 기포시 김개남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금성·천재·법문). 김개남은 무장 기포 이후 고부에서 전봉준·손화중과 합류하여 지도부를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교과서 사이에 이해의 편차가 심하고 오류가 발견되는 부분은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철수하면서 정부쪽과 체결한 전주화약 내용이다. 금성은 신분제를 폐지하고 조세제도를 개혁하는 조건으로 전주화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있고, 중앙은 “외국군대에 대한 철병 요구와 폐정 개혁을 조건으로 정부와 전주화약을 맺고 해산”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고, 천재는 정부가 동학농민군의 개혁요구를 받아들여 전주화약을 서둘러 맺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모든 교과서가 오지영의 『동학사』 논리 대로 동학농민군 주도로 정부로부터 폐정개혁 약속을 일방적으로 받아낸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화약은 실제 그러하지 않았다. 1894년 4월 27일 전주성에 입성한 동학농민군은 정부쪽과 화약을 맺고 5월 8일 철수하였다.⁶⁾ 화약조건은 농민군이 전주성에서 철수하는 대신, 농민군이 요구한 27개조의 폐정개혁안을 중앙에 보고하여 개혁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농민군의 신변보장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화약조건은 농민군이 전주성을 철수한 이후에 곧바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 때문에 농민군 지도부는 농민군에 대한 신변보장과 폐정개혁을 거듭 요구하였고, 정부를 대표한 전라감사 김학진 역시 사태를 수습하고자 집강소안을 적극 제시하였던 것이다.⁷⁾

또한 5월 8일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서 물러난 것도 해산으로 볼 수 없으며, 사실상 철수나 다름없었다. 실제 농민군 진영에서는 5월 7일 삼례에 머물고 있는 신임 전라감사 金鶴鎭에게, 전주성을 철수하겠으니 5월 4일 제시한 27개조의 폐정개혁안을 국왕에게 아뢰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⁸⁾ 그리고 8일에는 폐정개혁안에 대한 처분을 일임하고 일단 전주성을 철수한 뒤 이에 대한 중앙으로부터의 긍정적인 조치가 있을 때 무기를 반납하겠다는 조건을 홍계훈에게 제시하였다.⁹⁾ 실제 이와 같은 동학농민군의 제안은 그대로 관철되어, 전주성을 철수한 이후에도 즉각 무기를 반납하지 않고 사태를 관망하면서 폐정개혁안 시행을 끈질기게 요구하였다.

따라서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해산은 ‘철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조건은 폐정 개혁과 신변보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모든 교과서는 최근의 연구성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오지영의 『동학사』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래서 1992년에 이미 정창렬이 지적한 바와 같이,¹⁰⁾ 전주성에서 해산한 동학농민군이 전주화약에 따라 집강소를 전라도에 설치하고 12개조의 폐정개혁안을 추진하였다는 기본틀이 근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교과서 집필자들이 1980년대에 학습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최근

6)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점령과 철수과정은 박맹수, 앞의 책, 353-389쪽 참조.

7) 김양식, 앞의 책, 115-119쪽.

8) 『隨錄』, 26-27쪽; 李復永, 『南遊隨錄』, 『東學農民戰爭史料大系』(여강, 1994)3, 210-211쪽.

9) 『兩湖電記』 『한국학논집』 19, 318쪽.

10) 鄭昌烈, 『甲午農民戰爭의 全州和約과 執綱所에 대한 研究史的 檢討』 『朴永錫教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1992 참조.

의 연구성과를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이다.

최근 동학농민혁명 연구자는 대부분 오지영의 『동학사』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집강소는 전주성에서 철수한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봉준과 전라감사 김학진이 끊임없는 협상을 통해 ‘官民相和’의 원칙하에 설치된 것이며, 그 기본성격은 원칙적으로 치안기구였다. 오히려 이 시기는 동학농민군들이 지역별로 도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을 주도하던 시기였다.¹¹⁾ 그래서 조정달은 1894년 5월부터 8월의 시기를 도소체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이다.¹²⁾ 따라서 ‘전주 화약 체결 ⇒ 집강소 설치 ⇒ 폐정개혁 12개조 추진’이라는 도식은 하루 빨리 극복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오류가 많은 부분은 동학농민군의 9월 재봉기이다. 대다수의 교과서는 전봉준의 삼례 재봉기와 동학교단의 기포를 남북접 연합 차원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천재’는 충북 청산에 있던 동학교단이 접주회의를 통해 기포령을 내린 9월 18일을 동학농민군의 재봉기일로 서술하였고, ‘미래’는 오지영의 『동학사』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여 23개 지역 35명의 지휘자들이 이끄는 10여만명의 동학농민군이 재봉기한 것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모든 교과서가 전라도 전봉준(남접)만을 중심에 놓고 서술하다 보니, 다른 지역 동학농민군의 재봉기 사실은 소홀히 다루고 있다. 순천 영호대도소 김인배는 9월 1일 수천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섬진강을 건너 하동으로 출전하였고, 전봉준은 9월 10일 삼례에 대도소를 설치하고 재봉기 준비에 들어갔다. 동학교단을 이끄는 최시형은 9월 18일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실제 각 포점에 기포령이 내려져 무장에 들어간 것은 9월말에서 10월초였다.

이로써 공주를 공격하기로 동학농민군 지도자들 사이에 항일연합전선이 구축됨에 따라, 전봉준은 10월 11일경 삼례를 출발하여 다음 날인 12일 논산에 이르렀다. 손병희는 북접농민군을 인솔해 10월 23일 충북 옥천을 지나 공주 대교에서 전투를 벌인 뒤 논산에서 전봉준부대와 합류하였다. 그 무렵 49일간 남원에 머물던 김개남부대도 10월 14일 북상길에 올랐다. 이리하여 전봉준·손병희 연합부대는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김개남은 청주성전투를 벌였다.

이와 같이 1894년 9-10월 동학농민군 재봉기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일정한 항일연합전선이 구축된 가운데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따라서 동학농민군의 9월 재봉기는 전봉준 중심의 남·북접 연합구도만을 가지고 서술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10월 16일 논산에서 구성된 전봉준과 손병희가 이끄는 부대가 연합하여 공주 우금치전투를 감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기존의 통설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논산에서 두 부대가 만난 것은 10월 23일 직후였고 우금치전투는 전봉준 외에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농민군도 적극 참여하였다.¹³⁾ 따라서 전봉준 중심의

11) 김양식, 앞의 책, 111-258쪽. 이와 같은 사실은 전남 순천에 설치되었던 영호대도소 사례를 통해 잘 알 수 있다(같은 책, 259-290쪽).

12) 조정달 지음, 박맹수 옮김, 앞의 책, 197-249쪽.

13) 신영우, 「북접농민군의 공주 우금치·연산·원평·태인전투」 『한국사연구』 154, 2011.



연합부대 구성과 우금치전투라는 기존틀에서 벗어나, 전봉준과 손병희(동학교단), 즉, 남접과 북접을 등가적으로 서술해야만 한다.

3. 학습자료 활용과 문제점

1) 사진

교과서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양한 학습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부분도 여러 학습자료가 제시되어 있는데, 주로 사진, 사료, 지도, 도표 등을 들 수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진은 교과서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중학교 국사 교과서는 4장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는 반면, 고등학교 교과서는 1장 밖에 없다. 한국사 교과서는 <표 5>와 같이 교과서별로 2-8장, 근·현대사 교과서는 0-4장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근·현대사 교과서보다 한국사 교과서가 수록된 사진이 많다. 2단계인 이른바 집강소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사진은 한국사 교과서만 삼화와 비상이 각각 1장씩 수록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이전인 동학교조신운동과 고부 농민봉기와 관련한 사진은 <표 4>에서 최제우, 최시형 사진이 각각 1개 교과서, 전봉준 고택이 2개 교과서, 만석보 유지비가 5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 만석보 유지비는 1980년대부터 조병갑의 수탈의 상징으로 종종 교과서에 수록된 사진이나, 오히려 고부관아(현 고부초등학교)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이후 사건을 서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5> 역사 교과서 속 동학농민혁명 학습자료(사진)

구분	사진	국사		근·현대사					한국사					
		중학	고등	금성	미래	중앙	천재	두산	법문	지학	천재	미래	삼화	비상
전사	최제우											△		
	최시형							√			△			
	전봉준 고택	△						√						
	만석보 유지비					√	√		△		△		△	
1단계	백산봉기 기록화	△							√			△		△
	백산 기념탑									△				
	황토현 전적지							√						
	황토현 기념탑	△				√								△
	장태			√										



구분	사진	국사		근·현대사					한국사						
		중학	고등	금성	미래	중앙	천재	두산	법문	지학	천재	미래	삼화	비상	법문
2단계	인천 상륙 일본군												△		
	군국기무처 회의													△	
3단계	우금치위령탑	△					∨						△		
	전봉준 압송 사진		△	∨		∨		∨		△	△	△	△	△	△
기타	열강 각축 풍자화						∨								
	덕진공원			∨											
	전봉준 사진											△	△		
	김개남 사진											△	△		
	손화중 사진											△	△		

동학농민혁명 1단계 사진은 <표 5>에서 14개의 교과서에 5종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 백산봉기 기록화는 백산대회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황토현 전적지는 실제 황토현 기념관 사진이고 그 위치도 현재 부정확한 실정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탑은 고부 황토현에 건립된 탑인데, 장소성으로 보아 황토현전투 승리 기념탑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장태는 장성 황룡촌전투 당시 동학농민군이 사용하였던 것이나, 총 3-4개 수록되는 사진 중에서 장태 사진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황룡촌전투 관련 사진은 현재 건립되어 있는 장성 황룡전적지 기념탑이 더 적절하다. 동학농민혁명 1단계에 들어가면 좋은 사진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을 놓고 볼 때 고창 무장 기포지, 황토현이나 황룡촌 기념탑, 전주성 풍납문 사진 등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동학농민혁명 2단계, 이른바 집강소기 관련 사진은 삼화와 비상의 한국사 교과서에 각각 1장씩 수록되어 있으나, 동학농민전쟁과 직접 연관된 사진은 아니다. 집강소기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관련 사진 한 장 정도는 반드시 삽입할 필요성이 있다.

동학농민혁명 2단계 학습자료로 삽입되면 좋은 사진으로는 전주성 선화당 사진(기록화나 옛 사진)이 가장 적절하며, 그 다음은 원평 집강소 사진이다. 선화당은 1894년 7월 6일 전라감사 김학진과 전봉준이 회담을 갖고 집강소를 전면적으로 설치·운영하여 도내 치안과 폐정 개혁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곳으로, 집강소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동학농민혁명 3단계인 9월 이후는 <표 5>와 같이 현행 역사 교과서에 우금치 위령비와 전봉준 압송 사진 두 종류가 실려 있다. 우금치 위령비(동학혁명군위령탑)는 우금치전투의 중요성 때문에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금치 위령비 사진을 삽입한 근·현대 교과서는 1곳 밖에 없다. 그 이유는 건립주체에 대한 비판적 해석 때문이나, 사실상 동학농민혁명의 최



정점을 상징하는 장소성이 있는 만큼 수록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수록된 사진은 ‘전봉준 압송 사진’으로, 14종의 역사 교과서 가운데 10종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이 사진은 9종의 중·고등학교 역사부도 가운데 6종의 역사부도에도 실려 있다. 그러나 이 사진은 전봉준이 압송되던 당시의 사진이 아니라, 1895년 2월 27일 일본인 사진사 무라카미 텐신(村上天真)이 서울 일본영사관으로부터 범무아문으로 이송되기 직전에 촬영된 전봉준 사진이다.¹⁴⁾ 사진 설명의 정확성이 필요하다.

이는 김개남 사진도 마찬가지이다. 김개남 사진은 현재 한국사 교과서 2종에 수록되어 있는데, 미래에서 펴낸 교과서만 정확히 김개남에다 ‘추정’이라고 명기하였다. 실제 김개남 사진은 부정확하며 추정 사진임이 이미 학계에서 검증되었다.

사진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학습자료로서의 자료적 가치와 상징성, 내용과의 연관성, 파급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가운데 3,4장으로 압축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1894년 3월부터 12월에 이르는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장 기포지, 전주성 선화당, 공주 우금치 위령탑, 전봉준 사진 등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기억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으로는 정읍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과 같은 상징 기념탑도 바람직하다.

2) 사료

현행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학습자료로 활용한 사료가 파랑새 민요 밖에 없다. 반면에 한국사 교과서 6종에 수록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습사료는 14개, 근·현대사 교과서 6종에는 16개의 사료가 실려 있다. 한국사와 근·현대사 교과서 12종 모두에 수록된 사료는 12개이고 8개 교과서에 수록된 사료는 사발통문과 고부 백산 격문, 농민군 4대강령이다. 다음은 전봉준 공초가 6개 교과서에서 인용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단계별 수록 사료는 전사를 이루는 1894년 이전이 7개, 1단계 5개, 2단계 2개, 3단계 1개 등으로 상대적으로 3단계 비중이 낮은 편이다. 3단계 관련 사료는 전봉준이 우금치전투 전에 충청감사에게 보낸 고시문이 유일하게 2종의 교과서에 실려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배경을 이루는 전사부분은 교과서 내용이 농민 수탈과 동학교조신원운동, 그리고 고부 농민봉기에 관한 것이므로 사료 역시 그와 관련된 것들이다. 그 중에서 미래에서 펴낸 근·현대사 교과서에 실려 있는 대접주 임명장은 비중도를 놓고 볼 때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사발통문 역시 그 내용이 실제 사실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중히 활용해야만 한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현 사발통문과 비슷한 내용의 사발통문이 돌려진 것으로 인정하나, 그 내용

14) 김문자, 「전봉준의 사진과 무라카미 텐신(村上天真)- 동학지도지를 촬영한 일본인 사진사-」 『한국사연구』 154, 2011.



모두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사발통문이 매우 중요한 역사적 내용을 담고 있으나, 학습자료로서의 활용은 주의를 요한다.

〈표 6〉 근·현대사 교과서 속 동학농민혁명 학습자료(사료)

구분	사진	계	국사		근·현대사						한국사					
			중학	고등	금성	미래	중앙	천재	두산	법문	지학	천재	미래	삼화	비상	법문
전사	백성 생활고(오하기문)	2								△		◎				
	농민 불만(비변사등록)	1										◎				
	대접주 임명장	1			√											
	동학교도의 총칭감사글	2								√		◎				
	삼례집회(천도교창건사)	1											◎			
	취어(보은집회)	2			√						◎					
	사발통문	8			√	√		√	√	√		◎	◎	◎		
1단계	고부 백산 격문	8						√		√	◎	◎	◎	◎	◎	
	농민군 4대강령(대한계년사)	8			√	√	√		√	√	◎	◎	◎			
	농민군 기율(속음청사)	1							√							
	홍계훈 관련 문서	1			√											
	청 구원병 요청(매천야록)	1						√								
2단계	폐정개혁안 12개조	12			√	√	√	√	√	√	◎	◎	◎	◎	◎	
	양반 욕주는 농민군(오하기문)	3			√						◎			◎		
3단계	동도창의소 고시문	2						√						◎		
기타	전봉준 공초	6				√	√		√			◎	◎		◎	
	전봉준 유고시 운명	1			√											
	파랑새 민요	2		√					√							
	일청전사 초고(경복궁 점령)	1										◎				
	민보군 격문(동학란기록)													◎		

동학농민혁명 1단계 학습자료로서 수록된 사료는 모두 5개 종류인데, 천재에 수록된 청 구원병 요청문서는 『매천야록』에 수록된 내용인데, 내용의 핵심은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자 위기에 놓인 정부가 청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한 내용이다. 이 자료는 민씨정권이 청국군을 끌어 들여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려 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나, 교과서 내용 전개상 다른 내용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종의 근·현대사 교과서와 6종의 한국사 교과서 모두에 인용되고 있는 고부 백산격문은 오



지영의 『동학사』에 나오는 내용이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위여부가 불확실하다. 오히려 이 자료보다는 무장 기포 창의문을 인용하는 것이 사료 가치와 진정성 면에서 더 바람직하다.

동학농민혁명 2단계 부분에서 활용된 사료는 폐정개혁안 12개조와 신분 해방을 꾀하는 농민군의 모습을 보여주는 『梧下紀聞』 기록이다. 폐정개혁안 12개조는 모든 한국사와 근·현대사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지영의 『동학사』에 수록된 폐정개혁안 12개조는 1차 사료가 아니다. 오지영이 당시의 농민군의 활동 내용을 정리한 2차 사료이다.¹⁵⁾ 그런 만큼 학습자료로서의 사료 인용 방식과 내용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동학농민혁명 3단계인 9월 이후 활용된 사료는 천재의 동도창의소 고시문이 유일하다. 이 고시문은 전봉준이 우금치전투 직전에 충청감사에게 보낸 글인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사료로 활용된 자료는 전봉준 공초(한국사 3종과 근·현대사 교과서 3종), 전봉준 유고시, 파랑새 민요 등이다. 모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봉준 유고시 ‘운명’이나 파랑새 민요 등은 동학농민혁명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 학습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한국사 및 근·현대 교과서에서 인용된 사료는 16개이나, 단편적인 사료이거나 학계에서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앞으로는 동학농민혁명의 단계별 발전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동학농민군의 활동상과 지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동학농민군의 꿈과 이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1차 사료 중심으로 엄선할 필요성이 있다.

3) 지도

지도는 사건의 전개과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선과 면을 제시하기 때문에, 학습자료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처럼 전국에 걸쳐 다양하게 전개된 사건은 지도를 통해 사건의 전개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현행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지도가 ‘열강의 대립과 청·일의 경제 침투’와 ‘19세기의 농민 봉기’ 지도 2장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19세기의 농민 봉기는 1811년 홍경래의 난, 철종·고종 때의 농민봉기 지역을 지도 위에 표시하였는데, 고종 때의 봉기지역은 20개 지역 밖에 표기되어 있지 않다. 고종대 농민항쟁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낮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집필자가 고종대 농민항쟁⇒고부 농민봉기⇒무장 기포로 시작되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계기적 역사 변동 메카니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15) 김양식, 앞의 책, 151-157쪽; 조경달, 앞의 책, 217-224쪽 참조.



이는 다른 역사교과서도 동일하다. 한국사와 근·현대사 교과서 12종에 수록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지도는 크게 5종류인데, 고종대 농민봉기 발생지도는 12종의 교과서 가운데 1종에서만 다루고 있다. 중앙만이 고종대 농민봉기 발생 지도를 보여주고 있다. 금성의 경우 1894년 이전 농민봉기 발생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동학운동 관련 지도를 수록하지 않은 점에 미루어 볼 때 동학보다는 농민항쟁에 더 무게 중심을 놓은 경향이다.

그에 반해 동학농민혁명의 前史로서 동학의 확대와 교조시원운동을 보여주는 지도는 6종의 교과서에 삽입되어 있다. 이 문제는 동학농민혁명의 전사를 동학과 농민항쟁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주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선택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서, 그것은 집필자의 역사인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현행 교과서는 전체적으로 고종대 농민항쟁이 동학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역사인식의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교과서에 따라 1,2차로 나누어 2장의 지도를 수록하거나, 한 장의 지도에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후자의 경우 지도 한 장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 한 눈에 지도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표 7〉 근·현대사 교과서 속 동학농민혁명 학습자료(지도)

구분	근·현대사						한국사					
	금성	미래	중앙	천재	두산	법문	지학	천재	미래	삼화	비상	법문
고종대 농민봉기 발생			√									
동학 확대와 교조시원운동		√	√	√	√					◎	◎	
1차 동학농민혁명	√		√	√					◎	◎	◎	
2차 동학농민혁명	√		√	√					◎	◎	◎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		√			√	√	◎	◎				◎

한국사와 근·현대사 교과서에 수록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지도 내용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고종대 농민봉기 발생지도

이 지도는 근·현대사 중앙 교과서가 유일하다(73쪽). 그렇지만 고종대의 농민봉기 지도에는 총 24개의 봉기 지역이 표기되어 있는데, 현재 확인된 농민항쟁 지역은 최소 54개에 이른다.¹⁶⁾ 고종대 농민항쟁 발생지역의 절반도 지도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도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16) 김양식, 앞의 책, 23쪽, 개항 이후 민란 발생지도 참조.



② 동학 확대와 교조신원운동 지도

이 지도는 한국사 교과서 2종, 근·현대사 교과서 4종에 실려 있다. ‘동학 확대와 교조신원운동’ 지도에 들어가는 내용은 대부분 1860년대와 70년대 동학 포교지역, 1892년 공주집회와 삼례집회, 1893년 광화문 복합상소와 금구 및 보은집회 등이다. 문제는 어느 것을 지도에 표기할 것인지, 지도마다 편차가 심하다. 삼화와 비상에서 펴낸 한국사 교과서는 삼례와 보은집회 외에 금구집회를 표기하였다. 이는 14종의 교과서 중에서 유일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92년 공주집회와 1893년 보은집회는 동학교조신원운동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므로 반드시 삽입할 필요성이 있다.

③ 1차 동학농민혁명 지도

이 지도는 한국사 교과서 3종, 근·현대사 교과서 3종에 실려 있다. 이들 교과서에 수록된 지도 내용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라도지역을 남접지역(전봉준·김개남), 충청도와 경기도 일부를 북접지역(최시형·손병희)으로 설정하여 처음부터 남·북접이 대립한 듯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한국사 비상·근·현대사 중앙·천재). 남·북접은 원래 동학교단 내부에 대립적인 조직으로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되면서 투쟁노선과 지향점에 따라 나뉘어진 것이다.¹⁷⁾ 북접, 즉 동학교단의 관할지역 역시 충청도와 경기도 외에 전국에 걸쳐 있었다.

둘째, 문제점은 지도 위에 고부 농민봉기만 표기하여, 고부 농민봉기가 제1차 봉기의 시작으로 오인할 수 있다. 이는 지학·미래·비상·법문에서 펴낸 한국사 교과서와 금성·두산·중앙·천재에서 펴낸 근·현대사 교과서, 금성에서 펴낸 고등학교 역사부도 가 동일하다. 천재에서 펴낸 한국사 교과서는 백산집회(1894.3.25)만을 표기하였는데,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 오지영이 말한 백산대회의 존재는 다른 1차사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천재교육에서 펴낸 고등학교 개정판 역사부도 역시 고부봉기만을 표기하였을 뿐 아니라, 고부에서 시작한 동학농민군이 1894년 3월 25일 백산대회에서 호남창의소를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3월 20일 무장 기포로 시작된 만큼 교과서든 역사부도든 명기해야만 한다.

셋째, 문제점은 중앙에서 펴낸 근·현대사 교과서의 경우 청·일의 개전지로 풍도가 표기되어 있는데, 풍도해전은 1894년 6월 25일 발발하였기 때문에 시간의 전개상 굳이 이 지도에 표시할 필요성이 없다. 지도는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명료하게 그럴 필요성이 있으며, 불필요한 기호와 어휘는 삼가해야만 한다.

17) 박맹수, 앞의 책, 315-352쪽 참조.

넷째, 문제점은 미래와 삼화에서 펴낸 한국사 교과서의 제1차 농민봉기 지도는 농민군 이동을 표기하면서 함평에서 나주·장성으로 이동한 것처럼 되어 있다. 비상에서 펴낸 한국사 교과서는 농민군이 함평⇒나주⇒장성으로 진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농민군은 나주로 이동하는 척 하면서 장성으로 진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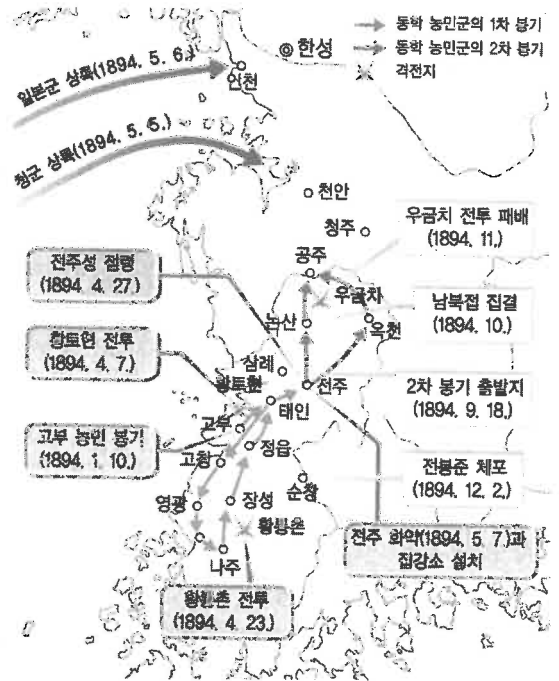
다섯째, 전주화약 체결일이 대부분의 역사교과서와 역사부도가 5월 8일로 표기하였으나, 일부 교과서와 역사부도의 경우 5월 7일로 되어 있다(지학사 한국사, 교학사 역사부도 등). 실제 전주화약 체결일은 5월 7일부터 8일 오전 사이이나, 구체적인 시점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봉준이 5월 8일 오전 홍계훈에게 신변 보장 등에 관한 통첩을 보낸 뒤 전주성을 철수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전주화약 체결일은 일반적으로 5월 8일로 보고 있다.

④ 2차 동학농민혁명 지도

이 지도는 한국사 교과서 3종, 근·현대사 교과서 3종에 실려 있다. 지도 내용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점은 전봉준 중심의 인식이다. 근·현대사 금성 교과서는 2차 봉기의 출발지를 삼례로만 표기하였고, 제2차 농민군 주력부대의 활동지역 범위도 전봉준 중심으로 한정하였다. 전봉준과 동학교단만이 주력부대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김개남부대의 청주성전투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범위를 확대해야만 한다(현 지도 청주 누락). 그렇다면 제2차 농민군의 진로를 나타내는 화살표도 다시 그려져야 한다. 현 지도에는 전봉준과 손병희부대의 움직임만 보여주고 있다.

둘째, 문제점은 삼례에 집결한 남접농민군의 논산 출발일이다. 미래에서 펴낸 한국사 교과서와 금성과 미래에서 펴낸 근·현대사 교과서는 2차 봉기 출발지로 삼례라 하면서 출발일을 9월 18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전봉준은 9월 10일경 삼례에 대도소를 설치하고 재기병 준비에 들어갔으며, 9월 18일경 재기병을 권유하는 통문을 각지에 보냈으나, 9월 18일에 맞추어 삼례에 집결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삼례에 집결한 남접농민군이 논산으로 출발한 것은 10월 11일경이었다.



(지도 1) 동학농민혁명지도(한국사,지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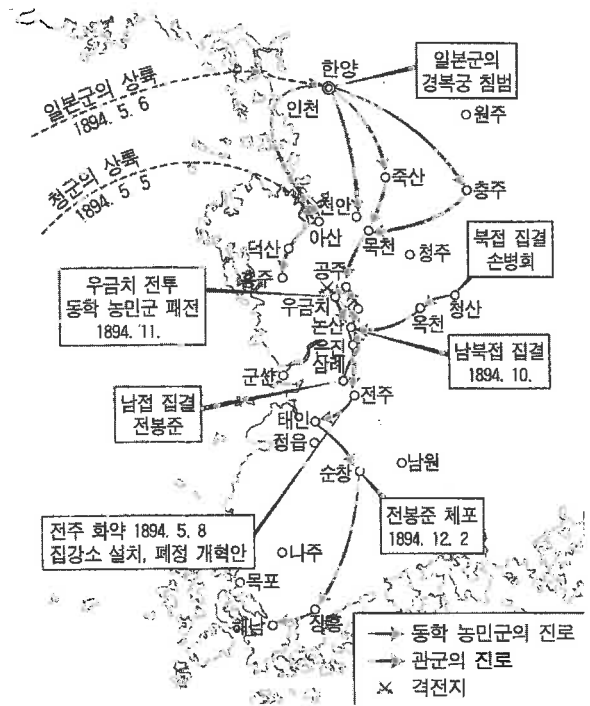
셋째, 문제점은 전봉준부대의 행군로가 삼례에서 논산과 옥천 두 방향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이다(금성·미래·법문 근·현대사). 교학사와 삼화출판사에서 펴낸 고등학교 역사부도 역시 논산에서 옥천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다. 심지어 한국사 지학 교과서는 전주⇒옥천⇒공주로 표기하였다. 전봉준부대는 삼례에서 논산⇒공주로 진군하였다.

넷째, 문제점은 손병희가 이끄는 소위 북접농민군의 행군로이다. 많은 교과서가 북접농민군의 출발지를 청산으로 표기하고 있으나(비상 한국사, 금성·중앙·두산 근·현대사), 손병희가 이끄는 주력부대는 충주 황산이 1차 집결지였고 보은 장내리가 2차 집결지였다. 손병희는 보은 장내리에서 북접농민군을 정비하고 전력을 강화한 뒤 보은⇒옥천⇒논산(공주 대교를 거쳐 논산 서 전봉준부대와 합류)으로 이동하였다. 따라서 북접농민군의 출발지는 청산이 아닌, 보은으로 표기하는 것이 합당하다.

다섯째, 문제점은 주요 전투지 선정이다. 근·현대사 금성 교과서는 우금치와 대둔산 2곳을 표기하였는데, 대둔산 전투는 사실상 대둔산에 은신한 잔여 동학농민군을 일본군이 소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면에 두산에서 펴낸 근·현대사 교과서는 2차 봉기의 격전지로 공주·목천·보은을, 미래에서 펴낸 한국사 교과서는 공주·청주·영동·장흥·강진·해주·장성(?), 금성에서 펴낸 고등학교 역사부도 역시 공주·영동·태인·장흥·강진·해주 등을 격전지로 표기하였다. 격전지를 확대하여 2차 동학농민혁명의 전국성을 보여준 것은 바람직하나, 미래의 영동·장성 등은 주요한 격전지로 볼 수 없다.

앞으로 2차 동학농민군의 격전지는 우금치 외에 최초의 대규모 전투지였던 목천 세성산전투, 전봉준과 손병희가 이끄는 남북접연합부대의 마지막 전투지였던 태인전투, 김개남부대의 마지막 전투지였던 청주전투, 손화중부대가 여러 차례 점령을 시도했던 나주, 사실상 마지막 전투라 할 수 있는 전남 장흥 석대들전투(1894. 12. 15, 남접 최후전투), 보은 북실전투(1894. 12. 11, 북접 최후전투) 등은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밖에 2차 동학농민혁명의 전국성을 보여주기 위해 위 격전지 외에 황해 해주, 강원 홍천, 충남 홍성, 경남 진주·하동, 전남 여수 등도 격전지



(지도 2) 2차 봉기 지도(근·현대사, 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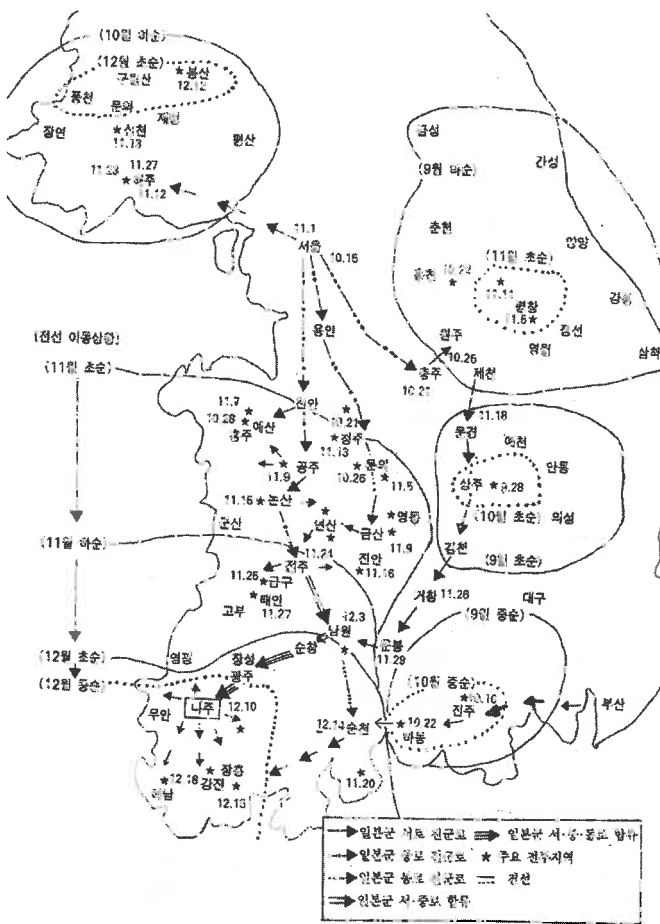
로 지도 위에 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문제점은 일본군과 관군의 진격로이다. 비상에서 피낸 한국사와 중앙·천재에서 피낸 근·현대사 교과서는 관군이 한양에서 아산, 천안, 죽산, 충주 네 방향으로 진군하여 목천을 거쳐 공주로 이동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두산 교과서는 관군의 진로를 한성⇒천안·충주⇒공주로 표기하였다. 이는 전면 수정해야 한다.

미래에서 피낸 한국사 교과서는 관군과 일본군의 이동로를 나누어 표시한 것은 바람직하나, 관군의 이동로를 한양⇒수원⇒천안으로만 표기하였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천재에서 피낸 한국사 교과서 역시 일본군 및 관군의 진로를 표기하였으나, 그 구분이 불명확하고 진로 역시 부정확하다. 이는 역사부도에 실려 있는 ‘동학농민운동’ 지도 모두가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동학농민군 토벌 주력부대는 관군이 아니라, 일본군이었다. 모든 군사 지휘권은 일본군이 가지고 있었다. 조선 정부군은 일본군의 지시를 따랐다. 따라서 2차 동학농민혁명 지도는 일본군 행군로를 중심으로 그려져야 한다.¹⁸⁾

일본군은 10월 15일(양력 11월 12일) 후비보병 1개 중대씩을 서·중·동로 세 길로 나누어 용산에서 파견되었다. 일본군 동로 중대는 용산→충주→상주→남원→나주, 중로 중대는 용인→청주→옥천→전주→남원→나주, 서로 중대는 용인→천안·홍주→공주(우금치전투)→전주→남원→나주로 행군하였다. 이두황이 이끄는 정부군(장위영군)은 서울→죽산→청주→보은



〈지도 3〉 일본군의 진군로와 주요 전투지역

18) 김양식, 앞의 책, 355쪽 지도 참조.



(장내리 초토화)→ 목천(세성산전투)→ 논산→ 전주→ 남원, 성하영이 이끄는 정부군(경리청군)은 서울→안성→청안→청주→공주(우금치 전투) 등으로 행군하면서 일본군의 지시를 받아가며 동학농민군을 토벌하였다.¹⁹⁾

기타 삽화에서 펴낸 한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동학농민군의 제2차 봉기 지도에는 전봉준이 체포된 곳을 장성으로 표기하였다.

4) 기타 학습자료

학습자료로 인터넷사이트를 소개한 교과서는 한국사 교과서 2종(비상·법문), 근·현대사 교과서 1종(금성)에 불과하다.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는 소개된 인터넷사이트가 없다.

비상에서 펴낸 한국사 교과서에 소개된 인터넷사이트는 정읍 동학농민혁명(<http://donghak.jeongeup.go.kr/>), 법문에서 펴낸 한국사 교과서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http://www.donghak.go.kr>)이다. 금성에서 펴낸 근·현대사 교과서에 소개된 인터넷사이트는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http://www.donghak.ne.kr>)인데, 이는 전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개설한 것이다. 앞으로 디지털 학습환경을 고려하여 관련 인터넷사이트를 적극 소개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나 동학농민혁명 관련 방대한 자료 D/B가 구축되어 있는 동학농민혁명 종합정보시스템(<http://www.e-donghak.go.kr>)이 소개되거나 학습자료로 활용될 가치가 있다.

인터넷사이트 외에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표나 그래프, 도형, 만화, 연표 등이 활용되어야 한다. 그래프를 활용한 교과서는 한국사 지학 교과서와 근·현대사 금성 교과서가 유일하다. 두 교과서 모두 고종조 농민항쟁의 추이를 지도가 아닌, 그래프로 보여주어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고 있다. 도형은 14개 교과서 가운데 금성에서 펴낸 근·현대사 교과서가 유일하다. 19세기 초 전라도지방의 농민계층 구성도를 도형으로 보여주고 있다.

만화나 삽화의 경우에도 아직 교과서에서 적극 활용되지 않고 있다. 미래·법문·비상에서 펴낸 한국사 교과서는 삽화를 이미지 사진으로 넣어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려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근·현대사 교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연표 역시 천재·삽화에서 펴낸 한국사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데, 근·현대사 교과서에는 없다. 금성출판사에서 펴낸 개정판 역사부도에 실려 있는 동학농민운동 연표는 무장 기포일이 누락되어 있고 집강소 설치날짜를 9월 3일, 동학교단의 기포일자를 9월 8일로 표기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와 같이 도표나 그래프, 도형, 만화, 연표 등은 학생들에게 시각적인 학습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 활용되지 않고 있다. 활용되어도 불확실하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19) 姜孝叔, 「第2次東學農民戰爭と日清戰爭」, 千葉大學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05.

4.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종의 검인정 교과서와 6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의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 및 15종의 중·고등학교 역사부도에 수록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내용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매우 많은 오류가 발견된다. 또한 학습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사진, 지도, 연표 등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틀리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 매우 많은 사료 발굴과 연구성과가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필자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1980년대 굳어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기초하여 교과서를 집필하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오지영의 『동학사』이다. 『동학사』는 1차 사료가 아니고 2차 자료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학사』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여 교과서에 수록하였다. 앞으로 『동학사』내용과 자료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호남창의소 격문, 폐정개혁안 12개조 등과 같은 자료 활용시 세심한 주의가 요한다.

현행 역사교과서와 역사부도에 서술되어 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은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

첫째, 고부 농민봉기와 무장 기포를 분리시켜 서술해야만 한다. 고부 농민봉기는 고종대 군현 단위 농민항쟁의 최정점이었고, 무장 기포는 전국단위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었다.

둘째, 고부 백산대회는 1차 사료로 검증되지 않은 만큼 사실로 기술할 수 없다. 1차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3월 20일 전봉준과 손화중이 무장에서 기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3월 23일 고부관아를 점령한 뒤 농민군을 모으고 무장을 강화하였다. 이때 김개남이 합류하여, 전봉준·손화중·김개남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편성되었다. 그 무렵 오지영의 『동학사』와 같은 백산대회가 열렸을 개연성은 있으나, 역사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셋째, 동학농민군이 제시한 전주화약 조건은 폐정 개혁과 신변 보장이었다. 이 조건은 국왕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낸 것은 아니다. 당시 정부를 대표하는 김학진과 홍계훈은 농민군이 제시한 폐정개혁안 27개조를 조정에서 아뢰어 시행하겠다는 것과 신변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정도의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집강소는 전주성에서 철수(해산이 아님)한 농민군과 전라감사 김학진 사이에 관민상화의 원칙하에 치안기구로 설립된 것이며 농민군의 폐정 개혁은 도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집강소 설치와 폐정 개혁이 포괄적으로 정리된 것이 『동학사』에 제시된 폐정개혁안 12개조이다. 따라서 폐정개혁안 12개조는 학습자료로 활용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전봉준이 삼례에 집결한 시기는 다수의 현행 역사교과서와 역사부도에 나와 있는 1894년 9월 18일이 아니다. 전봉준은 재기병을 위해 9월 10일 삼례에 대도소를 설치하고 군사력을 모은 뒤 10월 11일경 논산으로 출발하였다.

여섯째, 전봉준부대가 삼례에서 북상한 곳은 많은 역사교과서와 역사부도가 오류를 범했던 것처럼 논산과 옥천 두 방향이 아니라, 논산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손병희가 이끄는 북점농민군은 청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보은⇒옥천⇒논산으로 이동하여 전봉준부대와 합류한 뒤 우금치전투를 감행하였다.

일곱째, 제1차는 물론 제2차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은 지금까지 거의 모든 역사교과서와 역사부도가 전봉준 중심으로만 서술되었다. 이는 지양되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의 전국성·혁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전봉준 외에 김개남, 손화중, 김인배, 동학교단(최시형)의 움직임도 주목해야 하며, 전라도와 충청도 외에 경상도와 강원도·황해도도 전투공간으로 확장하여 해당 지역에서 있었던 주요 격전지 등을 언급해야만 한다.

여덟째,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기술할 때 반드시 일본군이 주도하는 동학농민군의 진압 실상을 정확히 표현해야만 한다. 현행 대다수의 역사교과서와 역사부도는 ‘관군의 진격로’만 언급하고 진격로 표시도 매우 부정확하며 오류가 심각한 수준이다.

아홉째, 현 역사교과서가 학습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사진은 18종, 사료는 16종, 지도는 5종 등이다. 그러나 단편적인 사료이거나 학계에서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거의 모든 역사교과서와 역사부도에 실려 있는 ‘전봉준 압송 사진’은 ‘전봉준 수감 사진’으로 정정되어야 하며, 김개남 사진도 추정 사진으로 한계를 지어야 한다.

앞으로는 동학농민혁명의 단계별 발전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동학농민군의 활동상과 지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동학농민군의 꿈과 이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1차 사료 중심으로 엄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 적극 활용되지 않고 있는 도표나 그래프, 도형, 만화, 연표, 인터넷사이트 등도 학생들에게 시각적인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적극 개발·활용해야만 한다.



토론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 검토」에 대한 토론문

김태웅 서울대 교수

발표자께서 작성하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간간히 교과서에 서술된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 왔지만 이처럼 본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없다는 점에서 김선생님의 발표는 앞으로 교과서의 오류를 바로잡거나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구자들이 잘 검토하지 않는 지도, 사료 등 학습 자료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7차 교육과정에 입각하여 집필한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의 저자인지라 비록 그 수명이 다해가고 있지만 따끔한 지적과 개선 방향 제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토론자의 소임을 조금이나마 하기 위해서라도 읽으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학문 연구의 성과물인 논문이나 저서와 달리 교과서가 지니는 특성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 지적 사항의 현실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교과서는 논문과도 다르지만 일반 개설서와 달리 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재로서 우리나라는 7차 교육과정부터 검정발행체제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과서를 분석할 때, 교과서가 어느 교육과정에 입각하여 집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자는 7차 교육과정과 2007·2009교육과정에 각각 입각하여 집필된 교과서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각각의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 방향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교과서의 변경(한국근현대사→한국사 또는 역사), 세계사적 배경의 확충(2007) 등으로 인해 충분한 지면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정한 분량 안에 관련 내용을 압축하여 서술하기도 합니다. 이 때 집필자의 의도와 기획에 따라 특정 내용을 선정하거나 배제하는 일들이 왕왕 벌어집니다. 따라서 발표자께서 교과서를 분석할 때, 7차교육과정과 2007·2009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교과서는 분량의 한계가 수반되므로 특정 주제를 길게 집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집필자의 사관과 의도에 따라 다소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지만 교육과정 전부를 어떠한 방식이든지 담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 연구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동학농민혁명 관련 모든 지역을 서술하는 데는 무리가 따릅니다. 물론 모든 교과서가 전봉준을 중심으로 서술했다는 비판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교육적 효과와 지면의 제약을 고려한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해당 집필자들이 동학 농민 혁명 전공자가 아니어서 무심코 오류를 저지르거나 중요 내용을 누락시킬 수 있겠지만, 관련 연구 성과를 잘 알면서도 교육과정과 한정된 지면에 맞추다보니 연구자들이 중시하는 내용들을 누락시키거나 오류를 저지르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는 데는 무엇보다 교과서의 열개라든가 시각을 잘 보여주는 교육과정문서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저자의 시각과 집필 구도가 교육과정과 맞물려 교과서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과서 서술 내용에 대한 분석은 단지 특정 단원에 국한될 게 아니라 저자의 근대사 인식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느 교과서는 밑으로부터의 개혁으로서 농민혁명의 의미를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가 하면 어느 교과서는 봉건사회를 해체시키는 정도로 낮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자의 기본 시각을 좀더 드러내어 저자의 동학농민혁명관을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넷째, 7차 교육과정 교과서는 이미 2000년 이전에 집필된 교과서로 이후 연구 성과를 담지 못하거나 오류를 시정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저자의 게으름이나 불찰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너무 신설이어서 바로바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관련 연구자들께서는 학계의 검토를 거쳐 정본을 편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연구자들은 직접적인 전공 분야가 아닌 이상은 기존의 개설서에 의존하여 서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에서 정본이 제대로 편찬되어야 제대로 된 교과서가 편찬되리라 봅니다.

다섯째, 사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 역시 지인들로부터 3월 백산대회 문제로 질문을 받습니다. 특히 근래에 들어와 오지영의 『동학사』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당연히 제기되어야 할뿐더러 『동학사』에 대한 사료 비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료비판은 진위 여부를 가린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여타 사료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료 자체를 불신하는 일은 좀더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3월 백산대회의 경우,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나 김상기 선생의 『동학과 동학란』에 대회라는 명칭은 쓰지 않지만

동학농민군이 주둔하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지영 자신이 백산대회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지영 자신이 착각하거나 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지영이 이 대회를 조작하거나 과장할 이유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의 서술 내용에 어느 정도는 신뢰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고 여타 오류를 그냥 신뢰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오류는 착각이나 실수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산대회의 경우는 착각한 나머지 서술할 정도로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여타 사료와 비교 대조하는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저자 자신의 인식, 태도 및 처지, 시대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방법도 골똘히 생각해야 하리라 봅니다.

여섯째, 교과서에 수록된 지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자께서는 지도에 표기된 전투이름을 검토하면서 중요 전투가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점 금성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금성의 경우에 대해 發明을 하자면 같은 지도를 보고 다르게 인식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교과서의 경우는 집필자의 의도를 잘 모르겠지만, 제 경우는 농민혁명의 종착점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교과서 지도는 작아 중요 전투마저도 넣을 수 없는 형편에서 농민혁명의 끝은 알려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대둔산 전투를 표기하였습니다. 물론 학생들에게 그 마지막 장렬한 모습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이는 의병전쟁의 끝을 알려주기 위해 채응언 의병장 사진을 넣고 해설하는 방식과 같았습니다. 이 점에서 역사 교과서라든가 부도에서 어떤 전투를 넣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7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집필한 까닭에 발표자의 글에 대해 지나치게 반응은 하지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 분야에 직접적인 전공자가 아닌 까닭에 집필자의 글을 오독하지 않았나 합니다. 이 점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각급 교과서들이 같은 교육과정에 입각하여 집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이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동학농민혁명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중화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연구의 발전적인 계승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 저의 투박한 토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역사교과서
서술 방향의
새로운 모색



배항섭

성균관대 교수





동학농민혁명 관련 역사교과서 서술 방향의 새로운 모색

배항섭 성균관대 교수

- I. 머리말
- II.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또 하나의 이해
- III. 동학농민군이 체현한 '니눔과 배려'의 정신
- IV. 동아시아 시각의 강조
- V. 결론

1. 머리말

2007년 교과부가 고시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한국근현대사” 과목은 “우리 민족의 가까운 과거를 정확히 압으로써 당면한 과제를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고 신장시키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과목의 목적은 “우리 민족이 근현대의 세계 속에서 발휘해온 역량을 주체적,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21세기 우리 민족사의 전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도록 하는 데”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 역사학습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단순한 역사적 지식의 습득이나 교훈을 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재를 바로 인식하고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서술 내용이 이러한 교과목의 설정 이유나 목적, 역사학습의 궁극적 목표에 충실하게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분류사적 구분(정치, 경제, 사회, 문화)과 시대별 구분(근대사회의 전개, 민족독립운동의 전개, 현대사회의 발전)을 혼합하여 설정한 <내용체계>를 보면 “동학농민운동”은 <정치> 영역의 <근대사회의 전개> 시대에 배치되어 있다. <근대사회의 전개> 시대의 단원 내용은 크게 ①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 ②개화운동과 근대적 개혁의 추진, ③구국민족운동의 전개, ④개항 이후의 경제와 사회, ⑤근대문물의 수용과 근대문화의 형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구국민족운동의 전개

에 포함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주제별 학습내용은 “동학농민운동의 전개과정을 파악하고, 특히 2차 봉기가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려는 구국민족운동의 성격을 띠었음을 이해하며, 비록 동학농민운동은 실패하였지만, 동학농민군의 잔여세력이 의병과 활빈당을 결성하여 반봉건 반침략의 투쟁을 계속하였음을 학습”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¹⁾

현행교과서의 서술 내용도 이러한 지침에 따라 서술되어 있다.²⁾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조선 사회의 부정과 부패, 열강의 침략과 농촌사회의 동요→동학농민혁명 발발→왕조 정부가 청에 원병요청→테진조약을 근거로 일본도 군대 파견→일본군의 경복궁 침범과 청일전쟁 승리/내정간섭/농민군 진압→침략행위와 내정 간섭에 맞서 일본제국주의 몰아내기 위한 반외세 투쟁→일본에 의한 패배와 희생→이후 의병운동 등 구국운동으로 연결”.

이러한 이해 자체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볼 때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³⁾ 특히 강조하고 있는 외세의 침략에 대한 투쟁 정신 역시 동학농민혁명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이 ‘반봉건 반침략’이라는 점에 치우쳐 설명되고 있으며, 일국사적 시야에 닫혀 있다.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 우리사회가 당면한 새로운 과제들, 피학습자들이 “글로벌화”한 현대사회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왕의 서술기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침략 구국운동으로서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한 바가 있지만, “글로벌화”한 현대사회의 국제관계 역시 이전에 비해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술 내용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⁴⁾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서술 내용은 그저 암기의 대상으로 박제화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한국근현대사 교육의 목적이나 역사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충실히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선 이러한 서술**

1)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와 학습의 기본방향은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도 유사하다. <특별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봉건체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제2조, “동학농민혁명참여자”를 정의하는 부분에서는 “1894년 3월에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교과부의 <한국근현대사> 서술지침 가운데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개항 이후 지배층의 농민에 대한 압제와 수탈, 일본의 경제적 침탈이 심해짐에 따라 농촌 사회가 피폐되고 농민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동학이 널리 퍼져 갔음을 이해한다.
- ②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과정을 고부민란, 1차봉기, 집강소 설치, 2차 봉기, 공주 공방전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 ③ 동학 농민군이 제시한 폐정 개혁 12조를 분석하여 동학 농민 운동이 반봉건적 사회 개혁운동, 반침략적 항일 민족운동임을 추론할 수 있다.
- ④ 동학 농민 운동이 실패한 후, 동학 농민군의 잔여세력이 을미의병 투쟁에 가담하고, 나중에는 활빈당을 결성하여 반봉건, 반침략의 민족 운동을 계속하였음을 이해한다.

3) 물론 최근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사실관계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예컨대 농민군 잔여 세력이 1896년 의병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1896년 의병의 주요 참여층이 오히려 1894년에 수성군 혹은 민보군을 조직하여 농민군 진압에 가담하였던 세력이었다는 연구가 제출된 바 있다(이상찬, 「1896년 의병운동 통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역사비평』 1998 겨울호).

4) 아직도 우리에게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민주화와 혁신이라는 과제, 과거사 공방,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 동북공정에서 드러나듯이 ‘외세의 침략’과 관련한 과제가 산재해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바 “침략에 저항하는 구국투쟁”이라는 단순논리로는 이러한 과제에 대처할 수 없다. 국제질서나 국가 간 분쟁이나 갈등 양상은 복합적 요소에 규정되는 다층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기조로는 사회적 모순이나 지배층의 부정부패가 가진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학생들이 그에 대해 자각적으로 인식하기 어렵다.

동학농민혁명이 조선사회의 부정부패, 그리고 외세의 침략행위에 반대하여 일어난 민중의 대규모 “반침략 반봉건” 투쟁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희생자를 내며 약 1년간 지속된 동학농민혁명, 그 과정에서 보여준 농민군의 생각과 행동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해주는 바가 매우 풍부하다. 그것을 “주체적, 비판적으로 이해”한다면, 현재를 바로 인식하고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경험이자 자산이 되기에 충분한 것들이 많다.

이 글에서는 “우리 민족이 근현대의 세계 속에서 발휘해온 역량을 주체적, 비판적으로 이해”하게 한다는 근현대사 교육의 목적, “과거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재를 바로 인식하고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하는 데 있다고 밝힌 역사교육의 궁극적 목표에 유념하면서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새로운 서술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또 하나의 이해

동학농민혁명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기억되어야 할 구국운동이고, 반봉건 반침략 투쟁을 벌인 농민군들의 뜻은 어어 받아야 할 숭고한 정신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사람이나 그 당시의 살아가던 민초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은 모두에게 고통을 안긴 ‘난리’ 이기도 했다.

19세기에 들어 국가기구의 수탈과 관리들의 탐학이 극심해지면서 백성들 사이에는 난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민란과 변란이 빈발하는 1860년대부터 현저해졌다. 이미 1862년의 농민항쟁 때도 사태의 추이를 관찰한 한 유생지식인은 ‘난민’ 가운데 능력 있는 지휘자만 있다면 반드시 ‘不測한 變亂’이 일어날 것이라 하여 이러한 집단적 소요가 목적의식적인 집단이나 세력에 의해 이용될 때 그것은 변란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스럽게 진단하고 있었다.⁵⁾ 黃玆은 1869년 閔晦行이 광양에서 병란을 일으키고, 1871년 李弼濟가 영해에서 병란을 일으켜 부사 李堧을 죽인 사건이 일어날 무렵의 민심에 대해 “극도로 동요되어 난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였다.⁶⁾ 또 1881년 3월에 出身 黃載顯이 올린 상소문서도 “괄도 도백으로부터 360주 수령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善治와 仁政의 소재를 모르고

5) 壬戌民擾... 若有能指揮者數人在其中 必有不測之變 而究其由 則守宰之貪도 豪強之武斷 基於塗炭 民不堪其患 雖百訴而無伸冤之處 則寧一死而得暴怨之意也 起若衆狗吠聲聚若群蟲 成雷勢(李丹石, 「時間記」 壬戌夏, 『총서』 2, 161쪽).

6) 橫痃 著, 金濬 譯, 『梅泉野錄』, 204쪽 및 209쪽.

오직 끊임없이 수탈하는 가혹한 행정으로 백성들에게서 뜯어내려고만 합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모두 도탄에 빠져 있어서 ‘저 해는 언제 없어지려나, 내 차라리 저 해와 함께 죽겠다’는 말을 예사롭게 여길” 정도라고 하였다.⁷⁾

교조신원운동이 일어나던 무렵에는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사람들 사이에 동요가 불렀는데, 그 내용에는 “난리가 왜 일어나지 않는가”, 혹은 장탄식을 하며 “무슨 좋은 운수라야 난리를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이 들어있었다.⁸⁾ 당시 한국에 거류하던 한 서양인은 “나라 안에 불평들이 노골화되고 혁명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소문이 유럽 거류민 가운데 돌고 있었다”고 하였다.⁹⁾ 吳知泳은 관리들의 수탈이 극심해진 1894년 직전의 민심에 대해 “조선 각지의 백성들은 (중략) 말끝마다 이 나라는 亡한다. 꼭 亡하여야 옳다. 어찌 얼른 亡치 않는고 하며 날마다 亡國歌를 일삼았다”고 하였다.¹⁰⁾ 이른바 “사발통문 거사계획”에도 亂亡을 구가하던 당시 민중들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右와 如히 檄文을 四方에 飛傳호니 物論이 昇沸호았다. 每日亂亡을 謳歌호던 民衆드른 處處에 모여서 말호되 「났네 났서 亂離 그 났서」 「에이 참 즐되얏지 그양 이되로 지너서야 百姓이 흔사람이느 어더 너머 잇겟느」 호며 期日이 오기문 기다리더르

‘난리’를 바라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 19세기 후반의 조선사회가 그러했다. 동학농민혁명은 인정을 외면하고 탐학을 일삼는 국가기구의 수탈과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를 “참고 또 참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일어난 “대반란”이었다. 광주 일대에서 농민군의 후손들로부터 채록한 전승되는 말들 가운데는 당시 농민들은 부패하고 부정한 세상, 자신들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세상을 “하늘과 땅을 맺들 삼아 갈아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 “난리(전쟁)나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하였다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민중이 동학농민혁명이라는 파국적 사건이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농민군들은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은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그로 인한 인정의 방기와 학정, 그리고 사회질서의 문란에서 찾았다.

오늘날 신하된 자들은 報國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한갓 벼슬자리만 탐내며 (국왕의) 총명을 가린 채 아침을 일삼아 충성스러운 선비의 간언을 妖言이라 하고 정직한 사람을 匪徒라 일컫는

7) 『승정원일기』, 고종 18년 3월 23일.

8) 『梧下記聞』, 首筆, 38쪽.

9)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뮌텔주교일기』 1, 1891년 11월 6일조

10) 『東學史』, 456쪽.



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輔國하는 인재가 없고 밖으로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관리들만 득실대어 人民들의 마음은 날로 더욱 어그러져서 들어와서는 즐겁게 살아갈 생업이 없고 나가서는 제 한 몸 간수할 방책이 없다. 虐政은 날로 더해지고 원성이 이어지고, 군신의 의리와 부자의 윤리와 상하의 분별이 드디어 무너져 남아 있는 것이 없다. 管子가 말하기를 “四維[禮義廉恥]가 베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곧 망한다”고 하였다. 바야흐로 지금의 형세는 옛날보다 더욱 심하다. 公卿으로부터 方伯守令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위태로움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남몰래 자신을 살찌우고 제 집을 윤택하게 하는 계책만 생각하여 벼슬아치를 뽑는 일을 재물이 생기는 길로 여기며, 과거 보는 장소를 온통 사고파는 장터로 만들었다. 허다한 재화와 뇌물이 국고로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개인의 창고를 채우고 있다. 국가에는 쌓인 부채가 있는데도 갚을 방도를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고 사치하며 음탕하게 노는 데 거리낌이 없어서 온 나라가 어육이 되고 만백성이 도탄에 빠졌다. 참으로 지방관들의 탐학 때문이다. 어찌 백성들이 곤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근본이 약해지면 나라가 멸망한다. 그런데도 보국안민의 방책을 생각지 않고 시골에 저택이나 짓고 오직 저 혼자서 살 길만 도모하면서 벼슬자리만 도적질하니 어찌 올바른 도리이겠는가.

인정이 붕괴되고 학정이 득세하는 현실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전주화약에 앞선 5월 4일 양호초토사 洪啓薰에게 제시한 〈所志〉에서는 “탐관이 비록 虐政을 하지만 나라에서는 듣지 못하”여 “백성들이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탐관들을 하나하나 베어 없애는 것”이 오히려 정당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왕민이기에 인정의 세례를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며, 왕민이기에 국왕=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왕을 대신하여 그 위기를 구하는 행동, 곧 탐관오리의 제거를 代執行할 수 있다는 의식이 획득되어 있었음이 보인다. 농민군의 행동 근거에는 국왕을 제외한 중앙집권세력 이하 방백수령이 이르기까지 인정을 배반한 모든 역적들을 스스로 제거한다는,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인정이 회복될 때까지 기왕의 지배질서를 일시적으로 부정해버리는 급진적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¹¹⁾

그 결과 발발한 “난리”는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가져왔다.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가난하고 억압받던 민중들의 고통과 피해는 막대했다. 농민군들은 물론이고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초들도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의 세월을 견뎌내야 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민중들의 염원은 1894년 한 해 동안 한반도의 거의 전역에서 불타올랐다. 그 과정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희생자를 내었다. 국왕이하 관리나 양반 지주들도 불안에 떨거나 죽거나 고통

11) 동학농민군의 정치의식에 대해서는 배항섭, 「19세기 지배질서의 변화와 정치문화의 변용 -仁政 願望의 향방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39, 2010 참조

을 당했다. 또한 전봉준 스스로 밝혔듯이 동학농민혁명은 “생각지도 않게 오늘 청일이 조선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실마리가 되는”, “천추의 유감”을 남기기도 했다.¹²⁾

그렇다고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키지 말아야 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회, 부패한 사회, 억압과 차별이 횡행하는 사회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고통과 피해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두자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 민족이 근현대의 세계 속에서 발휘해온 역량을 주체적, 비판적으로 이해”하게 한다는 근현대사 교육의 목적, “과거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재를 바로 인식하고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하는 데 궁극적 목표를 둔 역사교육을 온전히 체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학농민혁명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로서 “부정하고 부패한 사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과 파탄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농민군이 실천한 “나눔과 배려”는 억압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정부패한 사회를 불식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농민군들은 행동준칙에는 부정부패한 탐관오리들을 징치하는 것과 대립되는 행동으로서 “나눔과 배려”를 강조하고 있었다.

3. 동학농민군이 체현한 ‘나눔과 배려’의 정신

1) 2009 개정 교과과정의 변화 : ‘나눔과 배려’의 강조

최근 월스트리트 시위와 그 확산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회 양극화는 80:20이 아니라 99:1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전세계를 압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극단적 양극화를 향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현실 역시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 점에서 현 정부에 들어 개편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목표에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던 “나눔과 배려”를 강조한 것은 그 의도와 관계없이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주목되는 변화이다. 2007년도 시행된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흥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12) 『日清交戰錄』 12, 明治 27年 10月 16日, 『총서』 25, 234쪽.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 나.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 다.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 마.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2009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 면에서 작지만 중요한 변화가 있다.

-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2009년에는 2007년의 다)항이 삭제되었고, 다)항에서는 2007년의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 에서는 “우리”가 빠지는 한편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들어갔다. 라)항에서는 “민주시민 의식”이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 바뀌었고, “배려와 나눔의 정신”이 들어갔다. 이 가운데 다)항에서 “다원적 가치”를 강조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 급격히 늘어난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¹³⁾ “배려와 나눔”과 관련하여 추구해야 할 인간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당당하게 누림과 동시에 지구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우리나라가 점차 발전하여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게 되면, 이러한 지구촌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

13) 개정 교과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의 하나로 (지구 창의 문화 세계인)을 들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미래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 각자가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문화적 소양을 갖추고 향유하는 것이다. 우리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향유하며, 다양한 문화의 세계를 경험하며, 우리문화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는 배려와 나눔의 자세는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세계시민으로서, 또 선진국민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 “배려와 나눔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데 그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의 쇄도에 따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해 가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고조되어 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 점에서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 내용에는 새로운 서술기조가 요청된다. 우리 역사 속에서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동학농민혁명이었기 때문이다.

2) 동학교도들의 有無相資

동학농민혁명은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지배층의 억압과 수탈에 맞선 투쟁, 외세의 침략행위에 저항한 투쟁이기 전에 민중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민중들의 몸부림이었다. 민중은 지배체제나 사회구조, 지배이데올로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는 아니었지만, 지배체제나 지배이데올로기에 규정되면서도 거둬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해나가고 있었다.¹⁴⁾

동학농민혁명에서도 이러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여기서는 동학농민군의 행동을 “나눔과 배려”의 정신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860년에 창도된 동학은 교조 최제우의 처형과 이어진 가혹한 탄압 속에서도 꾸준히 포교가 이루어졌으며, 1890년 무렵부터 입도자들이 급증하였다. 그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동학교도들 간에 사회적 평등주의와 경제적 均産主義가 실천되고 있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동학이 계급과 신분의 上下貴賤, 老少를 구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또 교도들은 貧富 간에 有無相資를 실천하고 있었다. 前司諫 權鳳熙는 동학교도의 수가 날로 증가하는 것은 지방관의 탐학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임과 동시에 내 것과 네 것의 구분 없이 돈과 곡식을 나누어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⁵⁾ 실제로 동학교단에서도 가진 자와 없는 자 간에 서로 도와준다는 의미의 “有無相資”를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었다.¹⁶⁾ 신분구별을 하지 않았고 빈부 간에 유무상자하였다는 사실은 이 무렵 입도한 교도들 사이에 ‘사회적 평등주의’와 ‘경제적 균산주의’가 실현되는 세상, 곧 일종의 ‘民衆의’ 理想社會를 향한 염원이 깔려 있었음을 시사하지만, 여기서는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무엇보다 ‘나눔의 문화’가 실현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14) 배항섭, 「근대이행기의 민중의식: '근대'와 '반근대'의 너머」, 『역사문제연구』 23, 2010

15) 『聚語』, 『東學亂記錄』 上, 107쪽.

16) 『天道教會史草稿』, 435~436·444쪽; 崔承熙, 1981, 「書院(儒林)勢力的 東學排斥運動 小考」, 『韓治(卍)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참조.



3) 동학농민군의 규율과 구빈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서도 농민군들은 나문과 배려의 정신의 잘 보여주었다. 동학농민혁명 발발 이후 농민군들은 엄격한 규율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폭넓은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해 황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성이 함락되었다는 보고가 날마다 날아들기는 했지만, 사실 적은 한 번도 성을 포위·공격한 적이 없었다. 적은 가는 곳마다 관청의 건물을 파괴하고 문서와 장부를 불태우고 군기를 훔치고 관청의 재물을 약탈하였다. 수령을 잡으면 바로 죽이지 않고 잡아 가두고 치욕을 주었다. 한편으로 구실아치에 대해서는 죽이지는 않고 볼기를 치고 주리를 트는 형벌을 가하였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과 짚신을 요구할 뿐 부녀자나 재물을 약탈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이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 적의 기세가 점점 커졌다.¹⁷⁾

농민군 진영에서는 조금이라도 양민의 재산을 탐하거나 부녀자를 겁간하는 일이 있으면 당장 체포하여 衆兵이 보는 앞에서 효수하여 본보기로 삼았다.¹⁸⁾ 필요한 잡화를 살 때도 그 대금을 부족함이 없이 지불하는 등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거나 약탈하는 일이 조금도 없었다. 이 때문에 갑자기 농민군이 지나가는 곳에서는 물가가 올랐고 상인들도 모두 농민군을 환영하는 형편이었다.¹⁹⁾ 농민군의 엄정한 군기가 일반농민과 상인 등으로부터 호응을 얻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제1차 起包 당시 농민군의 행동 양태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농민들로부터 부당하게 빼앗아 간 官穀이나 부자들의 재물을 탈취하여 그것을 빈민들에게 나누어준 점이다. 농민군은 “항상 富豪者로부터 財穀을 강탈하여 貧困者를 진휼하고 혹은 약탈한 미곡을 時價에 비하여 5-6할 廉價로 방매하”였으며,²⁰⁾ 오직 官物과 가난한 사람들의 고혈을 짜서 치부한 부자들의 재물을 빼앗을 뿐 양민을 전혀 괴롭히지 않아서 義賊의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하였다.²¹⁾ 또 농민군들은 소수인에게 부를 독차지하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부자들에게서 빼앗은 쌀을 헐값으로 빈민에게 판매하거나 부자들에게도 헐값으로 쌀을 팔라고 강요하였다.²²⁾ 충청도 회덕 옥천 진잠 지역에서 일어

17) 『梧下記聞』, 『총서』 1, 54 ~ 55쪽.

18) 『萬朝報』, 明治 27年 6月 21日, 『총서』 22, 461쪽.

19) 『大阪朝日新聞』, 明治 27年 5月 26日, 『총서』 23, 9쪽 참조. 또 간신타리의 침학을 두려워하여 남은 재물은 낭비하여버리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던 농공상민들은 농민군이 일어나자 오히려 기뻐하였다는 일본 측의 기록도 있다(『內亂實記 朝鮮事件』, 『총서』 25, 191쪽).

2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p. 210.

21) 『大阪朝日新聞』, 明治 27年 5月 26日, 『총서』 23, 9쪽.

2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214-215쪽; 『東京日日新聞』, 明治 27年 8月 5日, 『총서』 22, 509쪽.



났던 농민군은 관아와 양반지주들로부터 탈취한 錢穀을 饑民窮人들에게 나누어 주었다.²³⁾ 이러한 탓에 일본 공사관 측에서는 인민들이 농민군을 義軍으로 여겨 내심 찬미하는 분위기라고 하였다.²⁴⁾

4) 농민군의 행동준칙에서 보이는 ‘나눔과 배려’ 정신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에서 농민군들의 “나눔과 배려”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은 농민군들이 영광에 주둔하던 4월 12-16일 사이에 발포한 <對敵時 約束 4項> <12條 戒軍號令>이다.²⁵⁾ 영광에 주둔해 있던 농민군은 5리마다 복병을 두었으며, 30리 거리를 두고 2천 5백 명씩 배치하였다. 농민군의 수는 날마다 불어나 하루에 늘어나는 수가 몇 천명이나 된다고 할 정도였다. 영광에 주둔할 무렵에는 농민군의 수는 무장기포 당시의 3배 이상인 1만 2,000명-1만 4,000명에 이르렀다. 또 이 무렵부터 농민군 가운데는 지배층의 탐욕과 학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가담한 자들 이외에도 불평을 품은 자, 동학이라는 이름에 현혹되어 입당한 자, 각지의 무뢰배 등이 물려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농민군 지도부는 영광에서 농민군 규율을 단속하는 두 종류의 행동준칙을 내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對敵時 約束 4項>

1. 每於對敵之時 兵不血刀而勝者 爲首功(매번 대적할 때 병사가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기는 것을 최고의 공으로 삼는다).
2. 雖不得已戰 切勿傷命 爲責(부득이 전투를 하더라도 절대로 인명을 살상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2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0쪽; 『東京日日新聞』, 明治 27年 5月 29日, 『총서』 22, 352쪽; 『大阪朝日新聞』, 明治 27年 5月 31日, 『총서』 23, 12쪽; 『甲午朝鮮內亂始末』, 『총서』 25, 137쪽.

2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215쪽.

25) 4개항의 약속과 12개조의 戒軍號令이 나온 시점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3월 29일 ~ 4월 4일 사이(鄭昌烈, 『甲午農民戰爭研究』, 延世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1, 140쪽), 혹은 3월 25일 <4個名義>를 게시하였다는 鄭喬의 『大韓季年史』를 인용하여 3월 27일경 개최된 것으로 이해한 이른바 “백산대회” 때(慎鏞廈,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1993, 154쪽)인 것으로 파악하여 왔다. 그러나 『朝鮮暴動實記』에는 靈光鎧營의 軍令狀과 戒軍令 이라는 소제목 하에 소개되어 있다(『총서』 25, 204쪽). 또 『駐韓日本公使館記錄』에는 영광으로 간 농민군의 동태를 보고하는 4월 16일자 전라감사의 전보 내용과 함께 소개되어 있고(『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9쪽), 『東匪討錄』에도 4월 21일에 4월 19일 도착한 영광군수의 보고내용에 의거하여 농민군의 영광 공략 소식을 정부에 전하는 假都事의 전보에 이어 <偵探記>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소개하고 있다(『韓國民衆運動史資料大系 -1894年의 農民戰爭編 1』, 319 ~ 320쪽). 『東京朝日新聞』에도 농민군이 한양호를 공격한 기사와 영광의 농민군에 대한 기사와 함께 실고 있고(『東京朝日新聞』, 明治 27年 6月 3日, 『총서』 22, 352쪽), 『甲午朝鮮內亂始末』에는 이러한 군호와 계문이 내려진 시점에 농민군이 무장 영광 지역에 주둔해 있다고 하였다(『총서』 25, 120쪽). 다만 『續陰晴史』에는 4월 27일 농민군의 전주성 점령 사실에 이어 소개되고 있다(『續陰晴史』 上, 311쪽).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4개항의 약속과 12개조의 戒軍號令은 농민군이 영광을 점령하는 무렵 농민군의 수가 크게 늘어나자 내부 규율을 강화할 필요에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萬報朝』에는 이 가운데 4개 항의 약속이 무장에서 정한 규율인 듯이 밝히고 있으나, 이 때 농민군이 매 20리마다 1천여명 씩 주둔해 있었다고 한 기사로 미루어 볼 때 역시 영광에서 정한 사실을 오보한 것으로 보인다(『萬報朝』, 明治 27年 6月 5日, 397-398쪽).



3. 每於行進所過之時 切勿害人物(매번 행진하여 지나갈 때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해치지 않는다)
4. 孝悌忠信人所居之村 十里內勿爲屯住(孝·悌·忠·信한 사람이 사는 촌락으로부터 10리 이내에는 주둔하지 않는다)

〈12條 戒軍號令〉

1. 降者受待(항복한 자는 받아들여 대우해준다)
2. 困者救濟(곤경에 처한 자는 구제해준다)
3. 貪者逐之(탐욕한 관리는 쫓아낸다)
4. 順者敬服(공순한 사람에게는 敬服한다)
5. 走者勿追(도망가는 자는 추격하지 않는다)
6. 飢者饋之(배고픈 자에게는 음식을 먹인다)
7. 奸猾息之(간활한 자는 그 짓을 못하게 한다)
8. 貧者賑恤(가난한 자는 진휼한다)
9. 不忠除之(불충한 자는 제거한다)
10. 逆者曉諭(거역하는 자에게는 효유한다)
11. 病者給藥(병든 자에게는 약을 준다)
12. 不孝殺之(불효한 자는 죽인다)²⁶⁾

〈약속 4항〉에는 인명을 중시하는 내용(1, 2항)이 주목되며, 〈12개조 계군호령〉에는 부정하고 탐욕한 자들에 대한 경계(3, 7, 9, 10),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한 인본주의적 배려(1, 2, 5, 6, 8, 11)가 두드러진다.

〈12개조 계군호령〉 말미에는 “위의 조항은 우리들이 舉行하는 근본이다. 만약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地獄에 가둘 것이다.”는 구절이 부기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과격한” 행동을 보였던 김개남도 1894년 8월 25일 임실에서 남원으로 들어올 때 농민군 한 명이 오수찰방의 사무실에 들어가 은가락지를 빼앗은 사실을 알고 즉시 그 농민군의 목을 베어 막대기에 매달아 형렬 앞에 세워 농민군을 경계하였다.²⁷⁾ 이러한 사실은 농민군의 규율이 엄격하게 지켜졌음을 보여준다.

26) 『續會通史』 上, 311쪽; 『東匪討錄』, 319 ~ 320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9쪽; 『朝鮮暴動實記』, 『총서』 25, 202쪽 및 204쪽; 『東京朝日新聞』, 明治 27年 6月 3日, 『총서』 22, 352쪽; 『萬朝報』, 明治 27年 6月 5日, 397-398쪽; 『大阪朝日新聞』, 明治 27年 6月 3日, 『총서』 23, 17쪽; 『內亂實記 朝鮮事件』, 『총서』 25, 191쪽. 『甲午朝鮮內亂始末』에는 동도대장의 계획 가운데 2개조가 소개되어 있다(『총서』 25, 120쪽). 또 『大阪朝日新聞』과 『萬朝報』에서는 12개조의 계군호령이 12개의 軍旗에 쓰여 있다고 하였다.

27) 『梧下記聞』, 『叢書』 1, 210쪽

실제로 동학농민혁명을 다른 나라의 유사한 민중운동과 비교할 때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인명을 함부로 살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할 길은 없지만, 10월 17일 김개남이 백성들에게 성을 탈취하라 부추겼으며, 운봉의 박봉양에게도 사람을 보내어 남원의 김개남 부대를 협공하자고 밀계를 꾸민던 남원 부사로 이용헌을 전주에서 체포하여 처단한 사실,²⁸⁾ 4월 25일 전주를 향해 진군하던 농민군들이 원평에서 국왕의 효유문을 가지고 온 이효웅과 배은환을 살해한 사실²⁹⁾ 이외에는 관리들이나 양반지주들을 직접 처단한 사례가 거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태평천국운동이나 서구 중세의 민중운동과 크게 비교되는 사실이다.

1850년 1월 11일 배상제회 군중은 홍수전의 38세 생일날 금전촌 犀牛嶺 古營盤에 모여 “삼가 만수기의를 경축하여 태평천국 원년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起義 후 홍수전은 〈軍紀五條〉를 반포하였다. 그 내용은 ①명령준수 ②남녀를 구분한다 ③군령을 추호라도 범하지 않는다 ④공정한 마음으로 화목하며 수령과의 약속을 준수한다 ⑤합심협력하여 싸움에서 퇴각하지 않는다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태평천국군도 1853년까지는 엄격한 군기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군기오조〉에도 인명 살상에 대해 경계하는 내용은 없다. 실제로 태평군은 일반 백성에 대해서는 상하게 하지 말 것을 지시했지만, 관병에 대해서는 남기지 말고 죽일 것을 지시하였다.³⁰⁾ 나아가 남경을 점령한 이후에는 내분이 일어나면서 태평천국군 상호 간에도 많은 살상행위가 일어났다. 1856년 9월 東王 楊秀清이 홍수전의 군력을 넘보다 살해당한 뒤 동왕의 친족과 부하들 수천에서 2만여명이 학살되었다.³¹⁾ 동학농민군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다.

서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381년 영국의 와트 타일러난이 일어난 초기 에식스주에서는 주민들이 왕립위원 브렌트우드(Brentwood)의 명령을 받고 주민들을 체포하려는 민소재판소의 서기 3명을 그 자리에서 처단하였으며, 이어 파견된 지방배심원 3명의 수급을 빼어 장대에 매달고 시위를 하였고, 여러 점령지역에서 플랑드르인들을 살해하였다.³²⁾ 독일농민전쟁 시기에도 농민군은 체포된 귀족과 귀족의 군대를 집단적으로 살해하기도 하였다.³³⁾ 중세 유럽 여러 곳에서 일어난 천년왕국 운동에서도 반란군은 선민의식에 입각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들이나 상대편을 상해하거나 노약자들에게까지 고통을 주며 즐거워하기도 했다.³⁴⁾ 역시 동학농민군이 인명 살해를 엄격히 경계하고 삼간 사실과 크게 대조되는 모습이다.

28) 『梧下記聞』 『叢書』1, 257쪽

29) 『兩湖招討臚錄』 『叢書』6, 61쪽

30) 趙矢元·馮興盛 주편, 중국사연구회 옮김, 『중국근대사』, 청년사, 1990, 54-57쪽

31) 조너선·스펜스, 양휘웅 옮김, 『신의 아들 : 홍수전과 태평천국』, 이산, 2006, 391-394쪽; 김성찬, 『태평천국과 영군』, 『강좌중국사V』, 1989, 117쪽

32) J. F. C. 해리스, 『영국민중사』, 소1984, 82쪽

33) 프리드리히 엥겔스, 『독일혁명사 2부작』, 소나무, 1988, 103쪽, 130쪽

34) 노만 콘 지음, 김승환 옮김, 『천년왕국운동사』, 한국신학연구소, 1993, 299-300, 337, 357-359쪽



농민군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부패하고 정의롭지 못한 관리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그들 스스로 직접 정치하기도 했다. 또한 농민군들은 <폐정개혁안 27개조> 등을 통해 조세제도나 탐관오리의 반대라는 중앙 정부 차원의 제도 개혁 등을 요구하였지만, 좀 더 낮은 차원에서 그들이 추구한 세상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보여주지는 않았다. <약속 4항>과 <12개조 계군호령>은 농민군의 행동준칙으로 삼기 위해 제시된 것이지만, 그것은 억압받고 가난한 자들의 호소이자 요구였고, 그들이 지향하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의 한 모습이기도 했다. 그것은 부정부패한 자들에 대한 처벌, 그리고 ‘나눔과 배려’의 실천을 통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질서의 회복에 다름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현행교과서에서는 두산동아의 <근현대사 교과서>(67쪽)에만 『대한계년사』와 『속음청사』를 인용하여 <약속 4항>과 <12개조 계군호령>을 <읽기자료>로 제시해 두었다. 앞으로 서술될 교과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대폭 보강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4. 동아시아 시각의 강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해두고 싶은 점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서술에 “동아시아사” 적 시각이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2009년에 개정된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의 하나로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을 들고 그 자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글로벌 창의 인재는 무엇보다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 정보통신 활용능력과 같은 역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계화 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올바로 이해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이미 세계화되어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우리나라 안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동향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각종 수출입품의 활용, 심지어 신종 플루와 같은 유행성 질병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의 모든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를 넘어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글로벌화가 가속화될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은 이러한 세계의 추세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세계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또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교육의 목표에 따르면 “한국사는 우리나라 역사가 형성·발전되어 온 과정을 세계사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역사적으로 사고하고 현대

사회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과목"이다. 또 교육의 목적은 "세계사와의 연관 속에서 한국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민족이 발휘해온 역량을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이해하여, 21세기 우리 민족사의 능동적인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학습자의 자질을 기르는 데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 문화를 토대로 둔 세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함양"하고, "주체적인 한국인으로서 세계화에 부응하여 인류 역사의 전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데 학습의 주안점을 둔다"고 하였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내용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크게 6개로 나눈 영역 가운데 시기는 흥선대원군 집권부터 일제에 의한 국권 상실까지를 다루는 4번째 영역,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운동>에 포함된다. 이 영역의 교육내용은 다시 ① 서구 열강의 접근과 조선의 대응, ② 문호 개방 및 개화사상과 위정척사 사상, ③ 근대적 개혁 추진 과정, ④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⑤ 국권 수호 운동의 전개와 사상적 배경, ⑥ 개항 이후의 경제 변화와 사회 변화, ⑦ 독도와 간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이 가운데 <③ 근대적 개혁 추진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4번째 영역의 <학습내용 성취기준>은 "서구 열강의 팽창에 따른 동아시아 삼국의 대응 과정을 바탕으로 개항 이후 갑신정변, 동학 농민 운동, 갑오개혁, 독립 협회 활동, 광무개혁 등 자주적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과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동아시아 국제 정세 변화를 바탕으로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과 이에 맞서 전개된 다양한 국권 수호 운동을 파악" 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는 <③ 근대적 개혁 추진 과정>에서 다루도록 하였다. <학업내용 성취기준>은 "동학 농민 운동이 반봉건적, 반침략적 근대 민족 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하고, 갑오개혁 때 추진된 근대적 개혁 내용을 살펴" 보는 데 두고 있다.

2007년의 교과과정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의병운동, 독립협회, 애국계몽운동 등과 함께 <구국민족운동의 전개>에 편제되어 있었으나, 여기서는 갑오개혁과 함께 <근대적 개혁 추진 과정>에서 서술하도록 한 점이 가장 큰 변화이다.³⁵⁾ 앞서 언급하였듯이 2007년 교과과정에서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서술기조가 "조선사회의 부정과 부패, 열강의 침략과 농촌사회의 동요→동학농민혁명 발발→왕조 정부가 청에 원병요청→텐진조약을 근거로 일본도 군대 파견→일본군의 경복궁 침범과 청일전쟁 승리/내정간섭/농민군 진압→침략행위와 내정 간섭에 맞서 일본제국주의 몰아내기 위한 반외세 투쟁→일본에 의한 패배와 희생→이후 의병운동 등 구국운동으로 연결"에 있었다.

35)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단순히 <근대적 개혁의 추진과정>의 하나로 파악하는 것은 동학농민혁명이 가진 풍부한 역사적 자산과 가치들을 왜소화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민중민중의식은 '근대 지향', 혹은 근대를 경험한 속에서 그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의 '반근대 지향'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매우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중의식은 엘리트들의 그것과 다른 것이었고, 서구중심적·발전론적 시각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근대'나 '반근대' 너머의 고유한 영역과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배형섭, 앞의 글, 2010 참조).



이에 입각하여 서술된 현행교과서는 일국사적 시양에 닫혀 동아시아사적 의미를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국내상황과 한국정책 등에 대해 간단하게라도 언급함으로써 동아시아적 시각 세계사적 안목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다. 일본군의 조선 진출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현행교과서에서는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하자 일본도 헨진조약을 근거로 군대를 파견하였다고만 기술하고 있다. 헨진조약이 어떤 배경에서 체결되었으며, 군대파견과 관련한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지적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에 대해 언급한 교과서는 전무하며, 갑신정변을 다루는 데서도 이에 대해 제대로 언급한 교과서가 거의 없다.

더구나 동학농민혁명은 동아시아 국제 질서만이 아니라 세계사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운동은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되어 동아시아의 정세에 큰 변동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70쪽)라고 간단히 언급한 두산동아의 『근현대사교과서』를 제외하고 이에 대해 서술한 교과서는 없다. “반봉건 반침략”을 향한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9년에 개정된 교과과정에서는 사회과 교과목에 <동아시아사>를 추가하게 되어 있지만, 그와는 별도로 한국사의 이해를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사라는 좀 더 넓은 지평에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5. 결론

동학농민혁명과 농민군의 생각과 행동은 오늘날에도 되새겨 볼 만한 중요한 가치들을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되새기고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면, 현대사회의 모순과 병폐를 넘어서는 새로운 문명적 대안에 대한 고민들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 “세상을 갈아 엮고 싶은” 원망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찬 세상, 그들에 의해 모두가 고통받는 ‘난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동학농민혁명에서 농민군들이 보여준 ‘나눔과 배려’의 정신은 “현재를 바로 인식하고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경험이자 자산”이라고 생각된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동학농민군의 꿈과 노력은 세계사적으로 근대가 가진 파괴적 측면과 한계가 강조되면서 근대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문명적 대안이 요청되는 현실, 특히 글로벌한 차원에서 진행되는 양극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갈등과 대립이 커다란 사회적 불안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더 없이 중요한 자산이므로 세계사적 차원에서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토론

「동학농민혁명 관련 역사교과서 서술 방향의 새로운 모색」에 대한 토론문

이상찬 서울대 교수

이 논문은 반봉건 반침략을 중심내용으로 하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현행 교과서의 서술내용이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국내외적 환경 변화(새로운 과제의 출현과 글로벌화)를 고려하여 서술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서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정할 내용(새로운 서술 방향의 모색)으로 나눔과 배려의 정신에 관련된 내용을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것, 동학농민혁명의 동아시아적 의미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나눔과 배려”와 관련, 나눔과 배려가 동학농민군의 ‘인정(仁政)’ 회복을 향한 중요한 계기였다는 전제아래 2009년 개정 교과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그 구체적인 내용에 “배려와 나눔의 자세”가 명기되어 있고, 그 배려와 나눔의 자세를 동학교도들의 有無相資 실천, 동학농민군의 규율과 구빈(救貧), 농민군의 행동준칙 등에서 실증적으로 찾아내고 있다.

동아시아적 의미 부각에 대해서는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을 추구하는 2009년 고등학교 교육과정, 한국사 교육의 목표, 교육의 목적 등에 비추어 기존 교과서가 두산동아의 『근현대사교과서』 이외에는 서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동학농민혁명이 동아시아 국제 질서, 세계사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서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이 갖는 의미는 교과서 서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나눔과 배려”라는 동학농민군의 지향에 대해 실증적인 논문을 작성하고 있어서 연구 차원에서도 조금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한다. 동학농민혁명의 동아시아적 의미가 1종의 교과서에만 서술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이 논문을 통해 처음 알게 되어 약간은 놀라울 뿐이다.

먼저 “나눔과 배려”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한다.

첫째, 나눔과 배려의 실천에서 동학농민군이 인명의 소중함을 존중하는 사회를 지향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 양민의 재산 약탈, 부녀자 겁간 등을 저지른 농민을 효수하여 농민군을 경계하였다는 것을 들고 있다. 농민군이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였다는 점에만 주목하고 있는데 다른 한



편으로는 농민군 생명의 소중함은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생명을 그렇게 쉽게 빼앗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점이다. 군율이 엄격했다기보다는, 근대적 행형의 원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농민군의 활동 내용은 그대로 다음 사회를 운영하는 원리가 된다. 따라서 죄와 벌이 근대적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농민군이 지향한 근대사회 모습이 한계를 갖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이러한 전근대성이 혹시 농민군의 사기 저하나 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지 않았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나눔과 배려”는 인민민주주의를 연상하게 하는데, 이번 교과과정 개정에서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함으로써 한 차례의 회오리가 몰아치기도 하였다. 현재의 이러한 경향을 고려할 때 개정 교과서에서 나눔과 배려가 강조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클지 의문이다. 또한 널리 알려져 있는 개정 교과과정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과서의 다른 부분과 형평성 역시 맞지 않는 것 같다.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환경 또한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농민군의 후예는 오늘날 당시의 지향을 얼마나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가? 현재의 집권세력과 교과서 서술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과학적이고 실증적”으로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적 의미 부각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질문하겠다. 동아시아적 의미 부각은 당연히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논문에서도 실증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아시아적 시각의 강조에는 별달리 제기할 문제가 없다. 다만 조선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차지하는 성격, 동학농민혁명이 지향한 근대 사회의 모습, 근대화의 주체세력 등에 관한 현행 교과서의 서술 내용은 충분한지, 연구성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더 보완할 내용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

일본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
서술 검토



최덕수
고려대 교수





일본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 서술 검토

최덕수 고려대 교수

- I. 머리말
- II. 일본 중학 검정교과서(2011) 기술 검토
- III. 고등학교 일본사 및 참고도서의 관련 기술 검토
- IV.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은 20세기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동아시아 국제질서 분쟁의 기원이었던 동학농민혁명이 동아시아 삼국의 교육현장에서는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특히 1982년 이래 동아시아 삼국의 교류에 장애가 되고 있는 일본의 교과서와 참고서에 동학관련 기술을 검토한 것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올해 초 일본 문부성에서 시행한 역사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간행한 교과서를 내년 교육현장에서의 채택율이 3.7%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수치는 『새로운 역사교과서』 모임이 출발한 2001년의 채택률(0.039%)과 ‘잃어버린 10년’ 사이에 약 100배 정도 확장된 것이다. 역사책 이외에 독도를 일본 영토를 명기하고, 사진까지 제시한 같은 계열에서 간행한 『공민 교과서』 또한 4% 정도 채택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¹⁾

그런데 올해 5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주최한 ‘2011년도 검정통과 일본 중학교 교과서 심층 분석’이란 학술대회에서 일본의 교과서 운동의 대표적 인사인 다와라 요시후미는 발표문의 끝

1) 『朝日新聞』 2011년 11월 2일 「つくる会」系の育鵬社 シェア拡大 文科省省表; 『동아일보』 2011년 11월 3일 「日 우의교과서 채택률 10년새 100배로」.

에서 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망한바 있다.²⁾

‘새역모’ 등은 15년 동안 그들의 운동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기술이 교과서에서 사라졌고 난징사건과 오키나와전 기술이 후퇴하는 등 ‘교과서 개선’ 이 이루어졌다. 많은 국민이 그들을 지지하게 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을 비롯한 정치가들의 전면적인 지원을 받으며, 후지·산케이그룹과 같은 경제계로부터 자금원조를 받아서 15년이나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교과서 채택률은 역사교과서에서 불과 1.7%에 지나지 않는다(물론 채택된 지역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번 채택에서 자유사판·이쿠호사판 교과서를 공립중학교에서 0% 채택률로 종결시킬 수 있다면 그들은 정치운동의 ‘도구’ 를 잃어버리게 되고 제3차 교과서 공격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와라의 위와 같은 전망은 현재 ‘새역모’ 가 만든 교과서의 채택률이 ‘불과 1.7%’ 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이를 0%로 만들 수 있다면 이들의 정치운동에 ‘종지부를 찍는 것’ 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제시한 신문기사의 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현실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좀 더 주의가 필요하다.

거시적 차원에서 볼 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동아시아 내에서 중국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19세기 후반 이후 20세기 전반 동아시아의 중심축으로 자부하던 일본이 상대적으로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 가운데 사회 내부적으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수화도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동이 보수적인 역사교과서의 채택률 증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어떠한 식으로 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경종을 울리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1세기 한중일 삼국의 변영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언급되는 역사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일본의 청소년들의 역사인식 함양의 기초가 되는 역사교과서에, 20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 형성의 출발점이었던 동학농민전쟁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가를 검토해 보려 한다.

2) 다와라 요시후미(倭義文), 「자유사판·이쿠호사판 교과서 채택을 위한 우의 세력의 동향」, 『2011년도 검정통과 일본 중학교 교과서 심층 분석』, 2011년 6월 9일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9쪽.



2.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일본 교과서 및 참고도서 기술

일본의 역사교과서 검정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1982년이였다. 1982년 이후 일본에서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되었던 해에는 매년 교과서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재연되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일본의 보수화를 대변하는 『새로운 역사교과서』 모임이 출발한 2001년 이후 역사인식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올해(2011년)도 예외없이 일본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되면서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내용 검토와 비판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4월에 일본 문부성의 검정결과 발표 이후 국내에서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사학회,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 연대 등은 교과서 내용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의 개최한바 있다.³⁾ 학술대회에서는 일차적으로 올해 검정을 통과한 『새로운 역사교과서』 모임에서 간행한 책을 전반적이고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발표에서도 『새로운 역사교과서』 모임 계열의 두 교과서 자유사(自由社)판과 이쿠호사(育鵬社)판 교과서와 중학교 교과서 가운데 채택률이 가장 높은 동경서적(東京書籍)판 교과서에서 청일전쟁 및 동학과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검토해 보려 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중학교 교과서와 비교하여 책의 면수나 내용면에서 확대된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 1종 그리고 대학입시 등에 교과서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참고서에 기술된 동학 관련 기술을 검토해 볼 것이다.

1) 중학교 교과서 내용의 비교와 검토

필자는 2010년도 자유사판 교과서의 근대사 관련된 서술 내용을 예전에 검토한 적이 있다. 이 때 청일전쟁과 관련된 부분에서 동학농민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기존의 후쇼사(扶桑社) 때와 서술이 달라져 청일전쟁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으로 처리하였고, 농민군의 봉기 원인과 진압과정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삼국간섭을 부각시킴으로써 서구 열강의 위협을 강조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⁴⁾ 그 때 자유사 교과서에 실렸던 동학농민전쟁과 관련된 내용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3) 『2011년 일본 중학교 교과서 분석 심포지엄: 역사, 공민을 중심으로』,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 연대·역사문제연구소·동아시아역사연구소·전국역사교사모임·한국역사교육학회·한국역사연구회, 2011년 5월 20일; 『2011년도 검정통과 일본 중학교 교과서 심층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학술회의, 2011년 6월 9일; 『일본 역사교과서의 분석과 역사교육의 실태: 2011년 검정통과 일본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학회, 2011년 8월 27일.

4) 최덕수, 2010, 「자유사판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근현대 역사상 분석: 전쟁 관련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학회 편, 『전환기 일본 교과서 문제의 諸相』, 景仁文化社, 202-204쪽.

1894(明治27)년 조선 남부에서 갑오농민전쟁으로 불리는 폭동이 일어났다. 농민군은 외국인과 부패한 관리를 추방하고자 하여 일시 조선반도의 일부를 제압할 정도였다. 적은 수의 병력 밖에 없던 조선왕조는 청국에 진압을 위한 출병을 요청하였지만 일본도 청국과의 약속을 구실로 군대를 파견하였고, 일청 양국군이 충돌하여 일청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장은 조선 외에 만주(중국 동북부) 남부까지 확대되었고, 일본군은 육전과 해전에서도 청을 압도하여 승리하였다. 일본이 승리한 원인으로는 최신의 병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외에 군대의 규율과 훈련이 뛰어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일본인 전체의 의식이 국민으로서 하나로 뭉쳐졌다는 점이 있다.⁵⁾

위의 내용 서술은 이번에 새로 발간된 지유사관 교과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다음에 제시한 도표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이쿠호사와 지유사의 교과서 속에서 미묘하게 강조하는 지점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둘 다 조선의 농민군 봉기 때문에 일본군이 출병하게 되어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청국에 승리하게 되었다는 점만을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청일전쟁의 주요 전장이 되었던 조선 내에서 일본군과 동학농민군이 충돌한 양상이나 전투의 중간 과정은 생략되어 있고, 청국군에 대하여 승리를 거둔 후일본 측이 조선을 독립시켰다는 내용만이 간단하게 등장할 뿐이다.

지유사 교과서의 경우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로 군사장비와 규율이 훌륭하고 국민 의식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반면에 이쿠호사 교과서의 경우 청일전쟁에서 승전한 원인까지 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승의 효과로 일본이 세계로부터 근대국가의 일원으로서 그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어느 곳에서도 일본군이 청일전쟁 기간 동안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자행했던 폭력이나 잔혹성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농민군의 봉기를 ‘폭동’이라고 적시한 점은 공통적이다. 물론 이러한 점은 채택률이 이 두 책보다 높은 동경서적의 교과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에서는 일청 양국의 대립 속에서 정치나 경제가 혼란했기 때문에 부패한 관리의 추방이나 외국인의 배척을 목표로 하여 1894년 민간신앙을 기초로 한 종교(동학)를 신앙으로 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한 농민이 조선 남부의 일대에서 봉기했습니다(갑오농민전쟁).

이를 계기로 청과 일본은 조선에 출병하고, 8월에 일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투는 우세한 군사력을 가진 일본이 승리를 거두었고, 1895(明治28)년 4월 시모노세키에서 강화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시모노세키 조약). 이 조약에서 청은 1)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2)라오동 반

5) 藤岡信勝 外, 『新編 新しい歴史教科書』, 自由社, 2009, 164쪽.



도·타이완·팥호열도를 일본에 양도하며, 3)배상금 2억 냥(당시의 일본 엔으로 약 3억 1천 만 엔)을 지불할 것 등을 인정했습니다. 타이완을 점령한 일본은 타이완총독부를 설치하여 주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식민지 지배를 추진했습니다.

위에 제시한 동경서적 교과서에서는 그나마 동학이 “민간신앙을 기초로 한 종교”이며 “조선 남부의 일대에서 봉기” 했다는 정도를 서술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봉기 이후 청일전쟁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일본이 승전하면서 타이완을 식민지로 삼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건너뛰고 있을 뿐이다.

	이쿠호샤 교과서 ⁶⁾	지유샤 교과서 ⁷⁾
배경	<p>우리나라가 일조수호조규에서 조선을 독립국으로 본 한편, 청은 조선을 스스로의 속국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의 군제개혁을 원조했지만 조선에서는 일본을 모방해 근대화를 추진하려고 한 독립당과, 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 사대당이 대립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1882(明治15)년, 개혁에 반발한 군인의 폭동(임오사변)이 발생하고, 1884(明治17)년에는 독립당의 김옥균 등이 쿠데타(갑신정변)를 일으켰습니다만 모두 청의 군대에 진압되었습니다. 특히 갑신정변에서 우리나라는 청의 군사력을 두려워해서 김옥균을 강하게 지원하지 못하고 청에 유리한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은 청의 세력 아래에 놓였고 일본의 영향력은 후퇴했습니다.</p> <p>또 같은 무렵 대국 러시아가 남하정책에 의해 태평양측에 세력을 뻗었고, 여기에 대항하려고 한 영국이 조선 남쪽 해안의 섬을 점령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조선을 둘러싼 여러 외국의 움직임의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인접한 조선이 러시아 등 구미 열강의 세력 아래에 놓인다면 자국의 안전이 위협당한다고 하는 위기감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선을 세력 아래에 둔 청에 대항하기 위해 군사력의 강화에 힘썼습니다.</p>	<p>일본은 조선의 개국 후 그 근대화를 도울 수 있도록 군대의 제도 개혁을 원조했다. 그런데 1882(明治15)년 아직 개혁이 미치지 않은 부대에 속한 일부의 조선 군인이 냉대 받았다고 불만을 품고 폭동을 일으켰다(임오사변). 중주국인 청은 여기에 편승하여 수천의 군대를 파견해 즉시 폭동을 진압하고 일본의 영향력을 약하게 했다.</p> <p>1884년에는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방해 근대화를 추진하려고 한 김옥균 등의 쿠데타가 일어났지만 이때도 청의 군대는 이것을 진압했다(갑신정변). 조선에서 청조와의 세력 싸움에서 두 번 패배한 일본은 청과의 전쟁을 예상하여 급속하게 군비를 확장하고 이윽고 거의 대등한 군사력을 기르게 되었다.</p>

6) 『新しい歴史教科書』, 育鵬社, 2011, 170-171쪽.

7) 『新しい歴史教科書』, 自由社, 2011, 182-183쪽.



<p>과정</p>	<p>1894(明治27)년, 조선에서 정부나 외국세력에 반대한 대규모 농민의 폭동이 일어났습니다(갑오농민전쟁, 동학당의 난). 청은 조선의 요구에 응해서 “속국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출병했습니다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우리나라도 청과의 조약에 근거하여 출병했기 때문에 양군은 충돌했고, 일청전쟁이 시작했습니다.</p> <p>조선 외 만주(중국 동북부) 남부 등이 전장이 되어 일본군은 바다와 육지로 청국군을 깨뜨리고 승리했습니다.</p>	<p>1894(明治27)년 조선의 남부에 갑오농민전쟁이라고 불리는 폭동이 일어났다. 농민군은 외국인과 부패한 관리를 추방하려고 하여 한때는 조선반도의 일부를 제압할 정도였다. 얼마 안 되는 병력밖에 갖지 않은 조선왕조는 청에 진압하기 위한 출병을 요청했는데, 일본도 청과의 합의에 따라 군대를 파견했기 때문에 일청 양군이 충돌하여 일청전쟁이 시작되었다.</p> <p>전쟁은 조선 외 만주(현 중국 남북부의 남부 등)로 확대, 일본은 육전에서도 해전에서도 청을 압도하고 승리했다. 일본의 승리 원인은 병기의 장비에 더해서, 군대의 규율·훈련이 뛰어났던 것에 있다. 또 배경에는 일본인 전체의 의식이 국민으로서 하나로 통합되고 있었던 것에 있다.</p>
<p>과정</p>	<p>1895(明治28)년 시모노세키 강화회의가 열려 우리나라는 청국과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약에는 조선이 청의 속국이 아니고 독립국인 것이 기록되었습니다.</p> <p>이렇게 해서 조선은 처음으로 중국으로부터 독립국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청은 요동반도나 대만 등을 일본에게 양여한 것과 함께 많은 액수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에도 동의했습니다.</p> <p>일청전쟁의 승리에 의해 우리나라는 근대국가로서 그 실력이 세계에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때까지 ‘잠자는 사자’라고 불리며 존재감을 보이고 있던 청은 약함을 노정했기 때문에 이권을 요구한 유럽 나라들은 다투어 청에서 세력을 넓혔습니다.</p>	<p>1895(明治28)년, 일청 양국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고 청은 조선의 독립을 인정함과 함께 일본 정부 재정수입의 약 3배에 해당하는 배상금 3억 엔(2억 냥)여를 지불하고 요동반도와 대만 등을 일본에 할여했다. 고대부터 이어진 동아시아의 화이질서는 붕괴하고 중국은 곧바로 구미 열강의 분할 대상이 되었다.</p> <p>하지만 일본이 간단하게 구미열강과 대등하게 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동아시아에 야심을 가진 러시아는 독일, 프랑스를 유인해 강대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요동반도를 청에 반환하라고 일본을 압박했다. 그것을 삼국간섭이라고 한다. 일본이 어쩔 수 없이 요동반도를 넘겨주었고 러시아는 3년 후에 이 땅을 조차해버렸다. 일본은 중국의 고사에 있는 ‘와신상담’을 슬로건으로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국민 전체 국력의 총살에 노력하게 되었다.</p>

2) 야마카와 출판사(山川出版社) 교과서와 참고도서의 내용 서술

다음은 고등학교 교과서로 많이 채택되고 있는 야마카와 출판사의 일본사, 세계사 교과서 속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중학교 교과서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이나 조약 명칭 등이 등장하고 있는데,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해



서는 이들이 봉기하게 된 이유, 전주화약의 체결 등이 서술되어 있다. 내용의 상세한 정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詳說 世界史研究』에서는 전봉준의 봉기, ‘축양척왜’의 슬로건,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농민군 세력의 확산, 청일 양국의 농민군 철저 진압 제안 등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그나마 낫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결국은 청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조선에 출병하여 충돌하기 전까지의 단계에서 농민군의 활동이 거론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전쟁 과정 속에서 동학농민군과 관련된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 점은 엄연한 한계점으로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詳說 日本史B』 ⁸⁾	『詳說 世界史研究』 ⁹⁾
배경	<p>텐진조약의 체결 후 조선에 대한 영향력의 확대를 지향하던 일본정부는 군사력의 증강에 힘쓰고 동시에 청국의 군사력을 배경으로 일본의 경제진출에 저항하는 조선정부와의 대립을 강화했다.</p>	<p>일조수호조규의 체결은 조선의 종주국 입장이었던 청을 자극하고, 청국측에서도 이홍장이 중심이 되어 조선에 대한 간섭정책이 추진되었다. 때마침 조선 내부에서는 복잡한 정치항쟁이 전개되었고, 여기에 얽힌 형태로 조선반도에서 일·청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우선 1882년 당초 일본에 접근하여 내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던 민비(1851~95, 국왕 고종의 비)파의 정부에 대하여 보수파의 대원군이 군대를 선동하여 쿠데타를 일으켰고, 일본공사관이 불타는 등의 일이 있었다. 조선에 대한 간섭강화의 호기로 본 청조는 대군을 파견하여 대원군을 포획하고, 민비정권을 부활시켰다. 이것을 임오군란(임오정변)이라고 하며, 이 사건 후 민비파는 급속하게 청에 접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청의 세력하에서 조선의 안전유지를 꾀하는 일파를 사대당이라고 부른다. 이에 대하여 김옥균(1851~94) 등 급진적 개혁에 의한 조선의 근대화를 지향하는 일파는 독립당이라고 불리며,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델로 삼아 일본과의 제휴를 꾀하고 있었다. 1884년 청불전쟁에서 청의 패전에 편승하여 독립당은 일본의 후원 아래에서 사대당 정권 타도의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청군의 출동에 따라 실패로 끝났다. 이것을 갑신정변(1884)이라고 한다. 사건 후 일청 간에 텐</p>

8) 石井進外, 『改訂版詳說 日本史B』, 山川出版社, 2009, 267~268쪽.

9) 木下康彦外編, 『改訂版詳說 世界史研究』, 山川出版社, 2009, 420~421쪽.

		<p>진조약(1885)이 체결되었고, 양국의 조선으로부터의 공동철병이나 비상사로 출병할 때 사전통지 등이 약속되었으나 조선에서 일본세력의 후퇴는 명확했다.</p>
<p>과정</p>	<p>1894(明治27)년, 조선에서 동학의 신도를 중심으로 감세와 배일을 요구하는 농민의 반란(甲午農民戰爭, 동학의 난)이 일어나자 청국은 조선정부의 요청을 접수하여 출병함과 동시에 텐진조약(天津條約)에 따라서 이것을 일본에 통지하였고, 일본도 여기에 대항하여 출병했다. 농민군은 이것을 보고 서둘러 조선정부와 화해했으나 일청 양국은 조선의 내정개혁을 둘러싸고 대립을 심화했고 교전상태에 들어갔다. 당초는 일본의 출병에 비판적이었던 영국도 일영통상항해조약에 조인하자 태도를 바꾸었는데, 국제정세는 일본에 유리했다. 같은 해 8월 일본은 청국에 선전을 포고하여 일청전쟁이 시작되었다.</p> <p>개전과 동시에 정당은 정부비판을 중지하고, 의회는 전쟁관계의 예산·법률안을 모두 승인했다. 전쟁국면은 군대의 훈련·규율, 신식병기의 장비 등에서 앞서는 일본측의 압도적 우세 속에서 진행되었다. 일본군은 청국군을 조선으로부터 몰아내자 다시 랴오둥반도를 점령하고, 청국의 북양함대를 황해해전에서 격파했고, 근거지인 웨이하이웨이(威海衛)를 점령했다. 전투는 일본의 승리로 끝났고, 1895(明治28)년 4월 일본의 전권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무츠 무네미츠(陸奥宗光)와 청국의 전권 이홍장(李鴻章)과의 사이에서 시모노세키 조약(下関條約)이 체결되어 강화가 성립했다.</p> <p>그 내용은 (1)청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며, (2)랴오둥(遼東) 반도와 대만·펑호(澎湖)열도를 일본에 양도하며, (3)배상금 2억 냥(당시의 일본화로 약 3억 1천만 엔)을 일본에 지불하고, (4)새로이 샤스(沙市)·충칭(重慶)·소저우(蘇州)·항저우(杭州)의 네 항구를 개방할 것 등이었다.</p>	<p>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흥종교 동학이 궁핍농민이나 몰락관인의 신앙을 모으게 되었고, 1894년 4월 동학 문하의 전봉준(1854~95)이 지방관의 폭정에 대하여 농민을 이끌고 거병하자, '축양척왜(逐洋斥倭)'(서양과 일본을 배척함)를 슬로건으로 내건 동학 밑으로 다수의 농민이 모여들었고, 남부 전라도를 중심으로 대농민반란으로 확산되어 갔다. 이것을 갑오농민전쟁(동학당의 난)이라고 부른다.</p> <p>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자 조선정부는 청에 군대의 파견을 요청하고, 청군이 조선에 출동하자 여기에 대항하여 일본도 곧바로 출병을 실시했다. 여기에 이르자 반란이 일청 양국의 조선침략을 초래할 위험성을 알아챈 조선정부와 동학당은 6월에 정전협정(전주화약)을 체결했다. 사건을 조선반도에서 세력만회의 호기로 생각한 일본정부는 청국에 대하여 갑오농민전쟁의 일청 양군에 의한 철거탄압을 제안했고, 조선정부에게는 내정간섭적 요구를 들이치는 등 사태의 분규와 확대화에 노력하고 있었다.</p> <p>일청 양군에 의한 갑오농민전쟁의 철거진압의 제안이 청조측에게 거부당하자 7월말 일본은 청군에 기습공격을 감행했고, 여기서 일청전쟁(1894~95)이 발발했다. 전투는 9월의 황해해전에서 청국해군의 주력 북양함대를 괴멸시키고, 같은 달 평양의 전투에서 청국 육군을 조선에서 퇴각시키는 등,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군비의 근대화에서 앞서고 있던 일본의 압승으로 끝났고, 다음해인 1895년 4월 일본의 전권 이토 히로부미(1841~1909, 당시 수상)·무츠 무네미츠(1844~97, 당시 외상)와 청국의 전권 이홍장과의 사이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고, 양국은 강화했다. 그 결과 (1)조선의 독립(청은 중주국의 입장을 포기), (2)일본으로의 타이완·펑호열도·랴오둥 반도의 할양, (3)배상금 2억 냥의 지불, (4)충칭·항저우·소저우·샤스 네 항구의 신규개항과 개항장에서의 기업경영 승인, (5)일방적 최혜국대우 등이 결정되었다.</p>



<p>결과</p>	<p>그러나 라오동 반도의 할양은 동아시아 진출을 지향하던 러시아를 자극했고, 러시아는 프랑스·독일 양국을 꺾어내어 이 반도의 반환을 일본에 요구했다(삼국간섭). 세 대국의 압력에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일본정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와신상담'의 표어로 대표되는 국민의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의 증대를 배경으로 군비의 확장에 힘썼다.</p> <p>라오동 반도를 반환한 일본정부는 새로이 점유한 타이완의 통치에 힘을 쏟았고, 1895(明治28)년 해군군령부장인 가바야마 스키노리(樺山資紀)를 타이완총독으로 임명했으며, 타이완인의 완강한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했다.</p>	<p>일청전쟁의 결과 일본은 조선반도로부터 청의 세력을 일소하여 대륙침략으로의 발판을 구축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극동에서의 남하를 추진하는 러시아와 세력권을 접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새로이 러시아와의 심각한 대립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그때까지 '잠자고 있던 사자'로서 그 잠재적 실력에 두려워함을 받고 있던 청조는 소국 일본에 참패한 것으로 그 약체가 폭로되었고, 이에 따라 구미 열강과 일본의 중국침략은 한층 격화되어 갔다. 또한 이 패전에 따라 양무운동은 최종적으로 좌절되었고, 더리어 패전의 충격 속에서 청조정치체제의 변혁을 부르짖는 변법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p>
-----------	--	--

4. 맺음말

2장과 3장에서 일본의 중고교 교과서와 참고서 등에 기술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사를 검토하였다. 중학교 검정교과서와 고교 교과서의 경우 새로운 역사교과서 도입 계열의 교과서를 비롯하여 모든 교과서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주어로 등장하는 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교과서에서는 청일전쟁의 배경으로, 곧 청군의 조선파병과 이에 대응하여 일본군이 파병되었다는 배경 사실만으로 기술되어 있다. 교과서가 아닌 대학 수험용 참고 도서의 경우 '갑오농민전쟁과 청일전쟁'이라는 장의 제목에서 농민전쟁과 청일전쟁을 대칭적으로 배치하고, 동학 창도의 배경과 조선 내부의 정치상황 등에 하나의 면을 할애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일전쟁을 조선내정 개혁을 둘러싼 청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으로만 기술하였을 뿐 일본군이 동학농민군을 조직적으로 살육하면서 전쟁을 끝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일본군의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 최근 관련 연구들은 청일전쟁이 일본과 청국만의 전쟁이 아니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일본군에 대하여 한반도의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수십 만의 민중이 동학농민군에 참가하면서 고작 죽창과 회승총과 같은 무기로 싸웠다. 그에 반해 신식 라이플 소총으로 무장한 훈련받은 일본군은 동학농민군은 “전원 살육하라”는 대본영의 명령을 실행하였다.

조선 전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의 희생자(사망자)수는 3만 명을 훨씬 넘는 것이 확실하고 부상



후 사망한 인원수까지 더하면 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¹⁰⁾ 참고로 청일전쟁에서 일본군 전사자는 1,418명이었다. 여기에 병사자를 포함해도 일본군의 사망자 수는 약 2만 명이었고, 청국 측 사망자 수는 타이완을 포함해 약 3만 명이었다.¹¹⁾

교과서에서는 청일전쟁의 발발 이후 주요 전장이 한반도였고, 전쟁 중에 일본군에 의하여 자행된 동학농민군에 대한 대량학살은 철저히 분리, 은폐되었던 것이다. 물론 여기서 조선 민중이 최대의 희생자였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교과서 속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 오히려 청일전쟁을 통해 일본이 서구열강으로부터 근대국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교과서를 비롯하여 동아시아 3국의 역사교과서에서 동학농민전쟁과 청일전쟁이 별개의 사건으로 기술되고 있는 것은 역사의 일면적 이해일 뿐이며 향후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10) 趙景達, 『異端の民衆反乱』, 岩波書店, 1998, 316~317쪽.

11) 이노우에 가츠오(井上勝生), 「동학농민군 섬멸포위작전과 일본정부·대본영」, 미야지마 히로시 외 지음, 『일본, 한국 병합을 말한다』, 열린책들, 2011 참고.



토론

「일본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 서술 검토」에 대한 토론문

방광석 인천대 연구교수

• 연구의 의의

동학농민혁명이 동아시아 삼국의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와 참고서의 동학 관련 기술을 검토.

일본에서 보수적인 역사교과서 채택 움직임에 경종을 울리고 한중일 삼국의 역사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

• 주요 내용

- 일본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는 “청일전쟁의 주요 전장이 되었던 조선 내에서 일본군과 동학농민군이 충돌한 양상이나 전투의 중간 과정은 생략되어 있다.”
- 일본 역사교과서는 “일본군이 청일전쟁 기간 동안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자행했던 폭력이나 잔혹성 일본군이 동학농민군을 조직적으로 살육하면서 전쟁을 끝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 “우리의 교과서를 비롯하여 동아시아 3국의 역사교과서에서 동학농민전쟁과 청일전쟁이 별개의 사건으로 기술되고” 있는 것은 극복해야 할 과제.

• 토론점

1. 조선정부가 “청에 출병을 요청했고 일본은 청과의 조약(또는 합의)에 근거하여 출병했다”는 기술의 오류에 대해 비판할 필요가 있음.

일본의 조선의 요청 없이 국내의 정치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방책으로 청국군의 출병 이전에 이미 파병을 결정. 이전부터 청과의 전쟁을 준비해온 일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군대를 조선에 파병했고 청과 충돌을 일으켜 조선에서 청 세력을 몰아내고 조선을 통제하려 하였음. 天津조약은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때 사전 통지를 규정한 것일 뿐 일본군 파병 근거가 되지 못함. ‘行文



知照'에서 일본군은 공사관과 거류민 보호를 위해 파병한다고 언급.

[참고1] 일본의 조선 파병을 둘러싼 정치상황

1892년 8월 8일	제2차 이토 내각 성립(1896년 9월 18일까지)
1893년 12월 30일	조약개정 노선 대립으로 중의원 해산
1894년 3월 1일	제3회 총선거(야당 승리)
1894년 5월 15일	제6의회 개회
1894년 5월 31일	내각불신임안 가결, 조선 청에 파병 요청
1894년 6월 2일	중의원 해산, 일본 조선파병 결정
1894년 6월 5일	참모본부 내 전시대본영 설치
1894년 6월 7일	청·일 상호 行文知照
1894년 7월 16일	영일통상항해조약 조인(조약개정)
1894년 7월 25일	일본 청국군함 공격(청일전쟁 발발)

[참고2]

“일본도 조선에서 일청 권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청국 군대에 상응하는 군대를 조선에 파견한다는 사실은 이미 (6월 2일)내각회의에서 정한 바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피동자적 인 위치에 서고 싶었으므로 청국정부가 천진조약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여 오는 지를 확실하여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밤낮으로 청국의 거동을 예시주의했던 것이다.”

[陸奥宗光, 『蹇蹇錄』 (범우사, 1993), 42쪽]

2. 청일 양국이 동시에 조선에 파병했기 때문에 (저절로) 양군의 충돌하여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기술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 일본이 적극적으로 충돌과 전쟁을 도발한 것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참고3] 전쟁 발발 과정

1894년 6월 8일	청군 아산에 상륙
1894년 6월 12일	혼성여단 인천에 도착, 13일 한성 입경.
1894년 6월 14일	조선공사 무쓰 외상에게 일본군 철수를 요구
1894년 6월 16일	무쓰 외상 청국공사에게 조선 공동내정개혁 제의 →22일 청국 거절
1894년 6월 25일	러시아공사, 7월 2일 영국공사 조정 제의



1894년 7월 10일 오토리 공사 내정개혁안을 조선정부에 제출 → 조선정부 거부
1894년 7월 23일 경복궁 쿠데타

3. 일본군과 동학농민군의 전투에 관한 최근 연구 상황.

“일본군의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 최근 관련 연구들은 청일전쟁이 일본과 청국만의 전쟁이 아니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4. 동학농민혁명이 청일전쟁과 일본의 한국침략정책에 미친 영향과 역사교과서 기술 방식.

동학농민혁명 특별기획 심포지움
역사교과서의 동학농민혁명 서술, 어떻게 할 것인가

발행일

2011년 11월 21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580-833)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TEL. 063-538-2894

www.1894.or.kr

한국근현대사학회

경북 안동시 임하면 경동로 1991 인동독립운동기념관

TEL. 054-840-6908

www.kmch.or.kr

출판 · 인쇄

흥디자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2가 916-6 2F

